

GOVP 12100020

R
355,0951
74277
2000

국방백서

2000

국 방 부



발 간 시



2000년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이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쳤던 6·25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어 남북 화해협력과 냉전구조 해체의 기틀이 될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 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산가족 상봉과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은 세계를 감동케 하였고 남북교류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도 합의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양측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이를 격퇴하고 응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군의 기본임무와 사명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잊어서는 안될 원칙은 상대의 '기도'가

아니라, 상대의 '능력'을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군사능력을 비롯한 위협의 실체는 변한 것이 없는 만큼 군사 대비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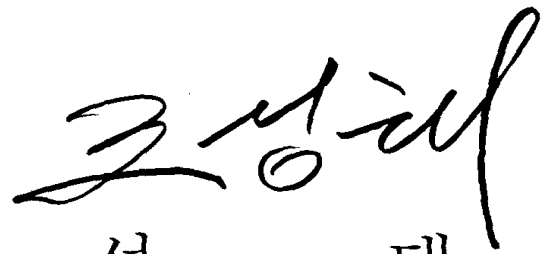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우리 군은 '전투임무 위주의 선진 정예군 육성'을 위해 국방태세 확립, '선진 정예군 건설', '국민의 사랑과 신뢰 획득'이라는 세 가지 국방 중점과업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어떠한 안보여건 하에서도 민족의 생존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미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과학화 군을 육성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주변국과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방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국방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국방백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하여온 정책들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폭넓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방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본문에는 안보정세의 변화와 도전,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등을 소상하게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안보분야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국방백서를 통하여 국방정책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한국군의 노력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0. 12. 1



조성태

국 방 부 장 관

조

성

태

제1부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제1장 세계 안보정세	17
■ 제1절 안보정세 개관	17
■ 제2절 새로운 위협과 도전	17
1. 안보개념의 다양화와 초국가적 위협 확산	17
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위협의 확산	18
3. 지역 분쟁과 갈등	18
■ 제3절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20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20
2.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	21
3.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	21
제2장 동북아 안보정세	23
■ 제1절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3
■ 제2절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24
■ 제3절 주변국의 군사정책 및 군사동향	25
1. 미국	25
2. 일본	27
3. 중국	29
4. 러시아 연방	30
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33
■ 제1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33
1. 북한의 내부정세	33
2. 북한의 대외정책	34
3. 북한의 대남정책	36
■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37
■ 제3절 북한의 군사위협	38
1.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38
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39
3.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수준	43
■ 제4절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46
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51

■ 제1절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51
■ 제2절 대북정책	52
■ 제3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초	53
1. 국방목표	53
2. 국방발전 기본개념	54
3. 국방정책기초	55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57
■ 제1절 각군별 보유전력	57
1. 육군전력	57
2. 해군전력	58
3. 공군전력	59
4. 예비전력	60
■ 제2절 동맹국의 군사력과 증원전력	61
1. 주한미군	61
2. 증원전력	62
■ 제3절 우리 군의 대비태세	63
1. 조기경보체제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64
2. 평시 군사 대비태세	64
3. 전시 군사 대비태세	65
4. 민·관·군 통합방위 작전태세	66
5. 장병 정신무장 강화	67
■ 제4절 전투임무 위주 훈련강화	68
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68
2. 각군의 주요 훈련	71
제3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74
■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75
1. 정전체제 유지와 판문점 정상급회담	75
2.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76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	77
4.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82
■ 제2절 한반도 군비통제	83
1. 남북한의 입장	83
2. 우리의 군비통제정책 기초	83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85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87
■ 제1절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	87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87

2.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발전	88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89
4. 제반 한·미 현안의 해결 추진	90
■ 제2절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교류 및 협력	91
1. 대(對) 주변국 군사외교 발전	91
2.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	94
■ 제3절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96
1. 평화유지활동 개관	96
2.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96
3.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99
■ 제4절 국제 안보협력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100
1. 지역 및 다자 안보협력대화 참여	100
2.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102

제3부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제1장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109
■ 제1절 국방중기계획	109
1. 국방중기계획의 성격	109
2. 2001~2005 국방중기계획	109
■ 제2절 2000년도 국방예산	110
1. 일반회계예산	110
2. 특별회계예산	112
■ 제3절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112
제2장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한 국방투자사업	114
■ 제1절 국방획득 정책방향	114
■ 제2절 국방획득업무 제도발전	116
1. 사업추진 과정의 공개	116
2.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사전공지	116
3. 비용정보 검증능력 강화로 고가구매·예산낭비 의혹 방지	117
4. 업체와 군간의 정보교류 양성화	117
■ 제3절 국방투자사업 추진현황	117
1. 1999년 국방투자사업 결산	117
2. 2000년 국방투자사업 계획	118
■ 제4절 국내 방위산업 기반구축	120
1.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121
2.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	122

제3장 21세기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125
■ 제1절 정보화 추진방향	125
■ 제2절 통합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통제체계 구축	126
1. 국방 통합C4체계	126
2. 합동 및 연합C4체계	126
3. 각군 전술C4체계	127
■ 제3절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체계 구축	127
1. 국방CALS 및 EC체계	127
2. 자원관리 기능별 체계	129
3. 사무자동화체계 활성화	129
■ 제4절 실시간 정보유동이 보장되는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130
1.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130
2. 국방정보통신망 보호대책	131
■ 제5절 장병 정보화교육	131
제4장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132
■ 제1절 정예 국방인력 육성 및 관리	132
1. 효율적인 인력관리	132
2. 국방 전문인력 육성	132
3. 여군인력 활용 확대	133
■ 제2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134
1.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134
2. 국방대학교 창설	134
3. 민·군 교육교류 확대	135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136
■ 제1절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	136
1. 직업군인 처우개선	136
2. 군 숙소 확보정책 개선 및 내집마련 대책	136
3.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137
■ 제2절 예비역 복지증진 및 예우향상	138
1. 직업보도 교육활동 및 취업지원 확대	138
2. 현역에 준한 복지수혜 확대	139
3. 예비역 기금확보 수익사업 추진	139
제6장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141
■ 제1절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	141
1. 인력동원	141
2. 물자동원	142

- 제2절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144
 - 1. 향토방위 작전동원144
 - 2. 전투근무지원145
- 제3절 예비군자원 관리와 교육훈련145
 - 1.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145
 - 2. 교육훈련146



제1장 국방개혁의 추진방향151

- 제1절 추진 목표 및 중점151
- 제2절 추진 경과152

제2장 국방개혁의 성과153

- 제1절 군 구조 개편153
- 제2절 목표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155
- 제3절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개선156
 - 1. 인사·교육관리 개선156
 - 2.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156
- 제4절 국방관리의 혁신157
 - 1.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체계 기반 구축157
 - 2. 군수조달의 투명성·경쟁력 확보158
 - 3. 효율적인 군수지원체제 구축158
- 제5절 군 사법제도 개선159
- 제6절 신 병영문화 창달159

제3장 향후 추진계획161

- 제1절 중·단기 개혁 지속추진161
 - 1. 군 구조 개편161
 - 2. 신 병영문화 창달161
- 제2절 국방정보화 추진162
- 제3절 국방연구개발 혁신163
- 제4절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164



제1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169
■ 제1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169
1. 올바른 병역문화 정립을 위한 제도 발전	169
2. 병무행정의 혁신 : '병무행정 Vision 21' 추진	173
■ 제2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174
1. 정보공개와 국방민원	174
2. 열린 국방과 국방홍보	175
■ 제3절 6·25전쟁과 국방	176
1. 6·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	176
2.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176
■ 제4절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181
1.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81
2. 민간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 확대	182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183
■ 제1절 환경친화적 군 관리	183
1. 군 환경관리 기반 확충	183
2. 주둔지 환경오염 방지사업	185
3.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187
4. 환경복구사업 전개	188
5. 작업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189
■ 제2절 지역사회와 군 시설	189
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189
2. 군용시설 이전 추진	190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190
■ 제3절 대민 지원 활동	191
1. 군의 대민 지원사업 및 국책사업 지원	191
2. 재해·재난 지원활동	193

부 록

부 록 1	1999 세계 분쟁 현황	197
부 록 2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198
부 록 3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199
부 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201
부 록 5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1~2000)	201
부 록 6	남북 군사력 비교	202
부 록 7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	203
부 록 8	연합 및 합동훈련 현황	204
부 록 9	정전협정	206

부 록 10	남북기본합의서	219
부 록 11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21
부 록 12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부속합의서	224
부 록 13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226
부 록 14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227
부 록 15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228
부 록 16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기구	232
부 록 17	한·미 상호방위조약	237
부 록 18	제31차 SCM 공동성명(1999.11.23, 워싱턴)	239
부 록 19	제32차 SCM 공동성명(2000. 9.21, 서울)	242
부 록 20	군사교류협력 현황(1995~2000)	244
부 록 21	아·태 지역 다자안보기구/참가국	252
부 록 22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1996.1~2000.7)	253
부 록 23	전세계 PKO 활동현황	256
부 록 24	우리 군의 PKO 참여 현황	257
부 록 25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병일지	258
부 록 26	연차별 정부재정과 방위비	260
부 록 27	2000년도 사항별 국방예산 현황	261
부 록 28	연도별 국방비 구성현황	262
부 록 29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63
부 록 30	2000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계획	264
부 록 31	방산관련 협정체결 현황	265
부 록 32	세계무기수출입 현황	266
부 록 33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269
부 록 34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270
부 록 35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현황	271
부 록 36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 현황	272
부 록 37	국방교육훈련체계	273
부 록 38	군 정보화 교육 및 추진현황	274
부 록 39	국방기구도 및 국방인원 현황	278
부 록 40	6·25전쟁 참전국 현황	279
부 록 41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280
부 록 42	6·25전쟁 당시 남북 군사력 비교	281
부 록 43	6·25전쟁 당시 남북 경제지표 비교	281
부 록 44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	282
부 록 45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282
부 록 46	국회 국방위원회 소개	283
부 록 47	국방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	286
부 록 48	군 사법제도 개선	291
부 록 49	대민관련 주요 행정규제 정비 목록	292
부 록 50	국민의 정부 국방분야 국정과제 현황	293
부 록 51	주요 국방연표	296
부 록 52	역대 국방백서 소개	305

도 표

【도표 1-1】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26
【도표 1-2】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28
【도표 1-3】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29
【도표 1-4】	러시아의 극동 지역 군사력 현황	31
【도표 1-5】	북한의 군사지휘체제	38
【도표 1-6】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 구성비	39
【도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현황	40
【도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현황	41
【도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 보유현황	42
【도표 2-1】	국방발전 목표	54
【도표 2-2】	한국의 육군 구성	57
【도표 2-3】	한국 육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57
【도표 2-4】	한국의 해군 구성	59
【도표 2-5】	한국 해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59
【도표 2-6】	한국의 공군 구성	60
【도표 2-7】	한국 공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60
【도표 2-8】	주한 미군사 조직	61
【도표 2-9】	주한미군 병력현황(인가)	61
【도표 2-10】	한국의 PKO 참여 현황	97
【도표 2-11】	상륙수부대 편성	97
【도표 2-12】	한국의 PKO 상비체제 참여규모	99
【도표 2-13】	PKO 해외교육파견 현황	99
【도표 3-1】	2001~2005 국방재원 배분	110
【도표 3-2】	2000년도 국방예산 규모	111
【도표 3-3】	2000년도 국방예산의 기능별 배분 현황	111
【도표 3-4】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 비교	113
【도표 3-5】	1999년도 국방투자사업비 용도별 현황	117
【도표 3-6】	2000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	118
【도표 3-7】	첨단무기 연구개발 단계적 도약 개념	121
【도표 3-8】	국방 통합C4I 체계도	126
【도표 3-9】	국방 CALS목표 체계도	128
【도표 3-10】	국방자원관리체계 발전계획	129
【도표 3-11】	국방정보통신망 체계도	130
【도표 3-12】	여성인력 운영계획	133
【도표 3-13】	1999년도 예비역 재취업분야 현황	138
【도표 3-14】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현황	139
【도표 3-15】	예비군 응소기준시간	144
【도표 3-16】	예비군 자원현황	146
【도표 3-17】	예비군 훈련기간 및 세부 훈련내용	147
【도표 3-18】	200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148
【도표 4-1】	계룡대 근무지원단	154

【도표 4-2】	국방대학교 창설	154
【도표 4-3】	국방정보화 추진목표	157
【도표 5-1】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169
【도표 5-2】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사유	169
【도표 5-3】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절차	170
【도표 5-4】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운영규모(2000년도)	172
【도표 5-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및 관리인원 현황(2000년도)	172
【도표 5-6】	정보공개 처리 절차	174
【도표 5-7】	민원처리현황(1999.12.31기준)	175
【도표 5-8】	관·군 환경협의회 구성체제도	184
【도표 5-9】	환경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185
【도표 5-10】	군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999년 기준)	186
【도표 5-11】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검사 실시/계획 현황	188
【도표 5-12】	군 사용 사유지 정리현황	190
【도표 5-13】	군용시설 이전현황	190
【도표 5-1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실적	191
【도표 5-15】	1999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현황	192
【도표 5-16】	1999년 대민지원 실적	194

약 어 표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SOM	ARF-Senior Officer Meeting	고위관리회의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 국가연합
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모드
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조기경보기
BCTP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사단/군단 단위 전투지휘훈련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절차개선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생물무기금지협약
C4I(SR)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전산 및 정보, (감시, 정찰)
CALS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System	지속적인 조달 및 수명주기 지원시스템
CBT	Computer Based Training	컴퓨터 보조교육
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제네바 군축회의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	연합방위증강사업
CERT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컴퓨터 긴급대응반
CFC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한·미 연합군사령부
CF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유럽재래식무기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정보화책임관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세계군인체육대회
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권한위임사항
CPAS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	지휘소 자동화 체계
CRAC	Combined Rear Area Coordinator	연합후방지역조정관
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아·태 안보협력이사회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전면핵실험금지조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협약
DPAMIS	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방조달관리정보체계
EC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DI	Electronic Data Interface	전자문서교환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O	Flexible Deterrence Option	신속억제방안
FE	Foal Eagle	독수리연습
FMCT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P	Force Module Package	전투력증강
FTX	Field Training Exercise	군단급 야외기동훈련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CCS-K	Global Command and Control System-Korea	범세계 지휘통신체계(-한국)
GITIS	Government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	정부통합정보기술관리체계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원자력기구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
IGCC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SG-CBMs	Intersessional Support Group on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신뢰구축에 관한 회기간 회의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IRBM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 미사일
KADIZ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한국방공식별구역
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파악화 전투훈련장
KDX	Korea Destroyer	한국형 구축함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한국국방연구원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원
KNTDS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
LAN	Local Area Network	지역전산통신망
MC	Military Committee	(한·미) 군사위원회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중앙방공통제소
MILES	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	다중통합레이저교전체계
MINURSO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서부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
NATO	North-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CMA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한·미) 국기통수 및 군사지휘기구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동북아협력대화
NEASED	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	동북아다자안보대화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LL	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미사일방어체계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OAU	Organization for African Unity	아프리카단결기구
OPCW	The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금지기구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PKF	Peace-Keeping Forces	평화유지군
PKO	Peace-Keeping Operations	평화유지활동
PPC	Pearson Peacekeeping Center	평화유지교육원
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의) 4개년 국방기획서
RFP	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구서
RIMPAC	Rim of the Pacific Exercise	환태평양훈련
ROKFC	ROK Funded Construction	주한미군의 비전투 군사시설 건설비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합전시증원(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연습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안보협의회의
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s	해상교통로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PF	South Pacific Forum	남태평양협의회의
SSC	Small Scale Contingency	소규모 분쟁
START-I, II, III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I, II, III	(미·러간의) 제1,2,3차 전략 무기감축협정
TACC	Theater Air Control Center	전구항공통제본부
TPFDD	Time Phased Forces Deployment Data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
TMD	Theater Missile Defense	전구미사일방어체계
TOR	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FC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권한 위임 사항)
TS	Team Spirit	팀스피리트 훈련
UFL	Ulchi Focus Lens	울지 포커스렌즈(연습)
UNCAR	United Nations Conventional Arms Register	유엔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Pakistan	인도·파키스탄 유엔 정전 감시단
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그루지아 유엔정전 감시단
UNTC	United Nations Training School Military College in Ireland	유엔교육대
UNTSO	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유엔정전감시기구
VEREX	Verification Experts Group	정부전문가회의
WAN	Wide Area Network	광역전산통신망
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바르샤바조약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내용누락

여 백

제1장 세계 안보정세

제1절 안보정세 개관

세계 안보정세는 탈냉전 후 화해 분위기 확산과 협력 증진이라는 안정지향적 측면과 지역분쟁의 증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불안정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

1989년 12월 3일 미국과 소련 양국이 '동·서 냉전 종식과 항구적 세계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후, 동구권과 제3세계권에서도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냉전기간 동안 잠재되어 있던 분쟁요소들과 새로운 분쟁요인들이 등장하여 세계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 즉, 민족, 영토, 종교 등으로 인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국제적인 군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려국가(State of Concern)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오염, 마약, 테러, 난민문제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들도 점점 증가되는 상황이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쌍무적 동맹관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기구 등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기도 하나, 세계질서를 안정시키려는 미국의 역할은 지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한 다양한 협상 및 조약의 체결, 그리고 이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해 실질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2절 새로운 위협과 도전

1. 안보개념의 다양화와 초국가적 위협 확산

탈냉전 이후의 세계는 민족·영토·종교 갈등·자원·환경문제 등으로 분쟁요인이 다양화되고, 경제·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국익 추구 및 국제경쟁력 확보가 국가생존 및 번영의 핵심요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치·군사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비군사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즉, 무역·금융·기술·정보·환경·복지·문화 등 비군사적 측면이 국가의 주요 안보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못지 않게 경제성장 후퇴 등 경제위기·환경오염·자연재난·마약·조직 범죄·컴퓨터 범죄 등 다양한 위협요소들이 개인은 물론 단체, 국가 나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적 위협요소로 확산되고 있다.

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위협의 확산

세계 각국은 미래의 전쟁이 첨단과학기술전으로 발전됨에 따라 군사과학기술력의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첨단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군사 선진국들은 미래전이 사이버전(Cyber Warfare) 및 고도의 C4ISR전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여, 자국의 첩보 수집·생산 및 전파 기능을 보호하고, 가상 적국의 이와 같은 능력을 파괴 또는 무력화할 수 있는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장거리 초정밀 타격 능력, 실시간에 전장 상황을 지휘관들이 직접 확인하여 임무를 지시할 수 있는 C4ISR 능력, 나아가 우주 공간의 군사적 활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대규모 전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핵 및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98년 5월에 이어 1999년 4월 또 다시 경쟁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하였다. 또한 북한, 이란, 이라크 및 시리아 등 소위 우려국가들이 핵 및 장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듯 많은 국가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와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부품 또한 국제 암거래를 통해 쉽게 획득하고 있다. 특히, 생화학무기는 제조가 쉽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므로 다수의 국가뿐만 아니라, 범죄·테러집단들도 손쉽게 보유할 수 있어 세계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3. 지역 분쟁과 갈등

오늘날 세계 각 지역의 분쟁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 많으므로, 국제사회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83개의 분쟁이 진행되었고(부록1 참조), 이 가운데 18개 분쟁은 한해 동안 적어도 1천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한 분쟁으로 평가된다. 2000년에도 시에라리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등 전세계적으로 45개 분쟁지역에서 유혈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유럽지역에서 진행된 13개 분쟁 중 2개가 충돌분쟁이며, 대부분의 분쟁들은 탈냉전 이래 체제 전환과정을 겪고 있는 동유럽의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족 구성에서 비롯된 종교·문화적 반목 등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과 복잡한 국제적 배후 지원관계 등으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코소보분쟁’은 NATO가 무력 개입함으로써 국제문제로 비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방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구사회주의 국가간 이견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99년 6월 10일 세르비아측이 유엔의 ‘코소보평화안’을 수락하고, 7월에는 서방 선진국들이 ‘남동유럽안정화협약’을 체결하여 코소보의 평화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족간 갈등으로 야기된 코소보분쟁은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소련지역 역시 제2차 러시아-체첸사태 이외에도 그루지아-압하지아 분쟁, 타지크 내전 등 이민족간의 역사적 반목과 대결이 상존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식민유산, 종교, 분리독립운동과 관련이 깊으며 스리랑카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가 독립함으로써 여타 지역의 분리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필리핀에서는 국내정국 불안과 동티모르 독립의 영향으로 반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 지역정세는 양국간에 상호 무력충돌 방지 및 신뢰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라호르 선언’을 채택(1999. 2)하였으나, 1999년 카길 사태 이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타밀족의 분리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스리랑카의 내부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뿌리깊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해결방법에 불만을 가진 세력에 의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경제 제재 및 대량살상무기 사찰 등으로 이라크와 서방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전세계 분쟁의 약 1/3(27개)이 전개되고 있는 곳으로서, 동지역 53개국의 절반이 분쟁에 연루되어 있다. 동 지역분쟁의 약 70~80%는 1960년대

서구제국으로부터 독립된 후 정파간 또는 종족 및 부족간 정권 쟁탈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에라리온 내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등 충돌분쟁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미주 지역에서는 4개의 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평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9년 동안 특기할 만한 무력충돌이 없었던 멕시코 내전과 정부군의 적극 대응으로 반군 세력이 급격히 약화된 페루 내분은 폭동이나 테러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콜롬비아내전은 마약조직과 연계된 좌익세력과 우익정부간 극한대립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어 미주지역에서 최대 분쟁지역으로 평가된다.

제3절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1945년에 출범한 유엔은 냉전시기 동안에는 회원국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유엔의 기능이 회복되면서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평화유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활동범위도 분쟁의 예방, 평화협상 타결에 유리한 환경조성, 포괄적인 합의 이행 감시,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전달 및 정전 집행활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군축활동도 유엔을 중심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생산과 국제적 이전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생산 통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무기한연장,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를 위한 국제협조체제 강화,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발효,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검증의정서 협상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적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계 등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물품, 기술 및 장비의 공급을 막는 각종 수출 통제체제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최근 유엔은 재정상의 어려움과 안보리의 제도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유엔의 재정을 개혁하여 자국에 대한 예산 분담률을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자신들의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유엔 내 위상 확보의 일환으로써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들은 새로운 국제 현실을 반영하여 안보리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안보리 확대 범위 및 거부권 부여 문제는 회원국간의 의견 상충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

전략 및 재래식 무기 감축을 위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제1·2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I·II)’ 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구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 을 체결하였다.

제1차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I : 1991년 7월에 체결, 1994년에 발효)은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1년까지 미·러 양국은 전략 핵미사일을 1,600기, 핵탄두는 6,000발 이하로 감축할 전망이다. 또한, 2000년 4월 19일 러시아 연방의회가 ‘제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 을 비준함에 따라 2007년까지 미·러 양국은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고 핵탄두를 3,000~3,500발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러 양국은 핵탄두를 1,500~2,500발 수준으로 추가 감축하기 위해 ‘제3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II)’ 을 협상중이다.

1990년 11월 19일 NATO 16개국과 구 WTO 14개국이 ‘유럽 재래식무기 감축조약(CFE)’ 을 체결한(1992년 7월 발효) 이래 유럽에서는 재래식무기의 감축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11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는 재래식무기에 대한 기존의 NATO와 WTO간의 집단적 보유상한을 국가별 보유상한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중부유럽국가의 전차, 전투기, 대포 등 재래식무기를 10% 추가 폐기하고, 2001년 중반까지 러시아의 4개 군사기지 중 2개를 해체하여 주둔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다.

3. 안보대화 및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

안보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간의 지속적인 안보대화과 지역안보협력체제의 활성화는 정치·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인사 상호방문을 통한 안보대화 및 미·러 국방부간 핫라인의 운영 등은 정치적 신뢰구축과 세계안보정세를 안정시키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아·태 지역은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곳으로, 쌍무적 안보대화가 지역 안보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와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국가들은 보다 활발한 쌍무적 접촉과 대화를 통해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일본, 러시아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의 소극적 반응으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은 1994년 이래 역내 신뢰구축 제고 및 예방외교를 위해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북한이 가입함으로써 아·태 지역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외의 각 지역에서는 현지 상황에 부합되는 다양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제2장 동북아 안보정세

제1절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동북아 각국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며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맹체제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푸틴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목표로 보다 적극적인 군사외교정책을 전개하여 동북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일과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및 ‘미·일 전구미사일방어체계(TMD)’ 공동연구 등으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으며, 러시아도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즉, 중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유사시 대만해협에 대한 미·일의 개입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일본의 역내 안보역할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이 미국 주도의 동북아지역 TMD 구상에 포함되는 것을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체제구축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미·일·중·러 4국은 사안에 따라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는 동북아 정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1999년 5월 발생한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에 대한 NATO기의 오폭사건과 미국의 핵기술과 중성자탄 기술을 중국이 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미 하원의 ‘코스보고서’는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또한, 미국 의회는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골자로 하는 ‘대만안보강화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만문제는 미·중간 주요 마찰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중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는 쌍무협상을 타결하고, 단절되었던 군사교류를 재개하는 등 협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관계는 경제협력이나 지역안정과 같은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교류를 확대시

키고 있으나, 센카쿠(釣魚台)열도 등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상호 경계하는 입장에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지역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사력 감축은 지역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고, 하시모토-엘친 플랜에 따라 북방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양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경제협력 구상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지역은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는 한편,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의 적극적인 전방위 외교 등 개혁·개방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의 주요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행히,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증가되고 있어 전 세계가 북한의 움직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제2절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주변 4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세계전략을 동북아 정책에 철저히 반영하려는 의지하에 자국이 처한 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강화, 세계 경제번영 지원 및 해외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 ‘개입 및 국제지도력 유지(Engagement & Leadership Abroad)’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지역패권주의를 방지하고, 지역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기존 쌍무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현 수준의 미군을 지속 주둔시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하에 대북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동북아에는 아직도 역사적 다양성과 대규모 군사력 등으로 인해 잠재적 분쟁 위협이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미·일 안보체제를 축으로 역내 국가간 적극적인 안보 대화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한·미·일 공조하에 동북아 안보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의 적극 추진 등 대북관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 역내 국제질서에서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를 경계하면서, 경제력 신장에 따른 군 현대화와 지역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은 한반도를 대외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하고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는 경제협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정치·군사적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과는 경제지원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전략적 비중을 과거보다 높게 평가하여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를 지원하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가운데,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체계(NMD) 구축 등 국제문제 및 지역분쟁에서의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중·러 양국 간 공조체제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문제 협의를 위한 4자회담에 일·러가 추가 참여하는 6자회담의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러시아의 적절한 역할과 기여를 추구하는 것이다.

제3절 주변국의 군사정책 및 군사동향

1. 미국

가. 국방정책

미국 국방정책의 기초는 세계평화유지와 자국의 국익에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다.

동북아는 세계 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강대국간 견제와 협력이 공존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중국·대만의 양안관계 등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쌍무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전쟁을 억제하는데 국방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보유를 동북아 지역안보의 최대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동북아 주

둔 미군 및 우방국 방어를 위한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를 구상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이미 1999년부터 TMD 공동연구를 시행 중에 있다. 더욱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가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체계(NMD)’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9월 1일 NMD체계 기술에 대해 충분한 신뢰를 갖게 될 때까지 배치를 추진하지 않고, 배치 결심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중국, EU 국가들은 환영을 표시했으며,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군사동향

동북아지역 내에 배치된 미군 전력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지원하는 한편,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보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 태평양 사령부를 주축으로 신속대응군 운용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제 7함대에는 키티호크 항모전투단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

1999년 초, 유고 공습기간 중 키티호크 항공모함의 걸프만 이동으로 인해 미 군사전략의 핵심인 ‘윈-윈전략(Win-Win Strategy)’ 수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미국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미국 본토 전력의 즉각 출동태세 유지를 지시하였다. 동시에, 한반도에 추가로 전력을 전개함으



▲ 미국의 키티호크 항공모함

[도표 1-1] 미국의 동북아 지역 주요 군사력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로써 동북아시아의 전력을 보완하고 2개 주요전구에서의 '원-원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보스니아, 코소보사태와 같은 소규모 분쟁(SSC : Small-Scale Contingency)개입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0년 6월 미합참에서 발표한 장기전력구상 'Joint Vision 2020'에 따르면, 미국은 '우세한 기동, 정밀교전, 집중적 군수지원 및 완벽한 방호'의 4대 전장 운영개념을 축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절대 우위를 확보하고, 급변하는 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보작전 능력의 강화 및 보다 효율적 작전 운영을 위한 합동군사력 구축계획에 주력할 계획이다.

2. 일본

가. 방위정책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견지, 적절한 방위력 정비 및 국제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국가안전보장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일본 방위력 증강계획은 1995년 11월에 발표된 '신방위계획대강'에 담겨 있다. 아울러, 1996년 4월에는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하여, 21세기를 향한 미·일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재정의하고 일본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초할 것이라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일본은 1997년 9월에 개정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의 후속조치로서 1999년 5월에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사태시에도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와 절차를 정하는 '주변사태법(1999년)'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여 미·일 안보조약의 실효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일본은 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군사력 정비 등에 따른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적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8년 북한의 위성발사 주장에 대해 이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과 전세계 운항을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였으나, 1999년 미·북 미사일회담의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일·북 국교정상화 회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일본의 방위태세는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평시에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국과는 안보대화 및 교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사태시에는 미·일간 공동작전 및 상호협력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1976년 처음으로 '방위 대강'을 발표한 이후 매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위력을 건설해 왔으며, '2001-2005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조기경보기(AWACS) 운용의 본격화, 공중급유기 도입, 장거리 대형수송기 및 수송함 건조 등을 계획하고 있어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

현재 자위대는 육상자위대의 편제와 기능의 개편, 해상자위대의 기동전력 향상, 항공자위대의 신형 전투기 배치, 그리고 사이버테러 대책 강구 등 합리화·효율화·컴팩트(Compact)화를 진전시키면서 필요한 기능의 충실과 방위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및 의아 선박 사건(1999. 3) 이후 신형 미사일함정 도입을 비롯하여 초계헬기 부대의 특별경비대를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대게릴라부대 신편 검토 및 생·화학전 대비능

[도표 1-2] 일본의 주요 군사력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력 제고, 정찰위성의 4대 도입 및 운용(2002년 목표) 등 독자적 정보능력 및 작전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 역량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온두라스에 육상자위대 의료진을 파견했으며, 1999년에는 동티모르 사태시 난민지원을 위해 수송기를 파견하는 등 유엔 중심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3. 중국

가. 국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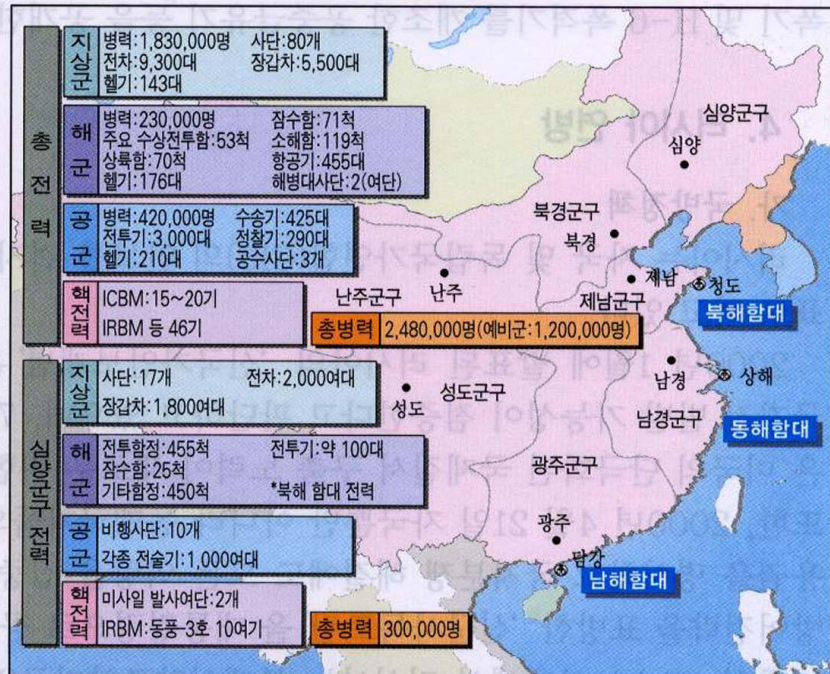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견지하면서 타국을 침범하지 않되, 일단 침략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적극적 방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양(量)으로부터 질(質)'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술 조건하의 국지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미사일 및 해·공군을 중심으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전구미사일 방어체계(TMD) 계획에 대만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중국의 통일노력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중국은 2000년 3월에 개최된 제9기 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약 146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7%가 인상된 것으로 1989년 이래 12년 연속해서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 현대화 사업은 육군의 경우 신형전차 도입, 다련장 로켓포의 확충, 공격 헬기사단 창설 등 기동력 및

[도표 1-3] 중국의 주요 군사력 현황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화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지 제한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속 대응부대와 긴급 전개 부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 급 구축함과 킬로(Kilo)급 잠수함의 추가 확보로 원양작전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공군은 러시아로부터 SU-27/30을 비롯한 최신예 전투기 도입과 기술이전을 통한 면허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기경보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핵 및 미사일에 대한 기술개발과 전자전에 대한 집중 연구 등으로 전략무기 및 사이버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9년까지 군병력 50만명 감축계획을 완료하여 약 250만명으로 병력을 재편하였으며, 1999년 10월 1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일에는 군사퍼레이드에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DF-31형 ICBM, T-90 II형 전차, FBC-1 해상작전용 전폭기 및 H-6 폭격기를 개조한 공중급유기 등을 공개한 바 있다.



▲ 중국의 DF-31형 ICBM

4. 러시아 연방

가. 국방정책

러시아는 자국 및 독립국가연합(CIS)의 안보를 견지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주요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1월에 발표된 러시아의 '신국가안보개념'은 대규모 전쟁 가능성보다는 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점증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7월 10일 발표된 '신외교정책'은 미국의 단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노력이 새로운 위협 및 도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2000년 4월 21일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가들의 국가안보 위기 발생시 핵사용권을 명시하고 국지분쟁 해결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공세적 방어전략을 표방한 '신군사독트린'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였다.

특히, 코소보사태에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 공습을 반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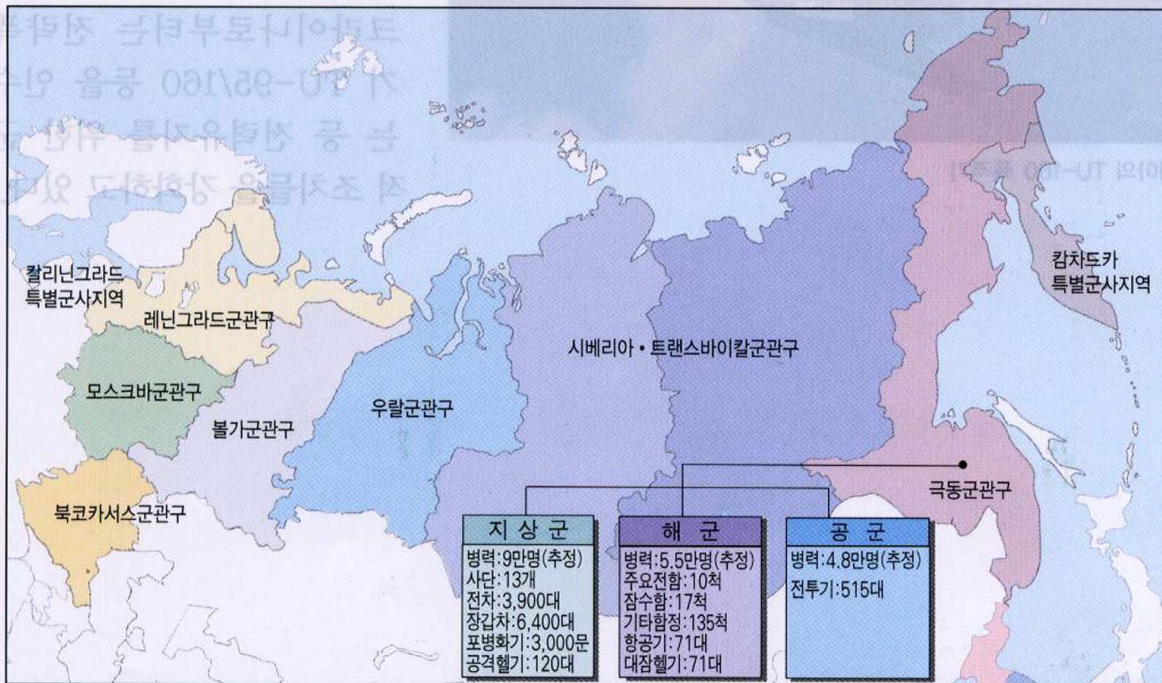
고 공습 종료후 코소보 평화유지군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가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또한 러시아는 NATO가 동유럽 3국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킨 이후에도 동진을 지속하는 데 대해 저항하는 한편, 미국이 추진중인 NMD 구축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에 의한 세계질서 주도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인도와는 장기 '군사기술협력의정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 위상회복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나. 군사동향

러시아는 1998년 8월 '2005년까지 군건설에 관한 국가정책 개념' 및 12월 '러군 개혁법안'과 2000년 11월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에 따라 군사력 건설과 국방조직 및 각군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즉, 2005년까지 약 85만명 규모로의 병력감축을 지속하면서 7개 군관구를 6개 군관구로, 현 4군체제(지상·전략·해·공군)를 정예화된 3군체제(지상·해·공군)로 전환하되, 핵 억제력은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도표 1-4] 러시아의 극동지역 군사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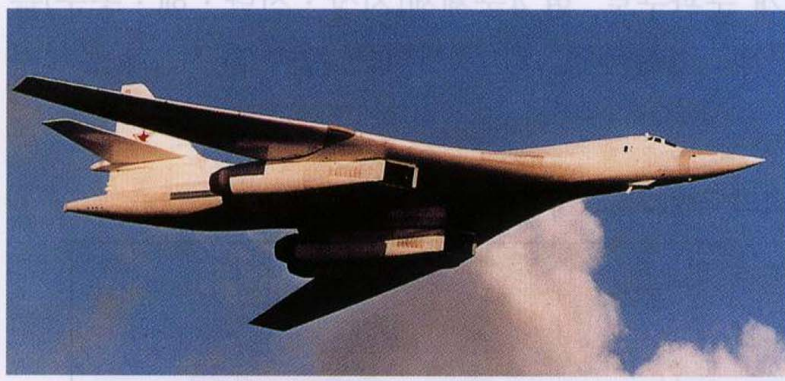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9. 10)

러시아는 재정난으로 인한 국방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첨단장비 개발에 주력하면서, 선진기술 및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해 방산담당 부총리를 임명하고 '대외 군사 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산무기 수출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국가차원의 무기수출 확대전략에 힘입어 중국·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이 1999년도 35억불에서 2000년도에는 43억불로 대폭 증가가 예상되는 등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군은 NATO의 동구 확대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과 유고공습과 같은 위협에 대비하여 1999년 '서쪽으로부터의 침공'을 가정한 최대 규모의 'West -99'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1999년 11월 당시 총리였던 '푸틴' 대통령의 태평양 함대사령부 방문을 통해 극동함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클레바노프' 부총리가 해군전력 증강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10년간 예산난으로 지속적인 전력 약화에 시달려온 해군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 러시아의 TU-160 폭격기

전략무기의 경우도 양적으로는 감축시키고 있지만, TOPOL-M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여 1998년 12월 이후 실전배치를 계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로부터는 전략폭격기 TU-95/160 등을 인수하는 등 전력유지를 위한 군사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연간 군사평형지수) 1999. 10

제3장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법적·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군부 중심체제를 구축하여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1일 신년 당보·군보·청년보 공동사설(‘당 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에서 사상·총대·과학기술을 강성대국 건설의 3대 기둥으로 강조하였다. 이는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의지하에 경제난이 사회주의 건설 및 국가안보에 최대 장애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 역량을 경제 회생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하여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최근 전방위·실리 위주의 대서방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무대 진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 화해분위기와 적극적인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했다거나 대외 개방 정책으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이르며,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군에 비해 약 2배의 양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9년 6월 연평해전 이후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장사정포 생산, 전투기 및 헬기 도입, 소형 잠수함 건조 등 전력증강과 미사일 궤도 진지공사를 비롯한 전투준비태세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상 무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접경지역에서의 대남 비방방송 중지 등 일부 변화된 활동 외에 기타 내부적 군사활동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

제1절 북한의 실상과 일반정세

1. 북한의 내부정세

북한은 2000년 4월 4~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 및 주요 법안을 승인하는 등 입법기능을 회복시키고, 2000년 신년 공동사설과 각종 언론 보도매체를 통해 당 창건 55돌을 계기로 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운영체제와

내용누락

내용누락

되었다.

중국과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최근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과 경제 지원문제에 대해 협의하였고, 10월에는 중국 츠하오티엔 국방부장이 6·25전쟁 참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의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2000년 2월 '신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데 이어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타 대 서방국가들과의 수교 확대를 모색하고 제3세계 및 비동맹권 국가를 대상으로 친선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정식 가입하는 등 다자안보협의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3.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의 대남정책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남 적화 전략 노선의 폐기 등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등 민간분야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도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1999.9)과 서해 5도 통항질서 공포(2000. 3)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에 호응하여 왔으며 당면한 경제회생과 국제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함을 인식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에 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비방 중단, 북방한계선을 월경한 우리 어선의 조속한 송환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 남북 장관급회담 및 국방장관회담, 언론사 사장단 방북 초청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가 보안법 폐지와 유엔사 해체 등을 주장하며 종전의 통일전선 형성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된 전한반도 공산화 목표를 포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간 신뢰 구축과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 및 전략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아직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당규약에 명시된 ‘한반도의 적화전략’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중 :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미 1962년 ‘4대군사노선’을 채택하여 장기간에 걸쳐 전쟁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공언한 바 있다.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기본으로 한 ‘4대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였다.

북한 헌법 제60조 :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군사력을 체제유지를 위한 최후의 핵심 보루로 인식하고 대남 및 대외협상 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면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무력혁명의 주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북한의 대남군사전략은 ‘초전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기계화 및 자주화된 기동부대로 전과 확대를 실시하여 속전속결을 기도하는 한편, 정규전 및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동시 전장화하여 미 증원군의 도착 이전에 남한 전역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전략’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자원의 우선권을 군사부문에 부여하여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장거리 포병부대와 기계화부대 등 주요 전력의 55% 이상을 전방지역에 추진 배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10기 3차회의에서 2000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3.6억불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과거 북한이 발표했던 군사비 규모와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군사비는 총 예산의 30% 이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군사비는 국가예산에 편성된 국

방비뿐만 아니라 이른바 제 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 운영체제를 통해서 조달되며 무기수출, 직영무기 생산, 군부대 자체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회계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무기체계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면에서도 인건비, 토지, 공공요금 등이 무상이거나 저렴하다. 따라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군사비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증강이 가능하며, 실질 구매력을 우리 군과 비교해 볼 때 동일 규모의 군사비로 3배 이상의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북한의 군사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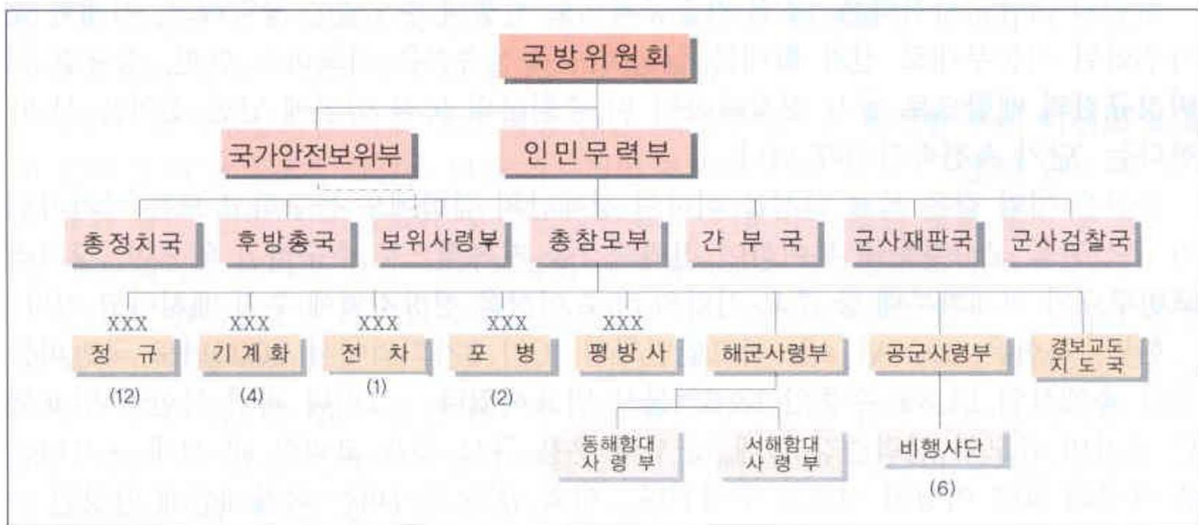
1.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기구

북한의 전쟁지도 및 군사지휘의 최상위에는 도표 1-5와 같이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독립된 국가 권력기구로서 '국방위원회'가 있으며, 그 예하기구로 인민무력부가 편성되어 있다.

1998년 9월 5일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구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구로 강화되었고,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되었다.

[도표 1-5]

북한의 군사지휘체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 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으며 전쟁 및 중요한 군사작전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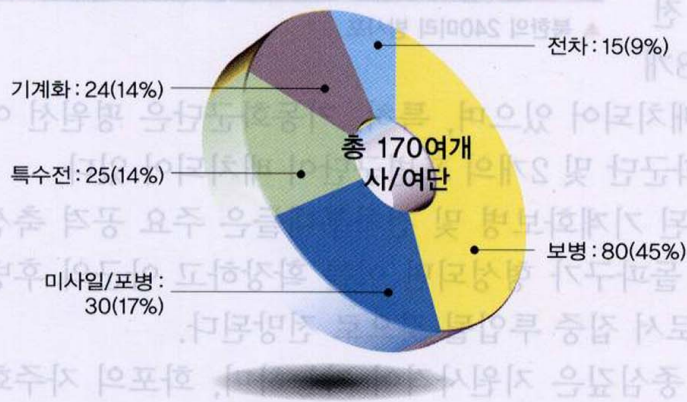
인민무력부는 군사집행기구로 외형적으로는 도표 1-5와 같이 총정치국, 총참모부를 비롯한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하고 북한군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군정권(軍政權)만 행사하고, 총참모부가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관장한다.

2. 북한군의 편성, 장비, 배치

가. 지상군

북한 지상군은 4개 야전군급 전방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2개 포병군단을 포함한 총 20개 군단과 특수전부대를 관장하는 경보교도 지도국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투부대는 80개 보병사단/여단, 30여 개 포병여단, 15개 전차여단, 24개 기계화여단, 25개 특수전여단 등 총 170여 개 사/여단으로서, 병종별 전투부대 구성비는 도표 1-6과 같다.

[도표 1-6] 북한 지상군의 주요 전투부대 구성비



북한 지상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이 중 전차는 아직까지 구식인 T-54/55/59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포구경이 향상된 T-62, 천마호 전차를 자체 생산하여 전방지역과 평양일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전차들은 자체 스노클 장치를 이용하여 수심 5.5m까지 도하할 수 있다.

포장갑차는 BTR계열 및 M-1973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경전차 수준의 성능을 갖춘 BMP계열의 장갑차가 새롭게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야포는 50% 이상이 자주화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을 최단시간내에 공격할 수 있는 방사포(107밀리부터 240밀리)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 항공무기 또한 14.5밀리부터 100밀리까지의 다양한 고사포와 SA-7 대공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도표 1-7] 북한 지상군의 장비 보유현황

				
전 차	장 갑 차	야 포 (방사포 포함)	방공무기	도하장비 K-61/S형부교
3,800여대	2,300여대	12,500여문	13,800여문	760여대 / 2,200여대

특히 전방군단과 공병국은 수륙양용 차량인 K-61과 조립식 S형 부교 등의 도하장비를 보유하여 대부분의 하천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10여개 군단, 60여개 사단/여단을 전진배치시켜 언제라도 부대배치의 조정없이 기습 남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방에 4개 군단, 중부 및 평양지역에 8개



▲ 북한의 240밀리 방사포

군단, 후방지역에 8개 군단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기동화군단은 평원선 이남지역에 1개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및 2개의 포병군단이 배치되어 있다.

군단부터 여단까지 다양하게 편성된 기계화보병 및 전차부대들은 주요 공격 축선상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단 돌파구가 형성되면 이를 확장하고 아군의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중심기동 작전부대로서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병부대는 견고한 갱도진지에서 중심깊은 지원사격이 가능하며, 화포의 자주화로 기동성 있는 화력지원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방사포에 의한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도하공병은 수륙양용차량과 조립식 부교장비를 운용하여 병력과 장비를 포함한 부대의 강습도하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약 10만 여명에 달하는 특수전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지휘 및 통신시설 파괴, 병참선 차단, 비행장 등 주요시설 타격, 요인 암살 등으로 우리의 전쟁지속능력을 파괴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전선에 걸쳐 땅굴을 굴착해 놓고 사전에 휴전선 일대의 장벽을 회피하여 대규모의 부대를 은밀히 침투시킨 후 전면적인 기습공격을 실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휴전선 지역에는 20여개의 땅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발견한 4개의 땅굴들은 모두 전선지역의 주요 접근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 해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와 16개 전대 및 2개의 해상지격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함정 보유현황은 도표 1-8과 같다.

[도표 1-8] 북한 해군의 함정 보유현황



전투함정 중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의 수상전투함은 대부분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투함정은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40여 척의 유도탄정은 사정거리 46Km의 대함 STYX 미사일 2~4기를 장착하여 아군의 대형함정에 대한 유도탄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 북한의 유도탄정

로미오급 및 상어급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50여 척의 잠수함은 한반도 전 해역의 해상 교통로 교란, 수상함 공격, 기뢰 부설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함정은 상륙함, 고속상륙정, 공기부양정 등의 상륙함정과 소해정, 해상경비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함정은 원해작전에 제한을 받는다.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1척당 1개 소대 규모의 무장병력을 승선시켜 목표지역에 기습상륙시킬 수 있는 140여척의 공기부양정을 자체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공기부양정은 갯벌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므로 동·서해안 대부분의 지역에 접안할 수 있으며, 5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 능력이 있어 전쟁 초기에 동시다발적인 기습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또한 동·서해안에 사정거리가 95Km에 달하는 실크웜(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방에 배치된 실크웜 미사일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대함공격이 가능하다.

다. 공군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 중앙 통제하에 3개의 전투/폭격기 비행사단, 2개의 지원기 비행사단 및 1개의 훈련비행사단을 포함 총 6개 비행사단과 1개의 헬기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 보유현황은 도표 1-9와 같다.

[도표 1-9]

북한 공군의 항공기 보유 현황



항공기 전력구성은 MIG-15/17, IL-28 등 구형 전투/폭격기가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IG-19/21이 주력기종으로서 양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MIG-23/29 및 SU-25 등 신예 전투기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MIG-21기 40여대와 러시아로부터 MI-8헬기 여러 대를 도입하였다. 단계적인 항공산업 육성 추진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MIG-29 신예 전투기를 조립 생산한 바 있다.

북한 공군은 2개의 공군저격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여대의 AN-2기는 저공·저속 비행을 통해 유사시 후방 깊숙이 특수전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투기의 약 4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단시간에 우리나라 전 지역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여 개의 작전기지 외에도 전

시 생존성을 고려하여 예비 및 비상활주로를 포함한 70여개의 비행기지를 전·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한편, 평양권 및 주요 핵심시설을 포함한 북한 전지역에 조기경보 및 방공감시레이다, 저고도 대공포, 중·고고도의 지대공미사일 등을 밀집 배치하여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다.



▲ 북한의 MIG-29 전투기

라. 예비전력

북한은 사회 전체가 거대한 병영체제로서 1960년대 초부터 4대 군사노선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 인민을 무장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 내에 소집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48만여 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15~30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의 구성은 전투 동원대상인 교도대가 173만여 명(남자:17~45세, 여자:17~30세), 민방위대 성격의 노농적위대가 414만여 명(46~60세의 남자 위주), 고등중학교 군사조직에 해당하는 붉은청년근위대가 118만여 명(14~16세, 4~6학년), 기타 준군사부대로 인민보안성 및 안전원, 군수동원총국, 속도전 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을 합하여 약 43만여 명이다.

동원체제면에서 보면, 인민무력부가 직접 통제하는 교도대는 부대단위로 즉각 동원 및 전투투입이 가능하며, 당 민방위부가 통제하는 붉은청년근위대와 노농적위대도 당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 내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특히 주민의 거주 이전과 직장배치 및 여행을 통제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예비병력은 상시 동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3. 북한의 전략무기 개발 수준

가. 핵 개발

북한은 구소련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195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가채량 400만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960년대에는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한 후 구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핵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1970년대에는 일련의 핵연료 순환주기, 즉 연료의 정련, 변환, 가공기술을 집중 연구하여 자체기술로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장에 성공하였고, 1980년에는 5MW급 연구로(제2원자로) 건설에 착공하였다.

1980년대에는 원자력의 실용화, 핵개발 체계 완성에 주력하여 1986년에 우라늄 정련, 변환시설의 운용을 시작하였고, 1989년에는 태천에 200MW급 원자력발전소를 착공하였으며, 영변에 대규모 재처리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고 고품실험을 실시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 원료인 플루토늄(Pu)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한 두 개의 초보적인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에서 핵개발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 주고 경수로 1기 완성시까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해줄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어 경수로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임시 및 일반사찰 수용을 발표하고서도 아직까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5MW원자로 운전기록의 제출, 시료 채취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4월 5MW원자로의 폐연료 봉인작업은 완료하였다.

1998년 중반 이후 핵관련 지하시설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받던 금창리 지역은 1999년 5월과 2000년 5월에 실시한 미국의 현장사찰 결과 일단 핵 관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화학무기

북한은 1961년 말에 화학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에 따라 연구 및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기개발을 시작하였다. 그후 1980년대부터 '독가스 및 세균무기를 생산하여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화학무기 개발에 주력하였다.

현재 북한은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신경성, 수포성, 혈액성, 구토 및 최루성 등 유독작용제를 6개의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보유량은 약 2,500~5,000톤

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다양한 화학탄 투발수단을 보유하여 전방지역에는 구경 100밀리 이상 박격포, 야포 및 방사포, FROG 등을 이용하고, 후방지역은 SCUD 및 노동 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AN-2기 등을 이용하여 전·후방 동시 화학탄 공격이 가능하며, 아울러 특수부대를 이용하여 후방지역에 생물무기를 은밀히 살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군은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편성하여 화생방 작전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인은 물론 준군사 부대요원과 민간인까지 화생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화생무기는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금지추세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으로는 그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 할 것이다.

다. 중·장거리 무기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에 착수하여 이미 구소련제 SCUD-B를 개량하여 사정거리가 500Km에 이르는 SCUD-C를 자체 생산 및 작전 배치하였다. 1993년에는 사정거리가 약 1,300Km인 노동-1호를 시험 발사한 후 1997년에 작전 배치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변형된 대포동-1호 미사일 운반체에 의한 소형 인공위성의 궤도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 연소와 탄체의 다단계 분리 등 제반 기능을 이상없이 수행한 점으로 보아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대포동 1·2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각각 2,000~2,500Km, 6,700Km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중동지역 및 서남아시아에 수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미·북간에는 1996년부터 '미사일 기술 통제체계(MTCR)' 가입과 수출 및 생산 중지문제 등으로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8년 8월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에는 미·북간에 미사일 포괄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24일 북한 외무성은 미·북 고위급 회담시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시 합의한 '미·북 공동코뮤니케'에서 미사일회담 진행기간 중 미사일 발사유예를 재확인하였다.

북한이 화생무기와 함께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생산·보유하는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편, 체제의 생존을 위한 대외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무기들은 유사시 작전·전술적으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수도권을 포함한 전·후방의 주요 도시 및 전략표적들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전략인 단기속전속결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제4절 주요 군사동향 및 위협평가

최근 북한군은 지속되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대포동 미사일 개발노력과 함께 장사정포(170mm자주포, 240mm방사포)를 전방지역에 증강배치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군은 연평해전(1999.6) 이후 실질적인 전투기량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 하계훈련기를 이용하여 지상군은 포병사격과 기계화부대 기동훈련을 강화하였고, 해군은 해안포, 함포 및 함대함 유도탄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수전부대는 해상 및 수중 침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9년 9~10월에는 인민무력부 주관하에 전군에 대한 전투준비태세 판정검열 강화와 아울러 대폭적인 전투장비 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전투준비태세 수준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동계훈련(1999.12~2000.4)에 있어서도 지상군은 포병 실사격훈련과 기계화부대 야외기동훈련을, 해군은 전투준비태세 점검을, 공군은 협동 방공 및 기지전개훈련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전국 규모의 국방지휘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경제난의 영향 및 연평해전 이후 각군별로 실질적인 훈련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7월부터는 실사격훈련 등 일부 훈련이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8월 하순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환원되어 일상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군은 최근 이라크와 코소보사태 교훈을 도출하여 지속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후방지역에 미사일 갱도진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전방 및 해안지역에 대한 장애물 보강과 전투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도입한 MIG-21 전투기를 양강도 지역 기지에 작전배치함으로써 동북부지역의 국지 방공력을 강화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전·후방 10개기지에 전투기 240여대를 조정 배치하였으며, 각 비행장 및 방공기지의 대공포 배치도 조정하였다.

또한, 군의 사기와 전의를 고양하기 위해 군부에 대해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사령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군부대 방문 등 격려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9년 2월 전군 중대장 대회에 이어 2000년 2월에는 평양체육관에 전군의 중대정치 지도원들을 소집하여 대규모로 국가표창을 수여하여 충성의 맹세를 강조하였다. 특히 중대단위 전투력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군사규정 학습과 사상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군·민 일치운동을 전개하는 등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영군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침투용으로 침투용 소형잠수함(정)을 추가 건조하여 배치하고 수중추진기(SBS-2)를 개발 운용하는 한편, 침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침투도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한 휴전이후 남·북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9월에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2000년 3월 23일에는 해군사령부 명의로 소위 '서해 5도 통항 질서'를 보도하는 등 긴장을 조성한 바 있다.

북한군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종 보도매체의 대남 비방 방송 감소, 순화된 용어('괴뢰', '원수' 등 과격한 용어 미사용)의 사용 및 전선지역에 설치된 심리전 입간판 중 '월북환영', '친미매국' 등의 내용을 철거 또는 교체하였다. 또한, 북한 해군은 북한주민의 조업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으로 남하하는 것을 단속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외형적인 긴장조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장기적인 전력증강 및 전투준비태세 보강활동과 침투관련 훈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 백

제2부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

- 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 제3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여 백

제1장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국가목표와 안보정책

국가목표와 안보정책은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주요 지침이 되고 있다. 국가목표는 우리 민족의 항구적인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추구해 온 기본적인 가치이며,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지향해야할 목표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에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영구적 독립을 보전한다. 둘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한다. 셋째,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켜 국위를 선양하고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정을 본격 추진하여 '안정된 평화정착의 원년'으로 기록하는 것을 2000년 안보정책 목표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을 흡수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위기대응능력과 체제를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태세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경분리원칙 아래 민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교류를 다변화함으로써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과 결합하는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제거를 포함한 상호위협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북한이 국제적 규범에 가입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제2절 대북정책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분단과 대치 상황하에 있어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으로 국방정책 수립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화해·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추구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북 3대 원칙과 6대 추진기조를 천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은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및 화해·협력의 추진’을 말한다.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한·미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한다.’ 이는 우리가 북한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선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셋째,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남북 쌍방이 파급효과가 큰 경제분야부터 교류를 활성화시켜 남북간의 대결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바꾸겠다는 의미이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상호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남북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대북정책의 6대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말한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화해협력정책’의 추진과 북한이 이를 신뢰하기 시작함으로써 55년 분단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은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전환점이 되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에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복구공사 개시 그리고 장관급회담 등이 계속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측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였고, ‘6·15남북공동선언’을 확고하게 뒷받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현재 단계에서 우리의 국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비롯한 군사적 실체가 아직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3절 국방목표와 국방정책기조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군의 임무·역할, 국방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발전 기본개념을 정하였다. 이러한 국방발전 기본개념에 따라 국방정책기조를 설정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중·장기적 국방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 함은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 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며 안정과 평화를 이룩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셋째,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함은 우리의 국가위상과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이웃 나라들과 군사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유지 노력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유엔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누락

내용누락

다.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 추진

대북 군사정책 발전 및 한반도 긴장완화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평화통일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합의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협력이 가속화된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화해협력정책'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군사분야에 한치의 허점도 없을 경우에만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전쟁방지를 위한 안보, 화해협력을 위한 안보'를 직시하여 우리 군은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남북 군사직통전화 개설, 대규모 훈련 상호 참관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하여 군사적 긴장완화를 도모할 것이다.

라.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및 대주변국 안보협력 강화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와 경제 발전 그리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한·미 동맹관계를 기본 틀로 하여 다각적·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다자안보협력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북아 지역 안보문제에 관한 다자협력기구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안보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마.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

21세기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사 및 비군사분야를 망라한 제반 안보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국민의 군대' 육성은 바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유사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제2의 전력으로 활용하는 등 민·군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총력 국가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군은 국가발전에 스스로 동참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교육에 이바지함은 물론, 환경·테러·마약 등 비군사적 안보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적 위기나 재난시에도 즉각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고 대민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군 운영체계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민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확보할 것이다.

제2장 전쟁억제를 위한 군사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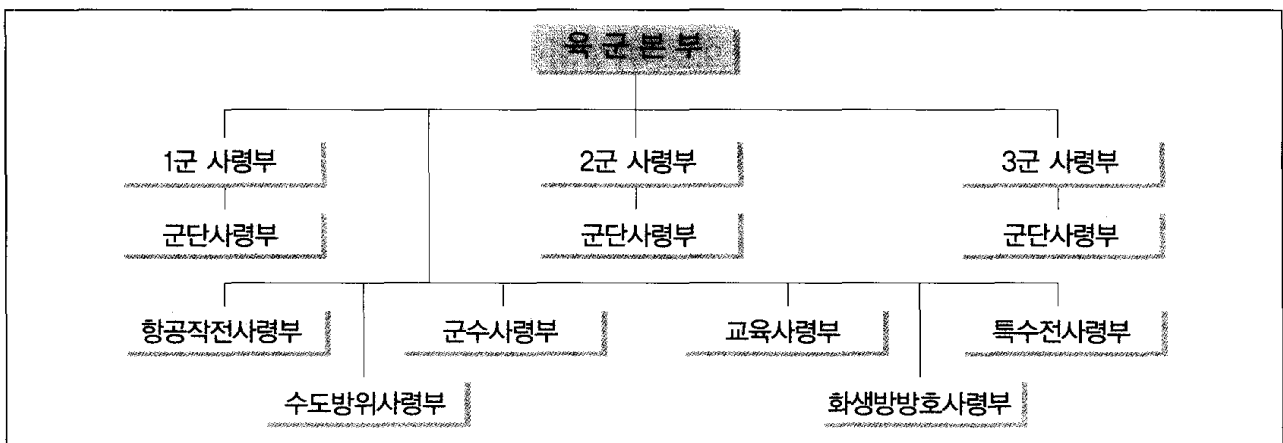
제1절 각군별 보유전력

1. 육군전력

육군은 국가 보위의 주력으로서 평시에는 해·공군과 함께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모든 지상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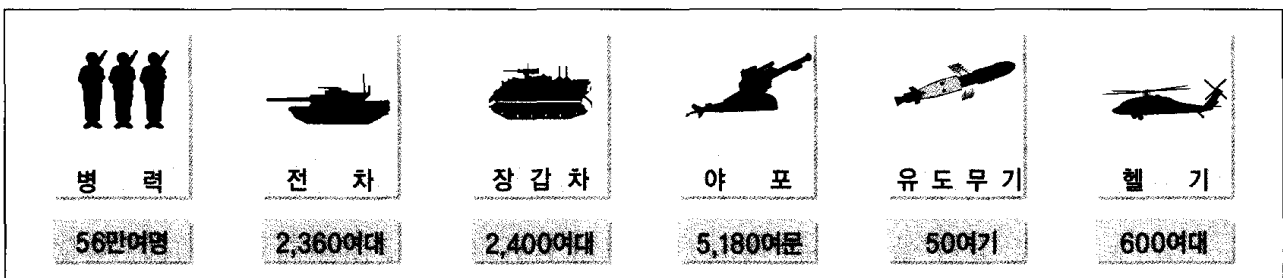
육군은 육군본부와 3개 군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이를 지원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11개 군단, 49개 사단, 19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표 2-2] 한국의 육군 구성



육군은 주요전력으로 56만여 명의 병력, 전차 2,360여대, 야포 5,180여문, 장갑차 2,400여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보유 내역은 도표와 같다.

[도표 2-3] 한국 육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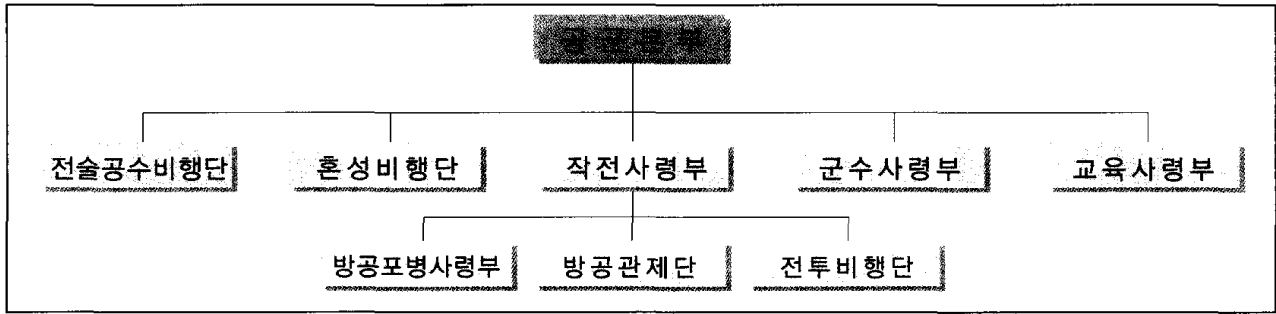
※ 야포 : 다련장포 포함, 유도무기 : ATACMS 포함.

내용누락

내응누락

[도표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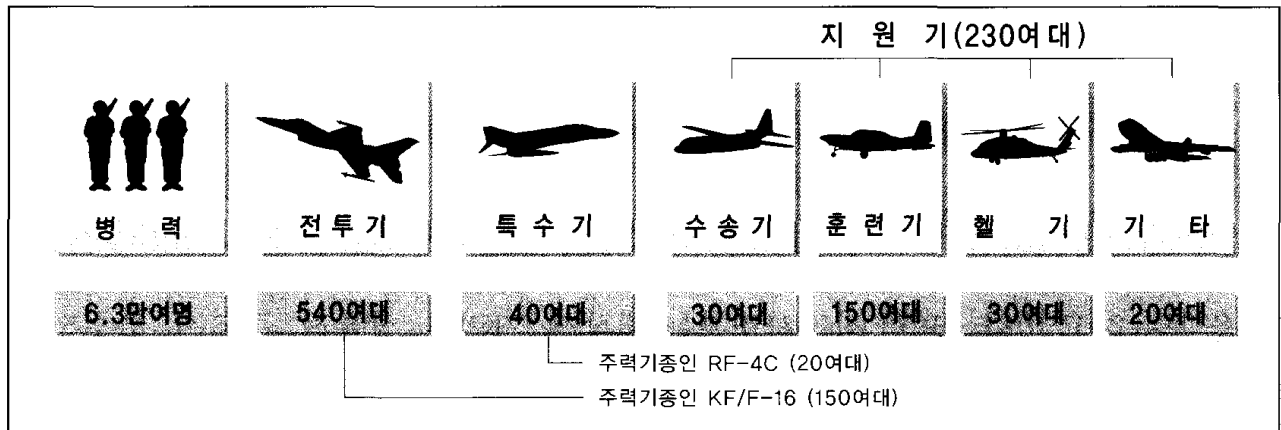
한국의 공군 구성



공군은 주요전력으로 약 6만 3천여 명의 병력과 F-16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도표 2-7]

한국 공군의 병력/장비 보유 현황



항공작전은 전구항공통제본부(TACC)의 중앙집권적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현재 공군은 정밀폭격 및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상 및 해상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는 공·지·해 합동작전체제와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4. 예비전력

예비군은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이 제정되었고, 1968년 1월 북한 무장공비에 의한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그해 4월 1일부로 창설되었으며, 현재까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각자의 임무수행 능력을 유지하여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대 증·창설 및 병력손실에 대한 보충요원으로서 현역과 똑같이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현역복무 등 병역을 마친 후 8년차까지 복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약 304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전시 동원되어 전투에 투입되는 예비군의 개인 화기 및 장비·탄약과 전차를 비롯한 각종 화포 및 공용화기는 부대가 증·창설되어 전투투입을 준비하게 될 지역에 평시부터 준비되어 있다.

제2절 동맹국의 군사력과 증원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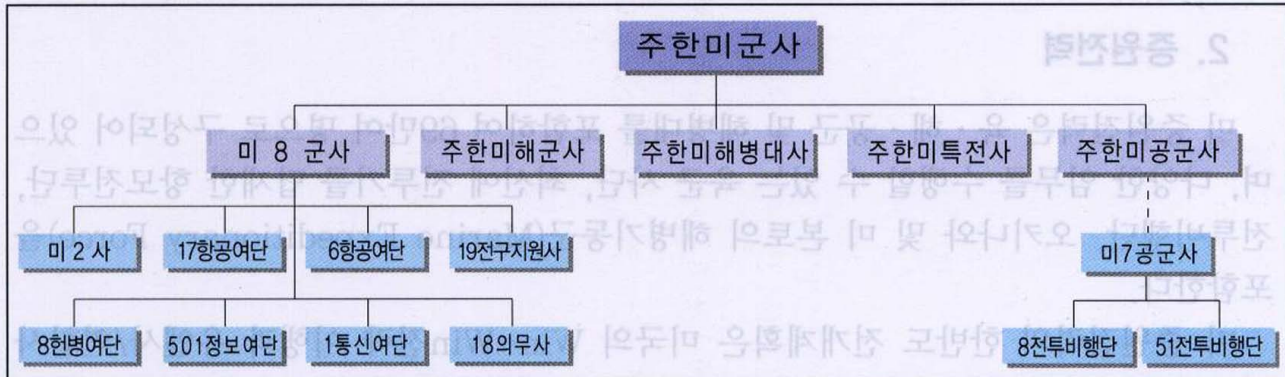
1. 주한미군

주한미군은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따라 한국에 주둔한 이래, 한·미 동맹관계의 상징으로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사/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 예하 사령부로는 미 8군사령부, 주한 미해군사령부, 주한 미해병대사령부, 주한 미공군사령부 및 주한 미특수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미 제7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도표 2-8]

주한 미군사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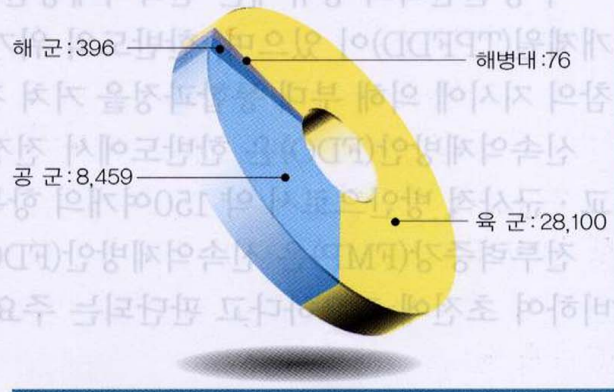
현재 주한미군의 인가된 총 병력은 오른쪽 도표와 같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8군은 140여대의 신형 M1전차와 170여대의 브래들리(Bradley)장갑차를 비롯하여 30여문의 155미리 자주곡사포, 30여문의 다련장 로켓, 패트리엇를 포함한 각종 지대공, 지대지 유도탄과 우수한 전투능력

[도표 2-9]

병력 현황(인가)

(단위:명)



을 갖춘 70여대의 AH-64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한 미 공군은 70여대의 F-16 등 최신예 전투기와 20여대의 A-10 대전차공격기, U-2기를 비롯한 10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최신예 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주한 미 공군은 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전천후 공격 및 공중 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 7함대 및 7공군이 증원될 경우 주한 미공군 전력은 질적·양적으로 현저히 증강될 것이다.



▲ 패트리엇 미사일

주한 미해군사 및 해병대사, 특수전사는 평시에는 사령부를 구성하는 소수 인원과 장비만으로 기간 편성되어 있으나, 전시 또는 한반도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미 태평양사령부 전력이 투입되어 월등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2. 증원전력

미 증원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69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육군 사단,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전투단, 전투비행단, 오키나와 및 미 본토의 해병기동군(Marine Expeditionary Force)을 포함한다.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계획은 미국의 Win-Win전략 이행과 유엔사/연합사 작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다.

미 증원전력의 종류에는 신속억제방안(FDO), 전투력증강(FMP) 및 시차별부대전 개제원(TPFDD)이 있으며,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시 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미 합참의 지시에 의해 부대 통합과정을 거쳐 전장에 투입된다.

신속억제방안(FDO)은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위기시에 시행되는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방안으로서 약 15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력증강(FMP)은 신속억제방안(FDO) 등을 통한 전쟁억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초전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전투부대 및 전투지원부대를 증원하는 조

치로 주요전력으로는 항모전투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속억제방안(FDO)과 전투력증강(FMP) 전력을 포함하는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상의 주요 전력은 전쟁발발시 전개하도록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전력들로서, 그 종류는 현재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In-Place)과, 상황발생시 시차별로 전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전력(Pre-Planned), 그리고 요청시 추가로 전개되는 전력(On-Call)으로 구성되어 있다.

● 증원전력 현황

미국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2개의 주요전구전쟁(2MTW : 중동 및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침략행위를 저지/격퇴한다는 Win-Win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반도 증원전력도 이러한 전략개념하에 한반도 전구에서 유사시 승리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획한 전력이다.

한반도 증원전력의 주축인 시차별부대전개제원(TPFDD)내의 전력은 1990년대 초반에는 48만여 명, 1990년대 중반이후 63만여 명을 계획하였다가, 최근에는 약 69만여 명의 병력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1,600여대의 전개계획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병력의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전개가 계획된 전력 내에는 개전초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방에 밀집한 적 포병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입체적인 해상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항모전투단, 공중우세 확보·방공·적지 타격을 위한 공중전력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한·미군은 1994년부터 한·미 연합사 주관으로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오면서 전개 수행체계 및 수송수단의 운용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제3절 우리 군의 대비태세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 방송시 비방을 자제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훈련수준의 증가와 전력증강 및 전투준비태세 보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북한군의 군사적 능력은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긴장조성과 불안정상태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확고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군사의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1. 조기경보체제 및 위기관리체제 유지

우리 군은 한·미 연합 감시자산을 운용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전선지역에서는 장병들의 육안감시와 레이다, 열상장비, 전자전 장비 등을 이용하여 북한지상군을 감시하고 있고, 해상에서는 해상감시 레이다와 해군 전술지휘 통제체계(KNTDS) 등 자동화된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북한군의 해상활동을 실시간에 확인하고 있다. 공중에서는 중앙방공통제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영공 감시활동을 통해 북한의 공중활동을 추적 감시함과 아울러, 필요시 미국 군사 첩보위성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밀 감시활동에 의해 북한군의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연합 위기관리 및 협조체제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한·미 연합 위기관리체제의 발전은 1994년에는 관련약정을, 1995년에는 세부 시행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1998년에는 연합 위기관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999년도에는 상호 동일한 관점에서 일관된 위기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조치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연 4회의 한·미 연합 위기조치 정기연습 및 수시훈련을 통해 상호 첩보교환과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여 위기 발생시 한·미 연합에 의한 체계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합참은 위기조치예규를 근간으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위기조치 요원으로 사전 지정·편성하여 평시 불시 소집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위기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위하여 고속지령대와 지휘소 자동화체계 운용을 정착시킴은 물론, 유사시 합참을 비롯한 전작전사가 위기조치 체제를 즉각 가동시킬 수 있도록 긴급 전파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2. 평시 군사 대비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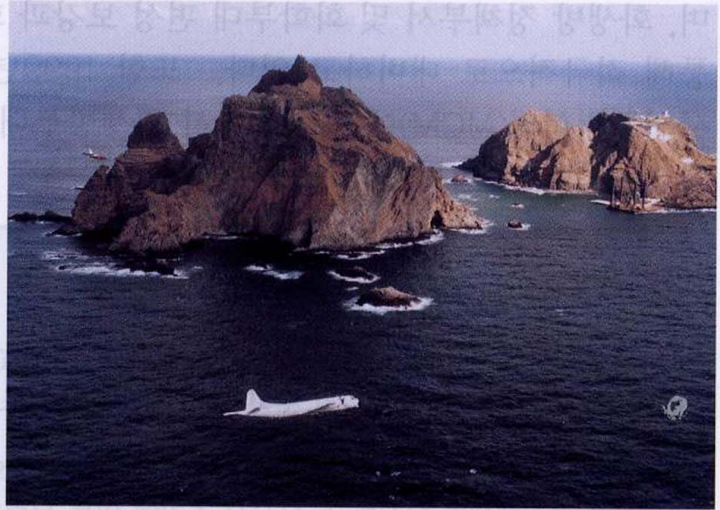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태세를 확립하는 등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상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250여km의 휴전선에 철책을 설치하고 감시초소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안선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울릉도·독도를 포함하는 동·서·남해안의 우리 해양 관할지역에는 해군함정, 잠수함 및 항공기에 의해 초계활동을 하고 있다. 공중에서는 성능이 우수한 공군기로 주·야간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각종 레이다 및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로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 활동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에서는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확립하여 북한군의 침투/테러 등 각종 도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로부터 군부대, 경찰, 해경, 예비군, 민방위대, 어업무선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요소들이 통합된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독도 근해 초계 활동

또한, 제21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는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군사위원회(MC) 상설회의 운영을 활성화시켰으며, 2000년 3월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조기에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군사 작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3. 전시 군사 대비태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사정거리 1,500Km 수준의 미사일과 다량의 화학무기, 포병 및 기계화부대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개전 초기의 전투결과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사전 분쇄하고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 통수 및 국방위기 대응체제를 공고히 유지한 가운데 각종 협의체의 활성화와 계획 발전, 연합 연습 및 합동 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협의체 활성화 측면에서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군사위원회회의(MCM)를 매년 1회씩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 수시로 상설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사안들을 협의하는 등 한·미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계획발전 측면에서는 한·미 연합으로 북한군의 공격에 대비한 작계5027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계5027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연합 및 합동연습과 훈련으로 을지포커스 렌즈(UFL)연습,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독수리(FE)연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도에 미사일 및 화생전 위협에 대비한 종합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

내응누락

내응누락

셋째,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화·전 양면전략 전술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상대가 강할 때에는 평화를 지향하다가 약할 때에는 즉각 무력으로 그들의 의지를 관철시킨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3가지 핵심 논리를 기조로 삼아 중점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완벽할 때만이 남북 공동선언도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화해협력과 평화통일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안보의식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적개념을 포함한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4절 전투임무 위주 훈련강화

1.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우리 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 및 연합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된 작전계획 하에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연합 전시증원(RSOI)연습, 독수리(FE)연습, 팀스피리트(TS)연습 등 다양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UFL 연습

가.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국가 전쟁 지도 및 전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종합 지휘소연습이다. 1954년도부터 유엔군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포커스렌즈연습' 과 1968년 1·21사태 이후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던 '을지연습' 을 1976년도에 통합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에서는 전쟁초기 정부 위기관리 및 한·미 연합 위기관리 절차와 함께 작전단계별 상황을 상정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나.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연합전시증원(RSOI)연습은 한·미 연합사 주관 하에 전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상호

군수지원, 동원, 연합후방지역조정관(CRAC)임무, 전투력 복원절차 등을 컴퓨터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연합전시증원연습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군은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작전사급 부대가 참가하고,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 증원부대 등이 참가한다.



▲ Foal Eagle 연습

다. 독수리(FE)연습

독수리 연습(FE : Foal Eagle)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이다.

1999년의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 내 한·미 양국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개되는 증원전력, 연습지역내 행정관서와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습은 후방지역에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침투하는 것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여단 쌍방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연습기간 중 부산/울산 광역시와 경남에서는 화랑훈련을 병행 실시하였고, 2부 연습간에는 군단급 야외기동훈련(FTX)과 한·미 해병대, 해·공군이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다.

라. 환태평양훈련(RIMPAC)

환태평양훈련(RIMPAC)은 1971년부터 미3함대사 주관하에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등 7개국이 참가하여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연합 해상종합 기동훈련이다.

이 훈련은 태평양 연안국 해군 간에 태평양상의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해상분쟁 발생시 공동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안



▲ RIMPAC 훈련시 하퐁 미사일 발사장면 (2000. 7)

국간의 연합작전 능력향상과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우리 해군은 1990년도에 최초로 이 훈련에 참가하여 2000년에는 6회째 참가하였다.

마. 팀스피리트 연습(TS)

팀스피리트 연습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 연합 야외기동 연습이다.

이 연습은 기본적으로 동맹국간의 정기적인 연합연습으로 순수한 방어위주의 훈련이다. 북한은 과거 이 연습을 북침을 위한 공격훈련이라고 비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북한에게도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관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이 연습은 한·미 동맹관계의 확인과 한국 방위를 위한 연합작전 및 군사능력 배양에 필수적인 연습이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다.

바. 압록강 연습

압록강연습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통제하에 실시하는 한국군 자체지휘소 연습으로, 전시를 대비하여 전쟁 수행절차를 숙달하고 작전지휘 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와 작전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매년 5월에 실시한다.

압록강연습시 합참과 작전사의 지휘부는 연습실시단으로 연습에 참가하고 기타 부대 및 기관은 대응반과 대행반을 구성하여 자대 지휘소 및 전투모의본부에서 위게임 모델에 의해 연습을 실시한다.

합참은 압록강연습을 통해 작전지휘 및 참모활동 절차와 전시전환 절차를 숙달하고 제대별 작전계획을 시행하여 전시 전투력 복원절차와 전시 지원소요의 산출 및 지원 체제를 발전시켰으며, 특히 1999년 연습시부터는 지휘소 자동화체계(C4I)를 연동하여 운용함으로써 연습성과를 향상시켰다.

사. 호국훈련

호국훈련은 1996년부터 합동참모본부 주관하에 해안축선과 내륙축선에서 육·해·공군 합동으로 작계 시행 위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대부대 합동훈련이다. 2000년 호국훈련은 동해안 및 중부내륙 축선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이 훈련을 통해 기능별 전투발전 소요를 도출하여 보완하였고, 국



▲ 호국훈련

내용누락



▲ 육군의 화생방 방호 훈련

관에게 과감히 위임하여 자율과 창의성 있는 책임제 훈련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훈련장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권역별로 통합훈련장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대항군과 마일즈장비를 이용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을 설치중에 있다.

나. 해군

해군은 대잠전, 대함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 및 특수전 등 각종 해군 성분작전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초계함급 이상의 함정은 대잠전과 대공전 및 전자전 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모든 수상전투함정은 적의 대규모 해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규전 위주의 입체적 종합기동훈련에 중점을 두고 공방전 위주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실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상륙전 함정은 상륙돌격 및 상륙기습훈련을 통해 상륙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뢰전 함정은 적의 기뢰부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해능력과 기뢰부설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특수전부대는 해안정찰, 기습타격 및 생환훈련을 통해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잠수함부대는 항만봉쇄와 대잠전 및 수상세력 감시와 어뢰발사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항공부대는 함정과 협동으로 해상 초계작전 및 대잠전훈련과 함께 레이더 탐지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적에 대해 대함 미사일 공격을 유도하는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입체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해군은 1993년부터 연 1회 해군의 전 가용전력과 육·공군부대가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종합기동훈련을 실시하여 다중위협 상황하에서 복합전 개념에 의한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적의 고속상륙세력을 이용한 특수작전부대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수상·수중·항공전력의 입체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해군은 연합 해상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해군과의 연

합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미 연합훈련도 내실화하여 한·미 해군간 연합작전체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편, 주변국가와의 군사훈련 및 훈련 참관단 교환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해군사관학교 생도 순항훈련과 같이 우리 군함이 외국을 방문할 경우와 외국 군함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각각 연합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의 향상은 물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해병대는 상륙전력의 일부로서 연합 및 단독 상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육·공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 공군

공군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훈련을 실제 전장과 전투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대공 훈련으로는 침투하는 적기를 가능한 원거리에서 탐지·식별·요격·격파시킬 수 있도록 주·야간 요격훈련, 공중 전투 기동, 공대공 사격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공대지 훈련으로는 적의 전략적 시설과 주요 군사력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저고도 침투 후 전술사격 및 야간·전천후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공군(방공포사)의 혹한 극복 훈련



▲ 해군의 해상 기동 훈련

또한 전자전, 탐색구조, 전술공수, 정찰훈련 등을 병행 실시하고 육·해군의 작전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근접항공 지원훈련과 한·미 연합 방공, 연합 공격편대군훈련 등을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제3장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2000. 3)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과제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5조)에서도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평화상태 구축시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4자회담을 추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

하고 있는바, 4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관련국인 미·중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3월 9일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경제 회복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책 추구, 이산가족 문제해결,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등의 4대 과제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및 장관급회담 등을 통하여 남북간 각종 교류·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정전체제 유지와 판문점 장성급회담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정전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정전체제란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지되는 체제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무력충돌 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측이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 이후 군정위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군정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에 합의한 이후에도 북한·중국측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철수시키는 등 정전체제 가동을 거부하면서 1995년 3월에는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하여 미국과 북한간 장성급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유엔군 사령부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전체제의 틀 내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화창구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 2월 유엔사와 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오므로써 1998년 6월부터 1999년 9월까지 11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은 정전협정 이행문제를 다루는 회담으로 유엔사측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대표들은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회담은 그 동안 발생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충돌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위기관리 채널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1999년 6월 연평해전이 발발하자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다루기 위한 미·북간의 실무협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유엔사측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 한 판문점에서 일체의 접촉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은 정전협정 규정과 기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인도해 오던

한국전 미군 유해를 미국이 직접 인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대화 및 접촉상대에서 배제함으로써 유엔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미국과의 직접접촉을 통하여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전협정’ 규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상태가 구축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군사정전 위원회와 그 틀 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성급회담, 그리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2. 4자회담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정전협정 제60항에서는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는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쌍방은 1953년 10월 정치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1954년 제네바에서 6·25전쟁 관련 20개국이 모여 회담을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이후 정전체제는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남북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다가 1974년부터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 이후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자 북한은 1994년 4월에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미·북 평화협정의 체결을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한·미 정상은 1996년 4월 16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한,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개최’를 공동 제의하게 되었는바, 4자회담은 6·25전쟁의 주당사자인 남북한이 합의하고 관련국인 미·중이 함께 지지하는 형식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평화구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한·미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수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1997년초 4자회담을 위한 공동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해 11월 제3차 예비회담에서 4자회담 의제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라는 단일 의제로 할 것과 제1차 회담을 1997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과 1998년 3월 2차례의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한국·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 차이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즉 한국과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문제협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우선적으로 논

의되고 협상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1998년 10월에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참석자들은 ‘긴장완화분과위원회’와 ‘평화체제구축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고, 1999년 1월에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는 이들 2개 분과위원회를 처음으로 가동시켜 ‘분과위원회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각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에 개최된 제5차 회담과 8월에 개최된 제6차 회담에서는 2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4자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제6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4자회담의 실질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회기가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확신 아래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보장하는 방식의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3.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

가. 남북정상회담

정부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며 나아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화해협력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흡수통일을 배제하며,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



▲ 남북정상회담 (2000. 6)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간의 접촉과 대화를 활성화하고, 경제적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활성화 하는 등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2000년 3월 9일에는 이른바 ‘베를린 선언’을 통하여 ‘북한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추구,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개최’ 등의 4대 실천과제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우리의 일관된 ‘화해협력정책’ 과 ‘베를린 선언’ 으로 북한은 점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신뢰를 갖게 되었으며 마침내 남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남북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 에 합의하게 되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간의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을 보장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 의견 접근을 본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 결단이 있었고 둘째, 탈냉전의 시대조류와 한반도 평화분위기 성숙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대내외 정책을 조정하고 대남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셋째, 남과 북이 상호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 상호간의 입장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보려는 생산적인 대화를 모색하였고 넷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화해협력정책’ 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다섯째, ‘화해협력정책’ 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의 최초의 만남으로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구현하고,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 및 통일문제 협의의 계기가 되었다. 또 이 회담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과 호혜적인 남북협력 관계 증진에 합의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도 합의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능하게 한 전기가 되었다.

나.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1, 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간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남북 군사 당국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는바, 남과 북의 군이 과거의 불신과 대결로부터 이 땅에 확실한 평화를 보장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6·15남북공동선언’ 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간 ‘화해·협력·평화’ 분야의 균형된 진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북한측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마침내 9월 1일 평양에서 개최

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북한측은 9월 13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조성태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9월 14일 우리측은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9월25일에서 26일 사이에 홍콩에서 개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상호 관심사도 함께 논의하고자 답신하였다. 이에 북한 측은 9월 17일 회담장소를 제주도로 할 것을 수정·제의하였으며, 9월 18일 우리측은 북측제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전달함으로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가 최종적으로 합의되었다.

9월 24일 오후 대표 및 지원인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북한측 군사대표단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 남으로 내려왔으며, 회담은 25일과 26일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에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성태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하였으며, 양측은 회담결과를 ‘공동보도문’으로 공식화하였다. 회담 이후 북측 대표단은 26일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였다.

이번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성과 및 의의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분단 이후 남과 북의 군 당국 책임자가 처음으로 직접 만나 회담을 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북한이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대미 협상만을 주장해 왔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이 이번 회담에 응한 것 그 자체가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하나의 전기라 할 수 있다.

둘째, 양측 국방장관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이다. 쌍방은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



▲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0. 9)

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 군사당국간 대화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보다 확실히 보장됨으로써 그 동안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 위주로 이루어지던 남북관계가 군사차원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남북간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점에 양측 국방장관이 공감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외에 선언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남북 군 당국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문제, 군인사 교류, 대규모 부대 이동 및 훈련통보·참관, 군사정보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조치 이행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평화정착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간 당면 현안인 경의선 철도 복원 및 개성-문산간 도로 개설은 공사와 관련된 군사적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하는바, 이와 관련한 안전보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다섯째,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일정구간의 개방이 불가피한바, 남북국방장관이 이와 관련된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정전협정의 법적, 실질적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그 조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여섯째, 쌍방이 2차 회담을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군사당국간 대화가 사실상 정례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향후 계속될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협의·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개선은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라는 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축을 중심으로 병행(two track)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장관급회담 등이 교류·협력의 주요한 통로라면, 남북국방장관회담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는 주된 창구가 될 것이다.

향후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남북 군사당국자간 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추호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2000. 9. 18



▲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개성-문산간 도로 개설에 합의하였는바, 국방부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뢰가 매설된 임진강 북단지역의 9.2km에 대한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 각각 추진위원회를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부추진위원회'는 공사관련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통제와 정부 부처 및 대외기관과의 협조, 유엔사와 대북협회의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육군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육군추진위원회'는 공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육군은 지뢰제거 및 공사부대에 대한 경계와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공사 임무를 1군단에 부여하는 한편, 육군건설단을 창설하여 철도 및 도로 노반공사 임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는 바, 현재 총 8개대대 2,700여명이 본 공사에 투입되어 있다.

국방부는 본 사업이 '6·15공동선언'에 따른 남북당국간 첫 협력사업으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 된다는 인식하에 군의 전역량을 집중하여 최단기간내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뢰제거 작전 및 공사 추진간 안전사고 방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북측과의 충돌사태를 방지하고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내 공사와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철도·도로 개설이 완료될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깊게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첫째, 도로 건설에 따른 군사적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국방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둘째, 철도 및 도로가 전술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다양한 봉쇄 및 거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셋째, 철도와 도로가 고속접근로로 이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기, 공격헬기, 포병, 보병 및 대전차화기를 통합하여 차단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4.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은 전쟁포로를 교환하였으나 북한측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상당수가 자발적 의사확인에 의한 포로교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남게 되었다. 유엔사는 1960년대 초반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측에 이들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이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1994년 국군포로인 조창호 소위의 극적인 귀환에 이어 1997년에 1명,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3명, 그리고 2000년에 8명 등 국군포로가 연이어 귀환함으로써 국군포로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6.25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국군포로들에 대해 국가의 본분과 도리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 국군포로 모두가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북한측에 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차원에서 북한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군포로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실종자로 관리해오던 24,000여명을 전사처리함으로써 유족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군포로 귀환시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대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였다.

셋째, 1999년 1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군포로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유관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넷째, 전국 9개소에 민원 신고소를 설치하여 한국전쟁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국내 연고자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군포로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이를 기꺼이 정책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한반도 군비통제

군비통제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국 또는 잠재 적국과의 정치·군사적 협의를 통해 군사적 불안정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국가안보 전략이다. 따라서 군비통제는 신뢰구축 및 안보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적대국의 군사위협 동기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낮은 수준에서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여 상호 공격능력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둔다.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안정적 군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를 포함한 남북간 군비통제에 호응할 경우 능동적으로 협의,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1. 남북한의 입장

북한은 그 동안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군비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주로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군비통제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 군비축소, 후 신뢰구축’의 원칙하에, 단기간 내의 급격한 병력감축에 치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보다는 정치·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을, 단계적인 타결보다는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등 군비통제 추진의 일반적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남북 군비통제를 모색해왔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적 공존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비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의 군비통제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의 군비통제정책 기초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선 신뢰구축, 후 군비축소’의 기초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호 체제의 인정과 불가침 및 내정 불간섭의 이행을 통하여 남북 당국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각 분야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적 차원에

서는 상호 군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군사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시킴과 아울러 기습공격 능력을 제한·제거함으로써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군비통제정책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시키고 한반도 공동안보체제의 구축을 이룩하여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군비통제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남북 군비통제는 한반도 문제의 남북한 당사자간 직접 해결의 원칙하에 남북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북한은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와 쌍무협상을 통하여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둘째,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남북간에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과정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이미 합의되어 있으나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기본합의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등 한반도에 절실히 필요한 군비통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 합의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남북 군비통제 추진의 방법이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 기초한 세부 이행사항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활용하여 협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체제로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셋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신뢰구축, 군비제한, 군비축소 등을 융통성 있게 배합 추진한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로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 여건이 상당 수준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군비통제 추진에 대한 남북한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추진 상황에 맞추어 단계적 군비통제 조치를 유연하게 제기·협약할 예정이다.

즉,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방안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군인사교류,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연습의 통보 및 참관, 군사정보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 등 기초적 신뢰구축조치 외에도 무기 및 병력

의 동결을 통한 군비경쟁 중단 조치의 강구 및 시범적 군축 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



▲ 북한 경수로사업 부지 정지 공사

북한의 핵, 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 프로그램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안보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조속히 군비통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요구된다 하겠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 및 관련 핵시설 해체, 폐연료봉 봉인 후 해외 이전 등 북한 핵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대가로 1,000메가와트(MW) 경수로 2기 제공, 경수로 제1기 완공 시까지 연간 중유 50만톤 제공, 남북대화 재개와 경제제재 완화 등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미·일·EU 등이 참가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었고, 1995년 12월 15일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1997년 8월 북한의 신포에서 부지공사가 착공된 후 지금까지 경수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46억 달러에 달하는 총사업비의 분담률에 대해서도 한·미·일간에 협상이 완료되었으며, 경수로 제1기 건설완료시까지 대체연료로 지원되는 중유도 계속 북측에 인도되고 있다.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북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폐연료봉 8,000여 개에 대한 봉인작업도 2000년 4월에 종료한 상태이다. 경수로 건설비용의 70%를 담당하는 한국은 앞으로도 북한이 기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경수로 지원의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에 명시된 대로 핵개발의 동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과거 핵 문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및 사찰의무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남북 대화의 진전에 따라 1992년 1월 20일 발효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가입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지침 준수 등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이 보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스스로의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줄 때 현재의 남북관계 개선을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와 이를 통한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개선, 국제경제기구 가입 등 경제협력 증진의 여건이 마련되고, 나아가 스스로 UN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북한에 전달되었지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국제 통제체제를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판단이다. 앞으로 우리는 화해·협력 및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참여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운용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제4장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외 군사정책

제1절 한·미 동맹과 우리의 안보

한·미 양국은 지난 반세기의 냉전기간 동안 한반도의 평화보장이라는 공통 전략 목표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없는 동맹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국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조성된 안정적인 안보환경하에서,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양국은 확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초로 하여 화해협력정책 추진을 위한 완벽한 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9월 제 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도 양국은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유지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며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국방장관회담 (2000. 3)

한·미 양국의 안보 동반자 관계는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해 커다란 기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한·미 동맹의 배경과 의의

한·미 양국은 1882년 5월 ‘조·미 평화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처음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888년 미국이 4명의 통역장교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양국간 군사관계의 효시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의 군사협력관계는 1945년 9월 패전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진주하

면서 본격화되었으며, 곧이어 발발한 6·25전쟁은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가 양국의 안보정책과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의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이듬해인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침략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본 틀로서, 한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과 정부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 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한·미 안보협력 및 연합방위체제 발전

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양국은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발생을 계기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68년 5월 워싱턴에서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모두 32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71년 제4차 회의 때부터는 명칭을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바꾸면서 외교부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안보차원의 회의로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회의는 국방장관 회담을 중심으로 한 본회의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5개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분과위원회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개최 이전부터 모임을 갖고 의제 선정 및 협상방향을 상호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제32차 SCM 단독회담 (2000. 9)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의 위임을 받아 ‘군사위원회(MC)’에 전략지침을 하달하며,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는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군사위원회’의 본회의는 ‘한·

미 안보협의회의'에 앞서 개최되며 그 결과는 '안보협의회의'에 보고된다. 군사위원회 상설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관련된 군사 현안문제를 협의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장관의 정기적 회담이라는 상징적 의의가 중요시되어 왔으나 1980년대 말부터는 한·미간의 주요 안보현안을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질적인 정책협의 기구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는 한·미 연합군사령부(CFC)로서, 이는 1977년 7월 26일 제10차 SCM에서 합의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권한위임사항(TOR)'과 1978년 군사위원회회의에서 하달한 '전략지시 1호'에 근거를 두고 같은 해 11월에 창설되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미 연합사의 창설로 한국전쟁 당시부터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해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12월 1일부로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 부대에 행사했던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평시에 한·미 연합군사령관은 한국 합참의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항(CODA)에 대해서만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유지는 종전대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와 연합군사령부는 상호 지원 및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3.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우리 정부는 1991년부터 우방국들의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수준 및 한국 방위에 대한 주한미군의 기여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동반자적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중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1991년에 체결된 제1차 방위비협정(SOFA 특별협정)에서는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용중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1/3을 분담토록 한 바 있다. 이어서 한·미 양국은 1996~1998년 3년간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후속 SOFA특별협정을 체결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995년 지원액 3억 달러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액은 3.99억불에 이르렀으나

1997년 말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한국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3.1억불로 조정되었다. 이어서 한·미 양국은 1999년도 이후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정을 1999년 2월 25일에 체결하였다. 동협정에 따르면 1999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 2,575억원과 미화 1억 4,120만 달러로서 미화로 환산하면 약 3억 3,300만 달러이다. 아울러 2000년과 2001년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되도록 하여 우리의 부담능력을 위주로 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00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999년 합의액 대비 9.78% 증액되어 약 3억 9,100만 달러이며, 2001년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중에 있다.

4. 제반 한·미 현안의 해결 추진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기본적인 활동은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지의 설치와 훈련으로 인해 주변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일원으로서 한국 방위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주한미군의 기지 운영과 훈련으로부터 파생하는 여러 형태의 국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 동맹의 관리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한·미 동맹과 국민 모두를 위한 국익차원의 상생(相生)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 주한미군으로 인한 일부 문제점의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SOFA 개정 문제는 타국에 비해 불리한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의 개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관계 당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매향리 미공군 폭격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00년 8월부터는 기총사격 훈련을 중단하고 불발탄 처리를 제한하는 등 획기적인 소음 경감 및 안전 제고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타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한·미 양측은 SOFA 합동위원회 등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0년간 한·미 양국의 공동안보를 위해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안보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에 따른 상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2절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대외 군사교류 및 협력

1. 대(對) 주변국 군사외교 발전

우리 군사외교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우방국들과의 군사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특히, 일본·중국·러시아와의 군사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지역안정 및 국제평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이러한 군사외교활동은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폭 넓게 발전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이를 통해 조성된 우호적인 외교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변국에 대한 군사외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99년에 이어 2000년에도 주변 4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한·미 동맹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일본·중국·러시아와 균형된 군사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가. 대 일본 관계

한·일 양국은 1966년 주일 한국 무관부 개설과 1967년 주한 일본 무관부 개설이후 군사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1990년 이전에는 군 인사교류 및 군사학교 학생 교환방문 등 주로 인적분야의 교류를 실시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군사교류를 다양화하고 제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방장관회담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양국의 외무·국방관계관이 함께 참가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국방정책실무회의, 정보본부와 각 군간의 정보교류회의 및 방공실무회의 등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9년에는 국방부와 일본 방위청간, 해군과 일본 해자대간, 공군과 일본 공자대간에 긴급연락채널이 설치되었으며, 합참·통막간 부장급 회의와 해군 대 해군회의가 최초로 실시되는 등 군사적 대화 채널이 다양화되었다. 특히, 1999년 8월에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정 및 항공기가 참가하여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순수 평화목적의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였다.

2000년 5월 동경에서 실시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지역안보에 긴급하며, 양국간 군사교류를 증진시켜



▲ 국방장관 일본 방문 (2000. 5)

나가는 것은 한·일간 군사적 신뢰증진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한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막의장간 상호 교환방문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을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000년 3월에 일본 방위대학교에 처음으로 우리 공사생도 1명을 위탁교육 파견한

데 이어, 2001년부터 육·해사 생도 각 1명을 추가 파견 교육시키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일본과의 군사교류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양국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우호증진은 물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나. 대 중국 관계

한·중 관계는 1992년 수교후 8년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21세기를 향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한·중 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군사관계는 1993년에 주중 한국 무관부, 1994년에 주한 중국무관부가 개설된 후 꾸준히 발전되어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군 체육교류는 1992년부터 군인 체육선수단의 상호교류를 시작하여 1999년에는 상무 축구 및 농구 선수단이 방중하였고, 중국 핸드볼과 해군 조정선수단이 방한하였다. ‘한·중 국방학술회의’는 1999년 북경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반도 및 지역안보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

또한, 군 교육기관간 교류로는 1999년에 최초로 중국군 낙양 외국어학원에 3명의 장교를 파견교육 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군 교육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군사교육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군사 교육기관 교류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조성태 국방장관은 6·25전쟁 이후 우리 국방부장관으로서 처음으로

1999년 8월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츠하오티엔(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최초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군사관계를 달성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양국 군간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현저히 기여하였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한국 해군참모



▲ 중국 국방부장 방한 (2000. 1)

총장이, 8월에는 합참의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한국군 4성 장군급의 공식 방문으로서 양국 군 고위급 인사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1999년부터 한·중 군사관계는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균형 발전과 '21세기 한·중 협력적 동반자 관계'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대 러시아 관계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1990년 9월 국교 수교 및 1991년 양국 무관부 개설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군 고위급 인사 상호교류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1994년 5월 한·러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5회의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군 총장이 러시아를, 러시아에서는 국방장관 및 각 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군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9년부터는 양국 휴가장병들이 연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한·러 군사관계는 주로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4년부터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즉, 1994년 '해상 사고방지 협정', 1996년 '군사협력 양해각서', 1997년 '군사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 과 1998년 '휴가장병 상호 방문 양해각서' 를 각각 체결하였으며, 현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해상사고 방지협정 이행협의회' 와 '국방정책실무회의' 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0년 5월에는 ‘한·러 국방장관회담’이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러시아는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 한·러 국방장관 회담 (2000. 5)

또한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해군 함정간 순수 평화적 목적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강원도 주최 ‘2000 세계 평화 팡파르’에 러시아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러시아와의 군사관계는 인적교류, 제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군사교류협력의 다변화 추진

우리 군은 군사 교류 협력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교류 협력의 내용과 범위도 확대 시켜오고 있다. 각국과의 군사 교류 협력은 무관부 운용, 군 인사 상호방문, 군사 교류 협력회의, 군사교육·학술교류, 함정상호방문, 방산기술 및 군수협력, 군사협정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1999년 10월 베트남 국방차관의 방한에 이어, 2000년 4월에는 우리 국방차관이 베트남을 처음으로 방문하여 양국 군간 교류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군수·방산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함정 교환방문, 군사교육 교류 등의 협력을 통하여 군사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이후, 1999년 11월에는 몽골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유럽지역은 주로 영국·프랑스·독일을 중심으로 군 고위급 인사교류, ‘국방정책 실무회의’ 및 ‘군수·방산 공동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9년 1월에

는 프랑스 국방장관이 방한하였으며, 영국·프랑스·독일과는 2000년 2월에 ‘군수·방산공동위원회’를, 3월에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통하여 방산분야 협력사업 및 양국 국방정책 등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하였다. 또한 1968년이래 독일 육사에 우리 사관생도를 위탁교육 파견한데 이어 2000년부터는 프랑스 육사에도 우리 육사생도 1명을 위탁교육시키고 있다.



▲ 프랑스 육사의 우리 육사생도

1999년 11월 우리 국방장관이 최초로 터키를 방문하였고 2000년 6월 터키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국전을 계기로 맺어진 혈맹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방산협력 및 교육교류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중동지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에 무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1999년 9월에는 쿠웨이트 국방장관이, 2000년 10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방한하여 상호 안보 관심사와 양국 군간 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양주 지역과는 한국전 참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군사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1996년부터 외교·국방 관계관이 함께 참석하는 정치·군사협의회, 1997년부터는 국방정책실무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99년 3월에는 호주 국방총장이, 5월에는 호주 국방장관이 각각 방한하여 상호 안보관심사 및 양국군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0년 2월에는 양국 해군간 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어 해군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한 뉴질랜드 무관부는 1998년 4월 개설되었다. 1999년 5월에는 뉴질랜드 육군총장이 방한하였고, 6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제1차 ‘한·뉴질랜드 정치·군사



▲ 한·호 해군회의 (2000. 2)

협의회'와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7월에는 우리 국방차관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상호 안보관심사 및 양국 군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도 1998년 11월에는 호주, 뉴질랜드와 각각 '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제3절 우리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1. 평화유지활동 개관

평화유지활동(PKO)은 크게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과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1948년 예루살렘 정전감시단(UNTSO)을 시작으로 지난 50여년간 118개국 80여만 명이 53개 PKO 임무에 참여하였으며, 2000년 8월 말 현재 코소보, 동티모르 등 15개 지역에서 87개국 37,400여명의 군 및 경찰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기구 또는 특정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독립국가연합(CI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의 기구들이 지역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1990년대에는 타지키스탄, 시에라리온, 코소보, 동티모르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평화유지활동에는 군, 민간경찰, 선거감시요원, 유엔 및 국제기구, 각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기관이 참가하며, 군 요원은 통상 평화유지군(PKF)과 군 감시단의 일원으로 참여한다. 평화유지군은 유엔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내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하고, 군 감시단은 비무장으로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감시하며 순찰, 조사,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 주도하의 평화유지 활동 경비는 유엔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의 경우는 대부분의 비용을 해당 파견국이 부담하게 된다.

2.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1992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한



▲ 동티모르의 상륙수부대

[도표 2-10]

한국의 PKO 참여 현황

서 부 사하라	의료지원단 20명	1994. 9~	6개월	322명 1- 4진 : 42명 5- 6진 : 20명 7진 : 14명 8-12진 : 20명
인 · 파	군 옵서버 9명	1994.11~	1년	47명
그루지아	군 옵서버 3명	1994.10~	"	27명
동티모르	보병대대 419명	1999.10~	6개월	836명
	사령부 참모 12명	2000. 1~	1년	12명
	동부여단본부 13명	2000. 2~	6개월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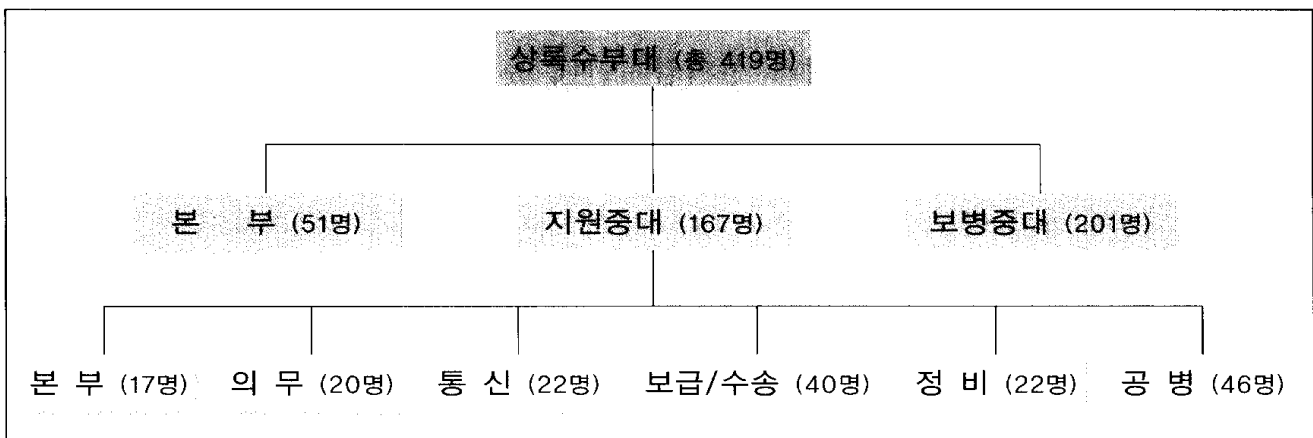
이듬해인 1993년 우리 군은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이래, 6개 지역에 2,360여명의 병력을 파견해 왔으며, 2000년 8월 현재 4개 분쟁지역에서 476명이 평화의 사도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1999년 8월 30일 ‘동티모르 자치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권자의 78.5%가 독립을 지지하였으나, 독립을 반대하는 민병대가 심각한 유혈폭력사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9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동티모르 다국적군’ 창설을 승인하였고, 유엔 사무총장과 다국적군 주도국인 호주가 우리 군의 파병을 공식 요청해 왔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전개에 동의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지 치안유지활동을 위해 보병(201명)을 주축으로 수송·보급, 통신, 의무

[도표 2-11]

상륙수 부대 편성



등 지원요원을 포함하여 총 419명으로 파견부대를 편성하여 '상록수부대'로 명명하였으며, 상록수부대는 1999년 10월 22일 동티모르 로스팔로스지역에 전개하여 치안유지 업무를 개시하였다.

● 동티모르 파병 의의 및 성과

상록수부대는 1999년 9월 28일 국회의 파병승인을 얻은 직후, 호주에서 현지적응훈련을 마치고 동년 10월 22일 현지로 전개되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2000년 2월 1일 유엔평화유지군(PKF)으로 전환되었다.

상록수부대는 엄정한 군기를 유지한 가운데 기동순찰, 주요시설 경계, 상주작전 등 치안유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함은 물론 주민진료, 대민지원, 구호품 제공 등 구호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에 현지 주민들은 상록수부대를 '다국적군의 왕'으로 칭송하면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유엔평화유지군사령부 참모장을 비롯한 25명의 참모요원들도 성실한 근무자세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다.

우리 군이 동티모르 다국적군 및 유엔평화유지군에 상록수부대를 파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한국전쟁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국가로서 이제는 우리가 유엔의 일원으로 국제평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의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의료·공병 등 지원부대 위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우리군 최초로 보병부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파병과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동티모르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나.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활동

유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료지원단은 1994년 9월 제1진을 파견한 이래, 2000년 8월 현재 제12진 20명이 활동 중이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유엔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내 유일한 단위부대로 유엔요원에 대한 1단계 의료지원, 능력초과 환자의 상급 병원시설로 후송, 24시간 응급환자 조치, 현지 사령부에 대한 방역과 식품 및 수질 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파견요원은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28,000여명의 유엔요원에게 성실한 진료를 제공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있다.

다. 군옵서버(Military Observer) 활동

2000년 8월 현재 우리 군은 인도·파키스탄 유엔정전감시단(UNMOGIP) 및 그루지아 유엔정전감시단(UNOMIG)에 각각 9명과 3명의 영관급 장교를 군옵서버로 파

견하고 있다. 이들 2개 지역에 파견된 우리 군 장교들은 현지사령부의 통제하에 정전협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순찰, 조사·보고, 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가. 평화유지활동(PKO) 상비체제 참여

평화유지활동 상비체제는 유엔 회원국이 평시 자국의 특정부대와 장비 등을 평화유지활동용으로 사전 지정하고 일정 수준의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유엔의 요청시 합의된 반응시간 내에 신속히 공여하는 제도이다. 1995년에는 불과 35개국이 상비체제에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나, 2000년 3월 현재에는 88개국으로 증가되었다. 한국이 1995년 3월 유엔에 통보한 상비체제 요원은 약 800명 정도이나, 향후 국제사회의 안보상황과 UN PKO정책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더욱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표 2-12] 한국의 PKO 상비체제 참여규모

군종별 참여 규모	540명	지역별 참여 규모	11명
육군	130명	북부지역	10~15명
해군	70~80명	남부지역	36명

나. PKO 교육체계 발전

우리 군은 1993년부터 북유럽의 유엔교육대(UNTC), 폴란드, 아일랜드 등 해외 PKO교육기관에 장교를 파견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해왔으며, 1995년부터는 캐나다 피어슨 평화유지교육원(PPC)에 장교 및 관련 공무원을 연수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5년부터 합동참모대학을 군옵서버 및 참모요원 등 간부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1998년 5월 PKO학처를 출범시켰으며, 특전사 교육단을 PKO부대단위 교육 전담기관으로 육성하여 보병·공병 등 파견요원의 교육을 내실있게 할

[도표 2-13] PKO 해외교육파견 현황

북구국 UNTC	군옵서버(3주)	1993~1997	9
스웨덴	참모과정(3주)	1993~1997	5
노르웨이	군수과정(3주)	1993~1997	3
폴란드	군옵서버(3주)	1996	1
캐나다	단기과정(2~3주)	1995~1999	32
아일랜드	옵서버/참모(3주)	1997	1

계획이다.

다. 유엔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우리 군은 1995년 3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소령급 장교 2명을 유엔 PKO사무국에 파견한 바 있으며, 1999년 12월 유엔 한국 대표부에 군사담당관을, 2000년 1월에는 PKO사무국의 기획장교를 각각 파견하여 유엔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제4절 국제 안보협력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 참여

1. 지역 및 다자 안보협력대화 참여

탈냉전 후, 아·태 및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부분적인 군비축소를 통한 교육, 복지 등 사회개발비 확충노력 요구와 경제위주 정책추진 등으로 군 병력의 일부 감축 등 군축 및 군비통제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궁극적으로 지역안정과 평화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 국가들의 노력이 지역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비통제 체제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인종, 종교, 자원, 환경 문제 등의 다양한 갈등요인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 상이한 안보 인식으로 인해 아직까지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한 지역 군비통제의 합의점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한 지역 군비통제 노력이 역내 안정 및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은 물론 남북한 평화공존, 한반도 군비통제 및 통일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가. 아·태지역의 다자안보협력대화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대화로는 정부차원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과 민간차원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1994년 7월 출범하여 현재 2000년 7월에 가입한 북한을 포함 23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다자안보협력대화체로서 외무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ARF-SOM)를 비롯하여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

등을 통해 역내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신뢰구축조치, 재난구호, 초국가적 범죄(해적, 불법이민, 소형무기 불법거래 등) 전문가 회의, 예방외교 발전 등 각종 논의를 통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ARF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국방정책서 발간, 국방정책 발표, 국방백서 발간/배포,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CAR) 참여 및 연례 제출사항 회람, 지역국가간 쌍무 안보/군사 대화, 고위 국방인사 및 군사훈련 교류, 군축/비확산체제(NPT, CTBT, CWC, BWC, CCW 등)를 합의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신뢰구축조치는 1~2년 내 추진할 단기과제인 바스켓 I 과 중·장기과제인 바스켓 II로 구분하여 추진 중이다. 현재 바스켓 I에는 군수 및 군법분야 교류협력,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협력, ARF 활동 홍보, 해적 퇴치에 관한 워크숍, 신뢰구축 세미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세미나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바스켓 II에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 마약퇴치 및 차단 세미나 개최, 군사분야 환경보호, 국가간 범죄인 단속 등을 포함한 법적 지원방안 모색, 국제 테러리즘과 범죄 관련 협력, PKO 세미나, 아·태 안보에 관한 합동 워크숍, 예방외교에 관한 외무 및 국방관리 워크숍, 전쟁법 세미나, 재래식 무기에 관한 세미나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2000년 10월 30~31일에는 초국가 범죄 전문가회의가, 11월 1일~3일에는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ISG-CBMs)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동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 외에도 ARF는 해양안전, 해양 법·질서, 해양환경 보호·보존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아울러 예방외교활동의 지속적 발전을 촉구하면서 회기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993년 6월 발족한 CSCAP은 역내 다자안보대화를 통해 국가간 신뢰를 증진하고 정부차원의 안보협력을 지원·강화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안보대화체로서 현재 남북한을 포함하여 2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 대화체는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정책 건의 형식으로 AR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예방외교 분야의 개념과 원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대화

1990년부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다양한 안보협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 정부는 1994년 5월 ARF 고위관리회의(ARF-SOM)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참가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를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일부 국가들의 소극적 입장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역내 국가들과 다자안보협력대화체 설립에 관하여 협의

내용누락

우리 정부는 2000년 NPT 평가회의 참석을 통해 핵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CTBT가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 요건국(5대 핵 보유국을 포함하여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44개국)의 조기 서명·비준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IAEA의 핵사찰 활동 및 '전면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내 여러 분야에 전문가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나. 화학무기 통제

1997년 4월 29일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이전, 비축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30일 이내에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신고한 후 현장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 동 협약에는 2000년 9월 현재까지 171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39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7년 4월 28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하였다. 동년 5월의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OPCW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1998년 11월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아 1999년 4차 당사국 총회까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차, 3차 및 4차 당사국 총회에 이어 2000년 5월 개최된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는 북한의 CWC 협약가입을 통한 화학무기위협 해소를 위해 전세계의 모든 화학무기 보유 추정국이 협약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OPCW가 노력해야 한다는 '보편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OPCW 본부에 우리나라의 영관 장교 4명이 고위직 간부 및 국제 사찰관 요원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화학분석실은 1998년 11월 OPCW의 '공인 화학분석실'로 지정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생물무기 통제

1975년 3월 26일에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는 2000년 9월 현재 145개국(한국 : 1987년 6월, 북한 : 1987년 3월)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BWC의 이행여부를 감시할 검증체제가 결여되어 있어



▲ ADD 화학분석실

회원국들은 정부전문가회의(VEREX), 특별그룹(Ad hoc group)회의 등을 개최하여 검증체제 구축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1996년 12월 BWC 제4차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에서 제5차 평가회의(2001년) 시점에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서방그룹들은 2000년 말 또는 늦어도 2001년 초까지 검증의정서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 및 작용제 선정, 방문 및 사찰제도, 그리고 기술협력 등 일부 사안에 있어 서방 그룹과 비동맹국가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 나라는 제네바 대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소 요원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특별그룹회의 및 평가회의에 파견하는 등 생물 무기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라. 미사일 통제

오늘날 대량살상무기의 개념은 핵 및 화학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 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통제는 대량살상무기 통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 차원의 미사일 통제체제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 수출통제를 전제로 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 (MTCR)가 유일하다.

MTCR은 1987년 미국·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이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부품·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최종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출범하였으며 현재 3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MTCR은 민간 항공우주산업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공격용 미사일의 확산을 저지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MTCR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아직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미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제반 조약과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1993년부터 MTCR 지침을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한국이 MTCR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마. 재래식무기 통제

최근 국제분쟁지역에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살상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재래식무기 통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소형무기 및 지뢰에 대한 국제적 규제 논의가 유엔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을 중

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3년부터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UN의 '재래식 무기 등록제도'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에 참여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7개 무기체계의 수출·입 현황을 매년 UN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의 무분별한 이전 방지를 목적으로 1997년에 출범한 바세나르체제에 참여하여 해당 통제 품목을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에 반영하여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인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뢰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면서 1980년에 체결되었던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의 제2부속의정서(일명, 지뢰사용 금지 의정서)가 1996년 5월에 개정되었다. 개정안은 탐지가 불가능한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동 폭발 및 자동 무능화 기능의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지뢰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CCW 제2부속의정서 개정만으로는 지뢰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오타와 협약을 채택하였다. 오타와 협약은 1999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00년 9월 현재 전세계 139개국 이 서명하고 107개국 이 비준하였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인지뢰 전면금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특수한 안보 상황하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방어 수단인 지뢰의 사용을 당장에 전면 중지하고 단시간에 보유지뢰를 폐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타와협약'에는 바로 참여할 수 없고, 대인지뢰 대체수단이 개발된 이후에나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통일 후 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협력과 기술지원의 획득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UN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다 융통성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에는 2000년도 내 가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예외적인 대인지뢰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넓혀 나가는 동시에 대인지뢰의 대체수단 획득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여 백

제3부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

- 제1장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 제2장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한 국방 투자사업
- 제3장 21세기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 제4장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 제6장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여 백

제1장 국방중기계획과 국방예산

제1절 국방중기계획

1. 국방중기계획의 성격

국방부는 미래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 건설방향을 모색하며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라 업무를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 단계로 나누어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국방중기계획은 기획관리제도상 계획단계의 핵심문서로서, 향후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한 다년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시킨 국방운영의 청사진이다. 이것은 기획단계에서 제시된 중·장기 안보정세 전망과 국방정책 목표, 군사력 건설 소요 및 국방가용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작성된다.

이렇게 수립된 중기계획은 기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핵심고리로서 국방개혁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구현하는 출발점이며, 당해년도 예산편성과 부대의 증·창설, 개편·해체계획과 인력운영 및 정원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2. 2001~2005 국방중기계획

2001~2005 국방중기계획은 제한된 국방재원을 감안하여 필수적인 전력투자 및 정상운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우선 순위를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방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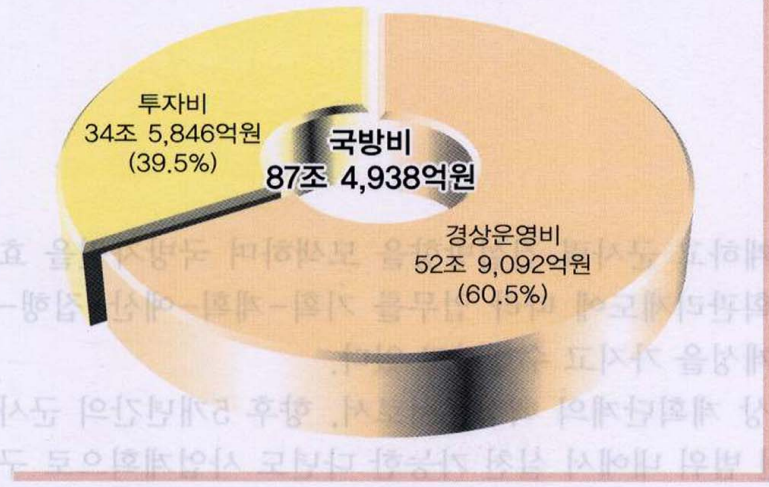
2001~2005 기간 중 국방 가용재원의 규모는 정부의 '2000~2004년 중기재정 계획' 과 연계하여 연평균 정부재정 증가율 수준인 6%를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향후 5년간 총 가용재원은 87조 4,938억원으로서 GDP의 2.6%, 정부재정의 16.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재원의 분야별 배분은 실질적 전력증강 소요를 우선 반영하여 투자비 비중이 2000년도 37.0%에서 2004년에는 39.5%가 되도록 계획하였다(도표 3-1 참조).¹⁾

1) 2000년부터 기존 운영유지비에 반영되던 수리·부속 등 장비유지비 및 획득비를 '투자비'로 전환하고 장비획득에 수명유지 관리개념을 적용하여 장비의 경제적 유지관리 및 가동률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비의 연차적 증가는 현대 및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의 조기 확보와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장비유지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도표 3-1] 2001~2005 국방재원 배분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 중 먼저 투자비 분야는 C4I체계의 핵심 기반체계 구축, 감시 및 전자전 대응능력 향상, 전차성능 개량, 공격헬기 도입, 한국형 구축함 및 이지스급 구축함(KDX-II/III), 차기전투기, 차기유도무기(SAM-X) 양산, 선진국 수준의 군사기술 축적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KF-16 추가생산 등이 반영되었다.

경상운영비 분야는 국방정보화, 과학화 훈련장 설치, 환경보전시설, 병영기본시설 및 간부 주거시설 개선, 교육기관 시설개선, 국방전문요원양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등이 반영되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차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대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조립식 건물 및 컨테이너 활용을 확대하고 고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방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제2절 2000년도 국방예산

2000년도 국방예산은 첨단 정보·과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전력의 구축,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한 군 숙소 확보 및 급식비 인상, 그리고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훈련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기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1. 일반회계예산

2000년도 일반회계 국방예산은 총 14조 4,390억원으로 1999년도보다 5.0%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편성예산은 도표 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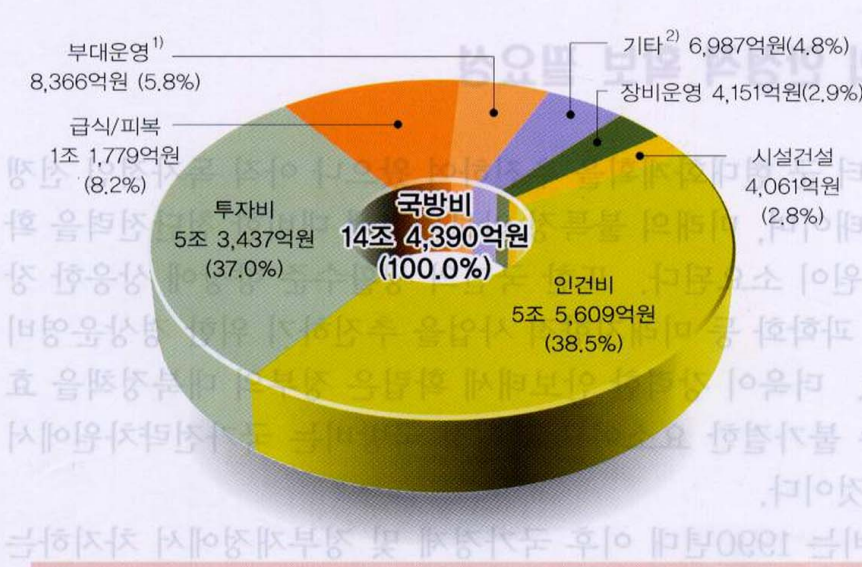
투자비는 1999년보다 2.2% 증액되었으나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도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²⁾ 이는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라 인건비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투자비의 가용재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도표 3-2] 2000년도 국방예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1999 예산		2000 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국방비	13조 7,490	100.0	14조 4,390	100.0	6,900	5.0
투자비	5조 2,304	38.0	5조 3,437	37.0	1,133	2.2
경상운영비	8조 5,186	62.0	9조 953	63.0	5,767	6.8
· 인건비	5조 298	36.6	5조 5,609	38.5	5,311	10.6
· 사업비	3조 4,888	25.4	3조 5,344	24.5	456	1.3

투자비 배분은 한반도 안보전략 환경에 부합되는 고도 정밀무기체계 및 첨단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한 정보화·과학화의 핵심전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공군의 투자비 증가율을 육군보다 높게 하였다.

[도표 3-3] 2000년도 국방예산의 기능별 배분 현황



※ 1) 부대 운영 : 시설유지, 물자획득, 전산/정보, 주둔군 지원 등
2) 기타 : 교육훈련, 예비전력관리, 연구기관운영, 기본사업비 등

경상운영비는 전년도보다 6.8% 증액되었으나,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1.3%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전문인력 양성과 국방정보화 및 과학화 훈련 등은 미래지향적 분야에 가용재원을 중점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하였다.

2) 1999년의 '투자비'는 2000년부터 변경된 '투자비' 개념을 적용하여 종전의 '방위력개선비'를 전환, 계상한 것임.

2. 특별회계예산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는 군인연금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다.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현역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부담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소요를 충당하는 데 쓰이고 있다. 2000년도 군인연금특별회계는 처우개선과 연금지급 인원 및 퇴직일시금 지급 소요 증가 등으로 1999년도보다 463억원이 증액된 1조 593억원이 편성되었다.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도심지에 있는 군용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부대를 교외로 이전하는 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2000년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34개의 군용시설이전사업과 민원해소를 위한 군 사용사유지 매입비로 2,414억원을 책정하였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국방홍보원(舊. 국군홍보관리소)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서 185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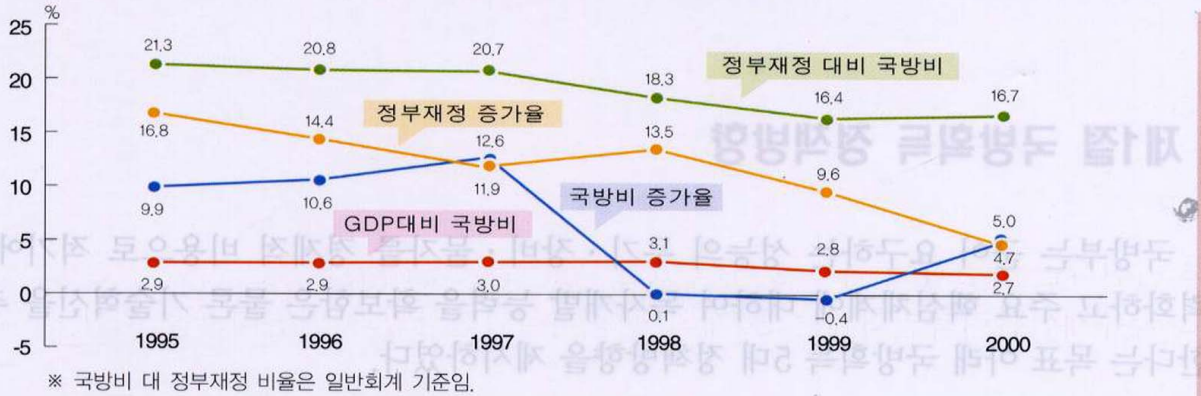
제3절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

우리 나라는 1970년대부터 군 현대화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 독자적인 전쟁억제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래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상응한 장비 복지 개선과 군 정보화·과학화 등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운영비 소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더욱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적정 국방비는 국가전략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는 1990년대 이후 국가경제 및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하여 2000년도에는 GDP의 2.7%, 정부재정(일반회계)의 16.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더라도 1998~1999년간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인해 정부재정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물가 및 환율 상승을 고려한 국방비의 실질구매력은 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국방비 부담률(GDP의 2.7%)은 경제력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안보여건에 있는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의 GDP

[도표 3-4] GDP/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증가율 비교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평균 11.3%로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며, 싱가포르와 같이 당면한 안보위협이 거의 없는 국가도 GDP의 5.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군은 주어진 재원으로 최대의 전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 절감과 국방관리의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체의 절감 노력만으로는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방대한 군사력 건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 전문인력 양성 및 군 구조개선 등에 10년 이상의 선행기간(lead-time)이 소요되는 군사력 건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GDP의 3% 이상의 국방 재원이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³⁾

3) 한국국방연구원, 「중·장기 국방비 수요판단」(1997), 「중·장기 국방가용자원 판단체계구축」(1999) 등 참조

내용누락

내용누락

제2절 국방획득업무 제도발전

군은 무기도입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하여 1999년에는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1. 사업추진 과정의 공개

업체가 무기체계 개발, 생산, 입찰 등 군의 획득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득사업에 대한 정보확보가 필수적이거나,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군 기밀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특혜 의혹을 사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7월 국방획득사업 비밀 분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밀로 분류해오던 국방획득사업 관련 사항을 '일반'으로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장비명, 총수량, 사업기간, 일반성능 및 제원, 연도별 물량, 자금총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략비익무기사업 및 연구개발업무 등 필수분야는 비밀로 분류하되 최대한 등급을 저하시키고, 업체의 사업 추진에 긴요한 중기계획 등 비밀문서는 공개용 발췌본을 별도로 작성하여 조달본부와 방진회 등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관련 업체 및 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명확한 설정 및 사전공지

기종결정, 도입방법 결정 및 업체선정 등은 무기도입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군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하여도 탈락자는 항상 결과에 대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요소 및 기준을 참여업체에 사전 공지하고, 평가결과 및 의사결정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이 제도는 기종 및 도입방법 결정, 시험평가, 업체선정 등 비교평가가 요구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요소와 기준 및 절차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국방부, 합참, 소요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관련 부서와 기관의 전문인력이 참여한 공개토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제안요구서(RFP) 등을 통해 참여 업체에 사전 공지된다.

3. 비용정보 검증능력 강화로 고가구매·예산낭비 의혹 방지

무기의 고가구매로 인한 예산낭비 의혹은 대부분 비용/가격정보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석 및 검증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다. 이와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원화된 비용/가격정보의 수집·분석·축적·분배·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비용분석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전문적인 비용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등 비용/가격정보 분석·검증 능력을 강화시켰다.

4. 업체와 군간의 정보교류 양성화

업체와 군간의 정보교류는 정보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이 미약하고, 업체접촉을 금기시하는 군의 풍토로 인해 업체의 홍보 또는 사업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와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체가 정당하게 군에 정보를 제공하고, 군이 업체의 정보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업체와 군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다. 정보 요구 및 수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호 교류되며, 필요시 정보제공 요구/수집을 위한 표준양식을 공시하여 자료수집이 공식화된다. 또한 업체의 무기제품/기술정보 설명회 등 각종 기회들을 활용하여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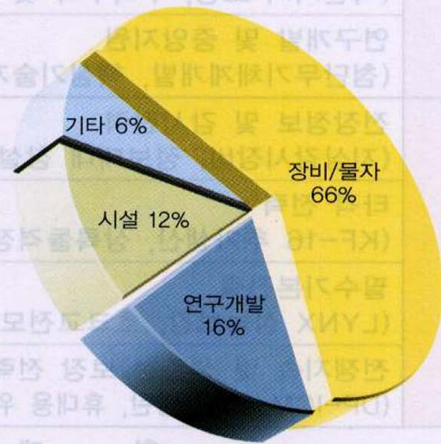
제3절 국방투자사업 추진현황

1. 1999년 국방투자사업 결산

[도표 3-5] 1999년도 국방투자사업비 용도별 현황

1999년 국방투자사업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환율과 물가의 불안정, 방산업체의 기업구조개선작업 및 노사분규에 따른 경영난 악화, 채권 관리단의 지불보증 기피와 Y2K 전산장애 발생 대비를 위한 업체의 업무 조기종결 등 다양한 집행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상적인 투자사업의 예산집행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따라 투자사업은 가급적 외자구매사업을 내자구매로 전환하여 국내 고용안정과 방산업체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 결과, 1999년도 국방투자사업의 실투자비는 3조 7,612억원이었으며, 이를 장비/물자, 연구개발, 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하면 도표 3-5와 같다.

2. 2000년 국방투자사업 계획

가. 투자비 규모

국방비 총액 14조 4,390억원 중 투자비 규모는 5조 3,437억원(37.0%)으로서 1999년보다 1조 6천여 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그러나 2000년도부터 경상비 분야에 포함되었던 수리부속 및 정비비 1조 5천여 억원이 투자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33억원(2.2%)이 증가된 규모이다.

2000년도 투자사업은 현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21세기 무기체계의 자주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2000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도표 3-6과 같다.

[도표 3-6] 2000년도 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

구분	사업내용	사업수(개)	예산액(억원)
계속사업	전장 정보 및 감시전력 (신호/영상정보 수집장비, 감시레이더, 야간투시경 등)	17	2,271
	타격 전력 (대구경다련장, 잠수함, 구축함, KF-16전투기)	34	1조 3,167
	필수 기본전력 (K-9 자주포, 전술통신체계, 소해함, 제2MCRC 등)	5	1조 2,475
	전쟁지속 및 생존성 보장전력 (작전기지 보강,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 각종탄약 등)	90	1조 7,026
	연구개발 및 중앙지원 (첨단무기체계개발, 핵심기술개발, 방위비분담 등)	38	6,550
신규사업	전장정보 및 감시전력 (지상감시장비, 정보대대 창설)	2	42
	타격 전력 (KF-16 추가생산, 상륙돌격장갑차 등)	4	1,355
	필수기본전력 (LYNX 성능보강, 호크교전모의기, 고정형 TACAN 등)	5	141
	전쟁지속 및 생존성 보장 전력 (DP-ICM 성능개량탄, 휴대용 위치식별기, 잠수함 훈련장비 등)	4	410
합 계			5조 3,437

나. 2000년도 주요사업계획

(1) 지상전력

중심표적 타격이 가능한 230미리 대구경다련장 추가확보사업, 종합 통신 지원을 위한 격자형 전술통신체계(SPIDER), 지상전술 C4I 체계, K-9 155미리 자주포,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 등을 계속 추진하고, 한국형 지뢰살포기, DP-ICM 성능개량, 휴대용 위치식별기, 과학화전투 훈련통제단 창설, 3탄약창 확장 등의 사업을 착수한다.



▲ K-9 155미리 자주포



▲ 209급 잠수함



▲ KF-16 전투기

(2) 해상전력

대형수송함, 한국형 구축함 KDX-II 1차, 209급 잠수함, 소해함 1,2차 건조사업과 PCC 대함 능력보강 및 잠수함 지휘통신 체계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KDX-II 2차, 차기잠수함, 국내 개발한 상륙돌격 장갑차 확보 사업 및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SM-II/SAAM, 적어뢰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예인음탐기/어뢰음향 대항체계 등의 사업을 착수한다.

(3) 공중전력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CN-235 중형수송기 도입, KT-1 기본훈련기 국내 양산, 노후레이더 교체, 활주로 재포장, 무인정보체계 등을 계속 추진하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 차원의

KF-16 추가생산, 항공승무원 야간투시경, 조종사의 전자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자전 훈련장비 등의 사업을 착수한다.

(4)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은 한국여건에 맞는 장기소요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첨단핵심기술분야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며, 주요 체계개발 사업으로는 전투기 외장형 전자전장비, 해군전술자료분배체계(KNTDS), 제2공군방공지휘통제체계(MCRC) 등 자동화 체계 및 무인항공기, 원격 화학자동경보기 개발 등이다



▲ 무인항공기(UAV)

제4절 국내 방위산업 기반구축

1.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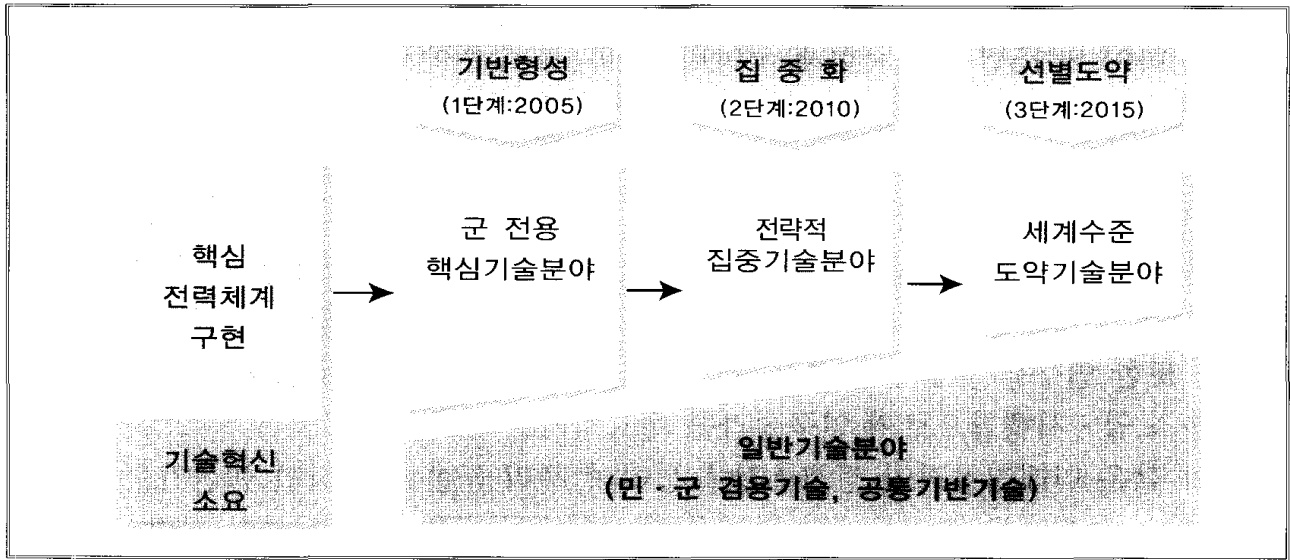
국방연구개발은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설립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를 국산화함으로써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에 치중한 결과 아직까지 첨단핵심기술분야는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군은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한국형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정책목표를 '2015년까지 국방과학기술의 선진권 진입'으로 설정하고, '국방과학기술 선진화 5대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핵심기술소요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도약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1999년에는 '국방과학기술기획서'를 발간하고 '14개 중점추진 무기체계 및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차원에서 집중 개발함으로써 신기술·신개념의 미래 첨단무기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단계적인 집중투자와 개발을 통하여 기반형성, 집중화, 선별도약으로 전환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첨단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타분야는 민·군 겸용기술 및 공통기반기술 등 일반기술분야를 점차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도표 3-7]

단계적 도약 개념



둘째, 핵심기술을 저비용·고효율로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목표 수준별 또는 단계별로 다양한 기술확보 모델을 적용하여 연구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 초기 단계의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실용화 및 개량개발에 착수하는 ‘중간진입’ 기술개발 방식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발기간 및 예산을 대폭 절감토록 하였다.

셋째, 효율적인 기술획득을 위하여 국가의 총체적 과학기술기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책입안에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계를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94년 이후 대학 및 정부연구소에 5개의 특화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은 1998년 4월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기술개발, 기술이전, 규격통일화, 기술정보교류 등 4대 중점사업을 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부터 2년간에 걸쳐 7개의 시범과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1999년에는 총 47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 기술개발위주의 기획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의 기획-계획-개발-적용-환류 등 전과정이 일관성있게 추진되도록 하였고, 개발된 기술은 단순한 기술자료의 축적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방과학기술 DB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관리형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토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연구개발의 장기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비를 점차 확대하여 2015년까지는 현재 국방비 대비 5% 수준에서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설비를 확충하여 정보화기반을 확충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미래전에 소요될 첨단핵심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2000년 3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명실상부한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그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연구원들에 대해 연구개발장려금 지급, 성과급 지급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을 통하여 우리 군은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 국방과학기술 강대국으로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2.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

1973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의 방위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일부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정밀기계 및 중화학 공업분야 등에서는 국내 민수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왔다.

현재 80여개 방산업체에서 330여종의 방산물자가 생산되고 있으며, 매출액은 약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첨단 무기체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무기체계 개발 및 방위산업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기본 병기류에 대한 국내 소요물량은 감소함으로써 방위산업계의 가동률이 50% 수준에 그치는 등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를 위하여 전문화·계열화 제도와 방위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가.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제도 발전

국방부는 1999년 1월에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기술력이 있는 우수업체의 방산 참여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생산설비 및 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높은 분야는 경쟁체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군 소요가 적은 분야는 전담체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전문평가팀에 의한 업체실사를 통하여 전문화 47개 분야의 40%에 해당되는 19개 분야와 계열화 241개 품목의 61%에 해당되는 147개 품목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전문업체도 172개 업체에서 86개 업체로 축소하는 등 전문화·계열화 품목 및 업체를 대폭 정비하였다. 특히 계열화 품목 중 22개 품목은 중소기업보호품목으로 지정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벤처기업간에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방위산업 육성지원 보완·발전

국방부는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1980년부터 1999년까지 1,186억원의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방산업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비축사업과 연구개발사업 자금으로 방산업체에 총 3,211억원을 융자하였다. 2000년에도 원자재 비축 및 연구개발 자금으로 24개 업체에 4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방위산업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조성목표액 3,000여 억원을 조기 조성하고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세금 부과로 인한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관세 등이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도록 방산물자 제세지원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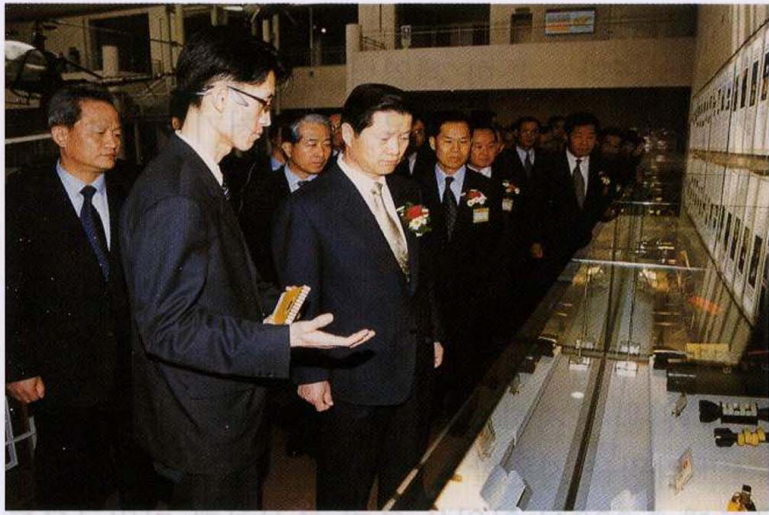
그리고 1999년 3월에는 '방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희 방산설비로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신청에 의해 유희 방산설비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 국제방위산업 협력 강화

국제 방산협력은 방산업계간의 국제협력강화 및 공동생산·협력수출 등 협력 가능사업을 발굴·확대함으로써 우리의 방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입된 무기의 전 수명주기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가격정보 교환·기술자료 교환협정 체결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국, 터키, 프랑스, 인도네시아, 베네주엘라 등 18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종전의 미국 위주 방산협력에서 유럽, 아시아, 남미 등으로 다원화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산수출 대상국가와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방산 수출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해외무관의 수출상담 및 마케팅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방산물자 수출업 자격부여를 종전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산물자 수출시 군 보유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가와의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였



▲ 전쟁기념관 2층에 설치된 방산전시장

다. 그리고 방산수출 홍보를 위한 방산전시장을 전쟁기념관 2층에 설치하여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첨단 무기류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과 1998년도에는 서울국제에어쇼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방산물자를 홍보하고 선진 방산업체들과의 기

술협력사업 발굴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 2001년도에 공군, 항공우주진흥협회, 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개최할 예정인 제3회 서울국제에어쇼에서는 육·해상 방산 장비도 동시에 전시하여 국산 방산물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방산수출을 위한 방산수출홍보관을 전쟁기념관 2층에 설치하여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첨단 무기류를 전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과 1998년도에는 서울국제에어쇼를 개최함으로써 한국 방산물자를 홍보하고 선진 방산업체들과의 기술협력사업 발굴 및 수출확대에 기여하였다. 2001년도에 공군, 항공우주진흥협회, 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개최할 예정인 제3회 서울국제에어쇼에서는 육·해상 방산 장비도 동시에 전시하여 국산 방산물자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제3장 21세기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제1절 정보화 추진방향

국방정보화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구조 전반을 지식·정보중심의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방정보화의 목표는 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지휘통제를 지원하고 평시에는 효율적인 국방자원 관리를 통하여 경제적인 군 운영을 보장하는데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국방정보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단계화하여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분야(5)	중점과제(15)
미래 정보전 수행을 위한 국방통합정보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전/체계통합전 수행을 위한 국방통합 C4I체계 구축 ·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국방통합자원관리체계 구축 · 국방정보통신 기반체계 구축
정보화 조직/인력 개선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CIO 제도 및 조직 활성화 · 정보화 추진 전담조직 및 기능 개선 보완 · 전 장병 대상 정보화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정보화 관련 제도 및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통합 및 공동운영환경 구축 · 국방정보화 사업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 ·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방업무절차 개선(BPR)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능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시뮬레이션 환경 정비 · 분산 시뮬레이션 기반 구축 · 군별, 제대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체계 구축
국가정보화 정책 사업과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 정책사업과 연계 강화 · 국가정보화 인프라 최대 활용 · 정보화 분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1단계는 2005년까지 초고속국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지휘통제체계(C4I), 국방자원관리체계 등 국방정보체계의 핵심체계를 우선 구축할 것이다. 2단계로 2010년까지는 정보기술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능확장 및 체계통합을 통한 시스템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3단계로 2015년까지는 모든 국방정보체계를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체계로 구축하여 세계 10대 정보화 강군을 건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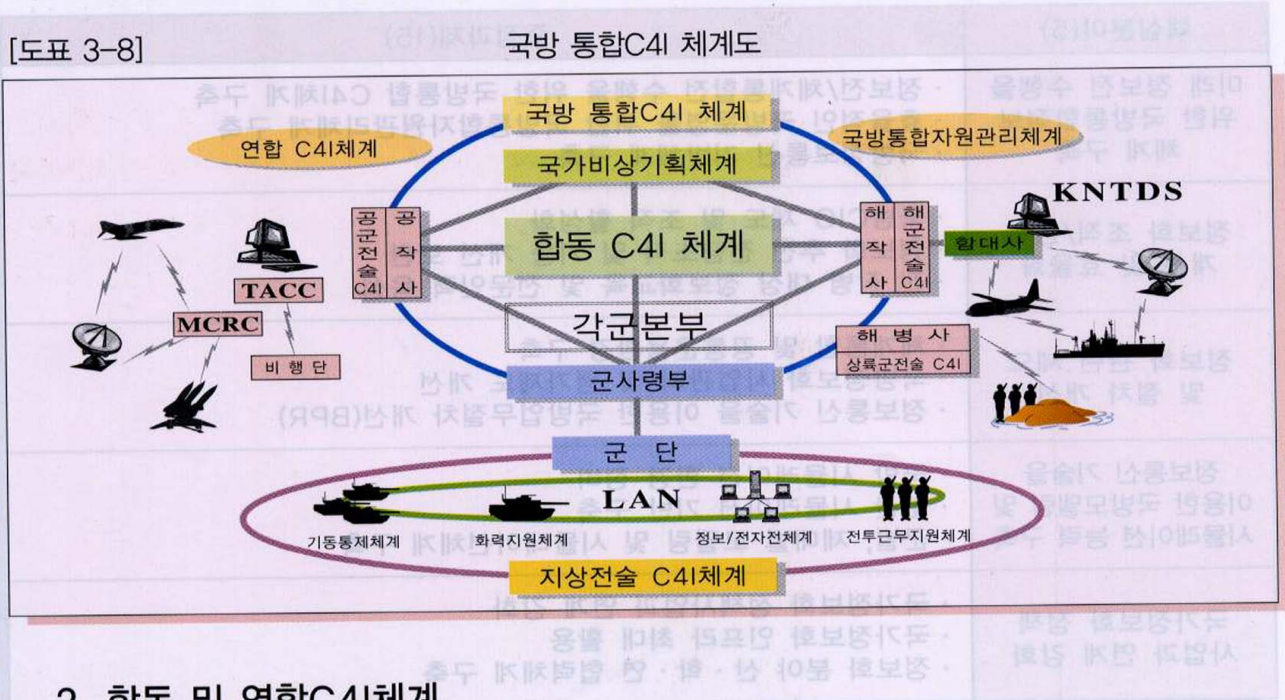
제2절 통합전 수행에 필요한 지휘통제체계 구축

미래 전장환경은 정보기술을 이용한 정보전과 각군 및 기능별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체계통합전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국방통합C4I체계, 합동 및 연합C4I체계와 각군 전술C4I체계를 연계하여 건설 중에 있다.

1. 국방 통합C4I체계

국방 통합C4I체계는 합동C4I체계 중심으로 구축하며 연합C4I체계 및 국가전쟁을 지휘하는 국가비상기획체계와 연동시킴으로써 유사시에는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체계기반 및 공통운영환경을 우선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표 3-8]



2. 합동 및 연합C4I체계

합동 및 연합C4I체계는 1999년부터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의 주요 전략부대의 지휘소기능을 자동화한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합동군사정보체계, 합동작전기획계획시행체계 및 합동위게임체계를 통합하는 합동C4I체계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현재 한·미 연합작전에 운영중인 범세계지휘통제체계(GCCS-K) 및 정보수집체계와의 연동을 통하여 전장에서 정보의 우위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C4I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3. 각군 전술C4I체계

각군 전술C4I체계는 지휘통제체계 중 최하위 체계로 정보수집자산(Sensor)과 타격수단(Shooter)을 실시간에 연결하여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각군 및 전장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기능 위주로 단계화하여 건설하고 있다. 이것을 합동 및 연합 C4I체계와 연동함으로써 모든 정보수집 체계와 무기체계를 상호운용이 가능한 체계로 건설하고 있다.

지상 전술C4I체계는 군단 이하 전술제대의 전장기능을 자동화하여 실시간에 전장을 확인하면서 지휘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 1999년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체계를 구축 운영하였고 그 결과 필수기능 위주로 단계화하여 성능개량과 체계확장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해군 전술C4I체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용중인 해군전술자료체계(KNTDS)의 운용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기능을 보강하여 해상상황을 실시간에 파악하여 통합적인 해상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전술C4I체계로 발전시키고 육군 및 공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군 전술C4I체계의 일부로 현재 운용중인 공군방공지휘통제체계 장비가 한계수명 도래에 따라 제2의 MCRC를 구축하고 2002년에 전력화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술부대에 필요한 지휘통제 및 정보수집체계와 연동하는 C4I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육군 및 해군과의 합동작전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3절 효율적인 국방자원관리체계 구축

1. 국방 CALS 및 EC체계

국방부는 1997년 ‘국방 CALS 컨설팅’으로 시작된 국방 CALS 사업을 통해 군수품의 획득으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수명주기간 업무를 자동화하여 국방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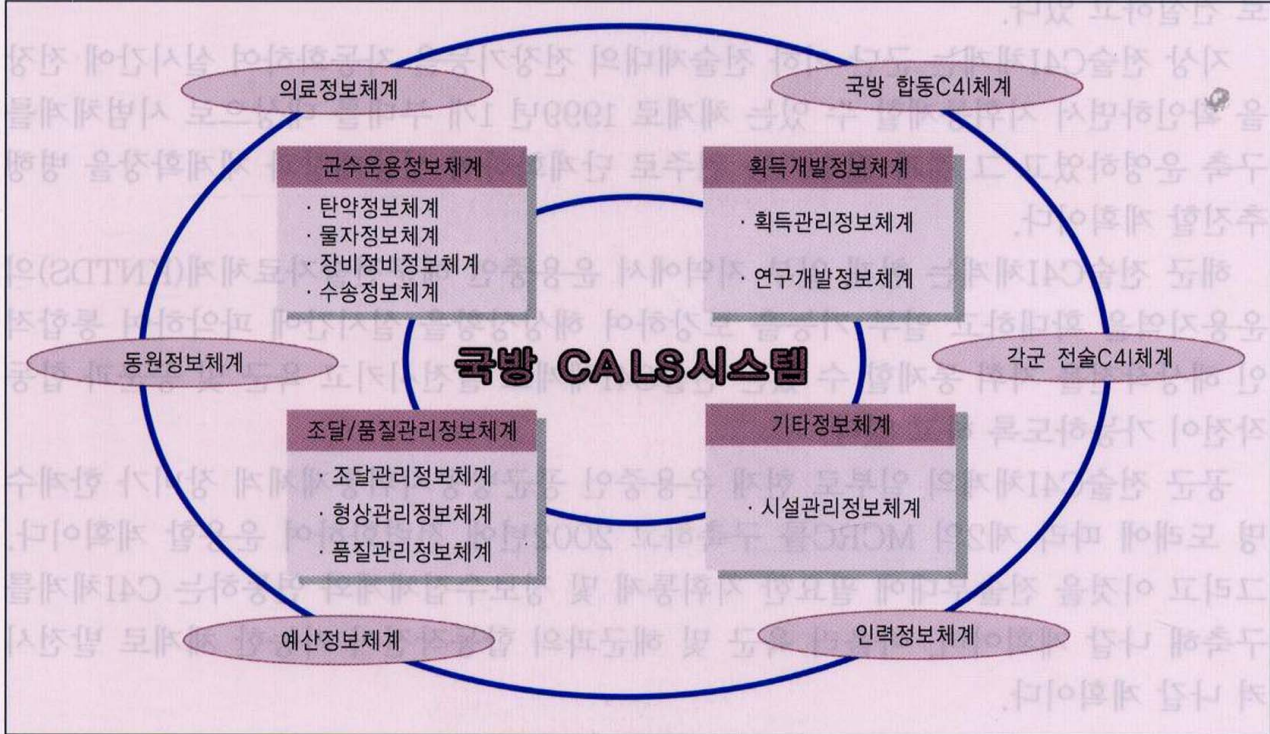
국방 CALS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과 병행하여 업무를 표준화하고 품목관리자를 전산요원화 시키고 있으며, 전산장비 및 전산통신망 구축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야전운영단계의 국방 CALS시스템인 탄약, 물자, 장비정비, 수송, 시설정보체계 등이 구축되면, 물품을 직접 운용하고 처리하는 편성부대로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

지 실시간대(On-Line Real Time)로 업무가 처리된다. 아울러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육·해·공군의 전 제대가 통합된 업무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대에 중요 정보의 열람과 효율적인 군수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경제는 정보기술(IT)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EC)시대로 진입하여 전

[도표 3-9] 국방 CALS목표 체계도



자상거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관 및 기업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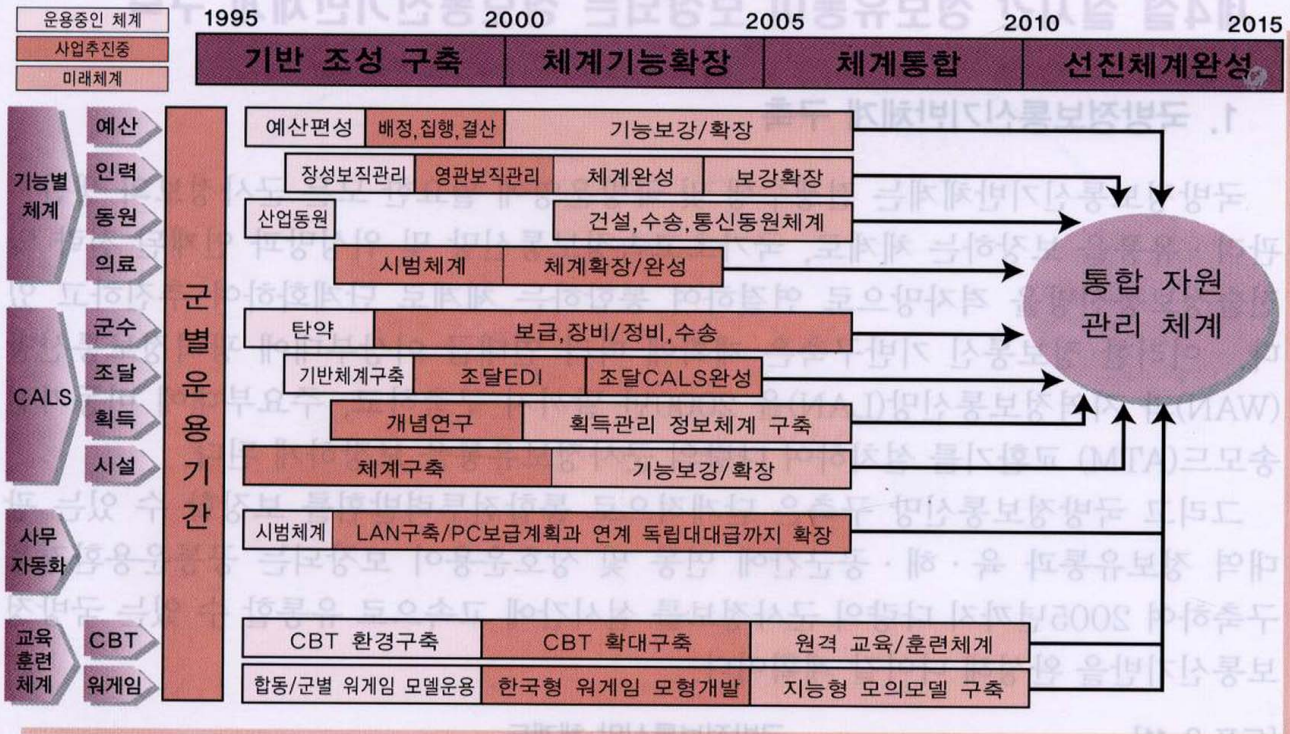
이와 같은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내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정부와 기업간 전자거래 시범사업' 으 로 국방 조달분야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 조달관리 정보체계 (DPAMIS)' 를 구축하고 국방부와 업체, 금융기관과 연계한 자료 공유 및 교환체계를 갖추었으며, 2000년 말에는 '정부통합정보기술관리체계(GITIS:Government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ystem)' 와 연계하여 '조달 EDI(Electronic Data Interface)사업' 을 확대하여 조달 기술정보 서비스, 전자입찰, 웹(Web) 서비스 확대 등의 고객지향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에는 국방 CALS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획득단계로부터 야전 운영단계까지 군 수관련 시스템을 통합하고, 군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국외의 국방관련 각종 정보체 계와 연동환경을 구축하여 전·평시 실시간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2. 자원관리 기능별 체계

국방부는 국방자원을 임무 및 기능체계별로 구분하고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첨단 정보체계를 우선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표 3-10] 국방자원관리체계 발전계획



1995~2007년까지는 기반구축 및 기능확장 단계로 국방통합예산관리체계, 인력관리체계 등을 구축하고, 각군별·기능별 체계(인사, 부관, 법무, 헌병, 감찰, 정보 등)를 확장하여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2007~2010년까지는 이러한 체계를 국방부로부터 단위부대까지 통합체계로 구축하여 운용하게 되며, 이러한 기능별 주요자료를 정책DB로 구축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선진체계를 완성하는 단계로, 국방자원관리 기능별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기능별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3. 사무자동화체계 활성화

국방부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국방 구현과 종이 없는 국방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6년부터 국방사무자동화체계를 채택하여 전군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자동화체계는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웹(Web)환경으로 변환할 계획

이며 2000년까지 사·여단급 부대에 LAN을 설치하고 2004년까지는 연대급 부대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PC보급도 2001년도까지는 사·여단급 부대 행정요원 1인 1대 수준으로 보급하고, 점진적으로 중대급 이상 행정요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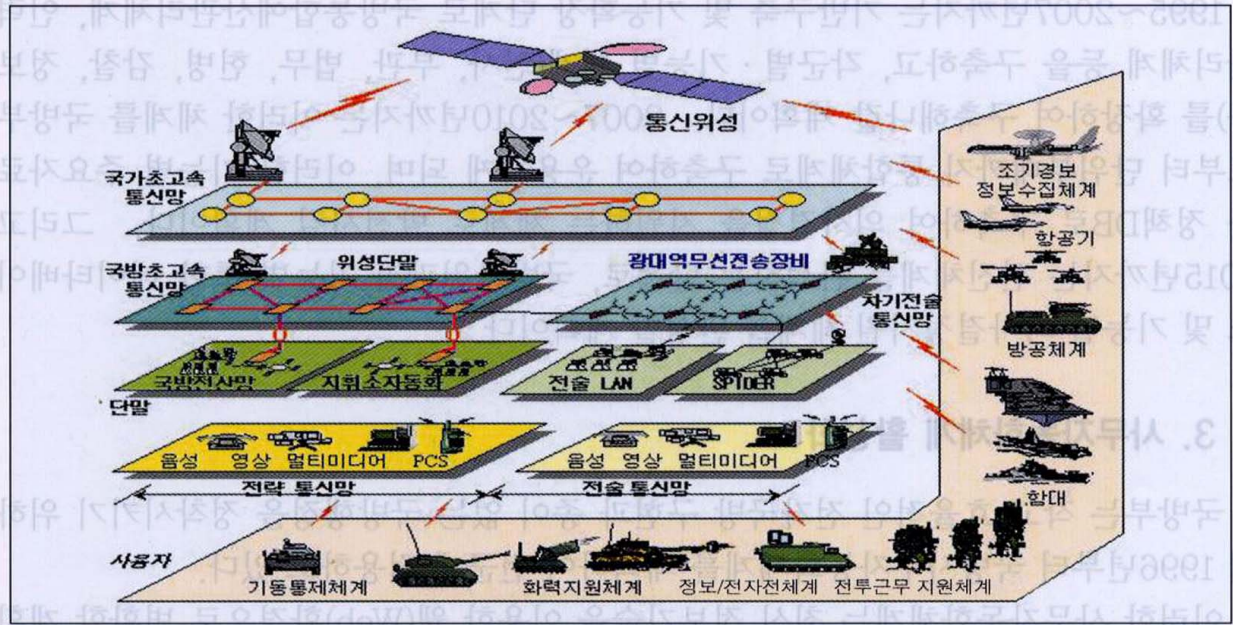
제4절 실시간 정보유통이 보장되는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1.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국방정보통신기반체계는 전쟁수행 및 국방운영에 필요한 모든 군사정보의 생산·관리·유통을 보장하는 체계로,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위성망과 연계된 전략 및 전술정보통신망을 격자망으로 연결하여 통합하는 체계로 단계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계획에 따라 연대급 이상부대에 광역정보통신망(WAN)과 지역정보통신망(LAN)을 2000년 말까지 구축하고, 주요부대에 비동기전송모드(ATM) 교환기를 설치하여 다량의 군사정보유통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국방정보통신망 구축은 단계적으로 통합전투력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광대역 정보유통과 육·해·공군간에 연동 및 상호운용이 보장되는 공통운용환경을 구축하여 2005년까지 다량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에 고속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국방정보통신기반을 완성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표 3-11] 국방정보통신망 체계도



2. 국방정보통신망 보호대책

군의 정보통신 기반체계 발전에 따라 대용량의 군사 정보자료가 유통되고 있어 정보자료 유출 가능성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폐쇄망으로 구축하여 인터넷 및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다. 또한 부대간 통신선로에는 통신용 보안장비를 운용함으로써 자료를 100% 암호화하여 외부선로 중간에서 해킹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PC에는 PC용 보안장비를 운용하여 CD 및 디스켓에 의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향후 인터넷망을 이용한 정보유통량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H/W 및 S/W 보안기법의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주요 통신망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 컴퓨터 긴급대응반(CERT)을 편성하여 각종 컴퓨터 관련 사고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침입탐지/차단시스템을 구축하여 CERT의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전문직위에 대한 특기 조정 및 장병 입대시 관련학과 출신을 선발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교육을 통하여 관련 요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정보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고 있다.

제5절 장병 정보화교육

국방부는 장차전에 대비하여 정예군을 육성하고 국가 정보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부대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정보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사·여단급 이상 150개 부대에 정보화교육장 건설을 계획하여 현재 60여 개의 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0년 말까지 90개의 교육장을 추가 건설하는 등 정보화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0년 4월부터는 1,600여 개의 대대급 부대에 인터넷교육장을 설치하여 연간 27만 여명의 현역 및 전역장병을 대상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800여 개의 중대급에는 PC교육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정보화교육훈련 환경을 구축하여 국방정보체계 운용능력을 배양시키고 정보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도록 원격교육 및 가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장병정보화 교육체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4장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제1절 정예 국방인력 육성 및 관리

국방부는 급속한 국방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방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국방인력관리체계 구축, 국방전문인력 육성, 여군인력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효율적인 인력관리

우리 군의 인력정책 기본개념은 21세기의 전장환경에 부합되는 군사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병력집약형의 인력구조를 기술집약형의 전문인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향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적으로 병력을 운영하되 상비인력은 적정 계급구조를 유지하면서 육군은 감축하고, 해·공군은 증가시켜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인력구조를 미래첨단전력 운용개념과 부합되게 개편하여 상위계급은 줄이고 중간계급은 늘려 부대확장의 신속성을 기하도록 하고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직업성을 보장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국방 전문인력 육성

우리 군은 21세기 국방환경의 다변화와 미래전의 양상에 부합하는 전문인력관리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정책전문요원이 필요한 인사·조직·교육, 정책기획·군사전략·작전, 방위력개선, 군수·조달, 국방관리 분석 등 5개 분야에 대해 세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책전문직위를 설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한 적정 인력구조를 형성하여 획득-교육-보직-진급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정책전문교육은 학위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야전, 정책부서, 학교 및 연구기관을

두루 경험할 수 있게 순환 보직을 하게 함으로써 야전에 바탕을 둔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진급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여군인력 활용 확대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개발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에 따라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위에 대하여 여군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여군인력은 2,085명(장교 및 하사관)이나 2003년에는 3,327명, 2020년에는 7,038명 수준으로 증원하여 간부정원 대비 현재 1.4%에서 5%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도표 3-12] 여성인력 운영계획 (단위: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1999년 12월	2,085	2,021	34	30
2003년	3,327	2,785	134	408
2020년	7,038	5,030	1,023	985

여군장교 획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입학정원의 10%를 모집하고 있으며, 육군은 여군 학사장교를 1999년에 62명을 모집한데 이어 2000년에는 110명으로 그 인원을 대폭 증가시켰고, 해·공군도 여군 학사장교 제도를 신설하여 2000년도부터 해군 15명, 공군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여군하사관은 현재 육군만 운용하고 있으나 공군은 2001년부터 매년 90명, 해군은 2003년부터 매년 40명씩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매년 인원을 확대하여 1999년 360명(하사관 포함) 규모였던 모집인원은 2000년에는 473명, 2001년에는 573명, 2003년에는 669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여군은 남군과 차별 없이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투, 기술, 행정병과 중 여성 특성에 부합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고 법무·군의·치의 분야에도 적극 유치하여 그 보직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여성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하여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직 및 진급 등의 인사관리를 남군과 동등하게 하여 여군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군 최초 전투기조종사 지망 여자 생도

제2절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발전

우리 군이 지향하는 정예강군 건설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확보와 함께 획득된 인력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 발전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선승구전(先勝求戰)의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우리 군은 국방운영의 핵심을 ‘야전군 이하 작전제대는 작전임무 수행태세 완비에 전념하도록 하고, 각군본부 이상의 정책부서는 미래 군을 기획하고 작전제대를 지원’ 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군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전투위주로 사고하고 준비하며 교육함으로써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전쟁에 임한다’는 선승구전의 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교육개혁은 군의 존재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 어떠한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학교교육부터 구비하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기관에 가장 우수한 교관이 보임될 수 있도록 하고 전 학교기관의 교육과목을 야전과 실무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면 개편하는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 국방대학교 창설

국방부는 2000년 1월 기존의 국방대학원과 국방참모대학 및 국방정신교육원을 통합하여 종합교육기관 성격의 국방대학교를 창설하였다. 국방대학교는 국방 최고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산하에 3개 단과대학인 안전보장대학원과 국방관리대학원 및 합동참모대학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단기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직무연수부, 부설 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와 합동교리발전부를 두고 있다.

교육과정은 1년 과정의 기본과정과 2년 과정의 석사학위과정, 각종 직무와 관련된 4~12주의 단기과정 등 총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연간 총 1,400여명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게 된다.

3. 민·군 교육교류 확대

군은 민·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군 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교육 부문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등 군내 학위수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수·교직원 상호교류, 학술정보 상호교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등 기초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학생교류 및 학점제휴 확대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쳐 교류내용 및 수준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대학교는 방위산업체·경제·사회단체 간부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였던 교육을 2000년부터는 민간교육기관 및 학술단체와 일반기업체 간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및 안보는 더 이상 군의 전유물이 아니며 민·군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간 군사전문가 육성을 군이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제5장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직업군인은 군 임무의 특수성상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및 자녀 교육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군인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군인가족 및 전역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직업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

1. 직업군인 처우개선

군의 처우개선은 정부의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르되 군 복무의 특수성과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생 학비보조 및 별거수당의 신설을 추진하고 위험·항공·함정·접적(특수지)지역·장려수당 등을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근 2년여 동안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일부 수당이 삭감 또는 동결되었으나 2000년에는 기본급 및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 추가로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하였다.

2. 군 숙소 확보정책 개선 및 내집마련 대책

직업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등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느 지역에 근무하더라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군 관사를 확보하고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사는 1999년 말 현재 소요(69,374세대)대비 97.3% 보유(67,528세대)하고 있으나 2000년까지는 100%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은 지 25년 이상 된 관사가 9.0%인 6,000여 세대이고, 13평 이하 협소관사가 15%인 10,240세대이다. 군은 2000년부터 이러한 노후·협소관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예산과 자체 조달재원으로 교통·문화·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지역별·도시별로 단지화된 군 관사를 확보중에 있으며, 건립보다는 매입을 적극 확대하여 향후 군 구조 개편시에도 신속성있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한 동거가족의 수·성별·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평형을 다양화(24/28/32평)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자가보유율은 52.3%로 국민평균 주택보급률인 84.2%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직업군인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를 통해 매년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토록 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가. 군 면세제도

군 면세제도는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면세율 인하, 가전제품(에어콘 제외)의 특별소비세 폐지 등으로 실질적인 면세혜택이 감소하여 명목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소비재는 면세물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내구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질적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군자녀 교육지원

직업군인은 군 복무의 특성상 전방·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별거생활 등으로 자녀교육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에 군은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 시설 확충과 특례입학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전국 주요도시 10개 지역 12개 동의 기숙사에 1,868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건립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는 추가소요를 재조사하여 군 자녀 기숙사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특례입학제도를 통하여 2000년에 고려대, 서강대 등 13개 대학에 군 자녀 137명이 합격하였으며, 2001년에는 특례입학대학을 29개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

다. 휴양시설

휴양·레저 지원은 중앙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주요 휴양지에 민간콘도회원권을 추가 확보하여 민간 레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앙휴양시설은 현재 6개소를 운용중이고 건립중인 대전 유성휴양소 외에도 7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콘도회원권은 현재 1,500구좌를 보유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60구좌 이상을 매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제2절 예비역 복지증진 및 예우향상

1. 직업보도 교육활동 및 취업지원 확대

직업군인은 군 계급구조상 50세를 전후하여 대부분이 전역하게 되어 재취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취업분야는 군 관련분야인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취업률은 최근 5년간 평균 전역인원의 29.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하는 직업군인에게 사회 재취업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여, 전역 전 6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직업보도교육기간을 1998년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고 교육비용도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도표 3-13] 1999년도 재취업분야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비상계획관	예비군지휘관	군무원·연구원	복지단·공제회	일반업체
계	1,093	66	476	45	99	407
장 교	860	66	476	45	72	201
준·하사관	233	-	-	-	27	206

※ 장교는 군 관련분야, 준·하사관은 일반업체 취업이 대부분임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군내교육과정, 사설학원과정,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과정 및 창업·자영업 연수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역 전 취업과 연계된 기술·기능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전역 직후 미취업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창업훈련과정 및 보훈연수원 사회적응교육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전역장병들이 무료로 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의 유망직종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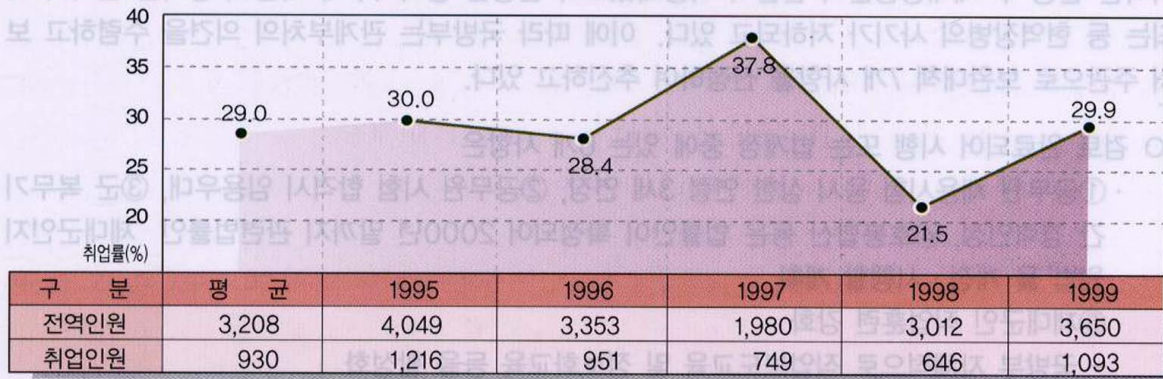


▲ 전역장병 위탁교육

한편 국가보훈처, 비상기획위

원회, 방산 및 군납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 출신 인력의 법정 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와 국방취업지원센터간의 고용정보전산망을 연결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 일반업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표 3-14] 10년 이상 근속 직업군인의 전역 후 취업현황



2. 현역에 준한 복지수혜 확대

군은 1998년에 제정된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라 예비역에 대한 취업·교육·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에는 '참전군인지원법'을 개정하여 6·25 및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보훈혜택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0년 7월부터는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망시 장제비 및 장의용 태극기 지원, 군병원 무료진료, 군 경력 고려 국가자격 취득과목 확대, 제대군인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입법은 되었으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방호·방산·군납업체 등에 전역군인 우선고용직위 지정, 공공기관 건립주택 특별분양, 고공 및 공원요금 감면 등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3. 예비역 기금확보 수익사업 추진

군사문제연구원은 1994년 예비역의 군사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군사문제연구원은 우수 벤처기업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기금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 군필자 가산점제 보완대책

군필자 가산점제는 1961년에 제정되어 4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온 제도로 군복무로 인한 학업 및 생업 중단, 취업여건의 불이익 등에 대해 개인의 권익을 보상하고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99년 12월 23일 여성 및 병역면제자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 후 제대장병들의 반발이 비등해졌으며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현역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훈처 주관으로 보완대책 7개 사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검토 완료되어 시행 또는 법개정 중에 있는 6개 사항은

- ①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 연령 3세 연장, ②공무원 시험 합격시 임용우대, ③군 복무기간 경력인정, ④호봉합산 등은 법률안이 확정되어 2000년 말까지 관련법률인 '제대군인지원법'을 개정·시행할 계획
- ⑤제대군인 직업훈련 강화
 - 국방부 자체적으로 직업보도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을 활성화
 - 노동부 주관으로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계획 등에 반영, 시행 중
- ⑥대학 복학생 학비 대부지원은 예산여건 및 타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무이자 또는 저리 대부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 우선권만 부여하며

○ ⑦국가사회 봉사활동 가점제는 시행에 따른 사회기반 조성 미흡 등의 사유로 보훈처에서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연구·검토 중에 있다.

제6장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비전력은 즉응전력 위주로 유지하면서 예비전력의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는 추세이다.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대규모 상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지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예비전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장차전의 양상은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는 국가총력전이 예상되므로 유사시 예비전력의 효율적인 동원집행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즉각 전력발휘가 가능한 예비전력 육성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및 초전 즉응동원태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동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1절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

1. 인력동원

인력동원에는 전시에 부대 증편 및 창설소요와 손실보충요원으로 현역부대에 동원되어 전투요원으로 활용하는 병력동원과, 군사지원업무인 탄약 및 보급품 운반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전시간로소집, 전문기술이 필요한 장비를 운용하거나 정비하는 기술자를 동원하는 기술인력동원 등이 있다.

군은 1999년 이후 예비전력의 주축을 이루는 병력동원 자원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발전시켰다.

첫째, 읍·면·동 병무조직 폐지에 따라 병무청 병력동원 집행관 요원을 보강하고 동원병력집결지를 조정하여 단시간내 수송이 가능하도록 동원집행능력을 보강하였다.

둘째, 동원소요 대 가용자원을 비교·분석하여 배정지역을 조정하고 군사특기별 자원활용 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병력동원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동원지정시 비적소 특기자 또는 연차 초과자 등의 변동자원에 대해서만 대체지정을 함으로써 부대 및 보직고정을 통해 부대 전투력 향상을 기하고 동원지정시 매년 부대 및 보직변동에 따른 불만을 해소시켰다.

넷째, 손실보충소요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동원자원 소요와 집행을 연계시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다섯째, 항방작전계획과 동원병력집결지 경계계획을 통합하여 전쟁초기 향토방위 능력을 보강하였다.

여섯째, 전시 수행해야 하는 부대임무를 고려하여 부대 증편 및 창설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동원운영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전시동원집행 부담을 해소시켰다.

일곱째, 예비역장교 진급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전시 인력운영계획상 계급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비군 분야에 근무하는 예비역 장교의 근무의욕을 증진시켰다.

군사업무 지원분야에도 단순 노무인력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전문기술인력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중 기술면허·자격 취득자는 우선적으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시에 우편 교부하던 전시근로소집 통지서를 충무3종 사태시에는 직접 교부토록 함으로써 전시근로소집의 효율성을 높였다.

2. 물자동원

물자동원이란 유사시 군의 작전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군이 평시에 운영하고 있거나 전시용으로 비축한 자원을 제외한 부족자원을 국내 민·관의 보유자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장비·시설·용역 등은 사용⁴⁾ 및 수용⁵⁾ 또는 통제운영⁶⁾의 방법으로 동원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소요 동원물자는 산업·수송·건설·통신분야별로 그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부처가 동원하여 주고, 군은 동원된 자원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매년 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분야의 경우 일부 물자가 군이 요구하는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군은 그 부족원인을 분석하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송·건설·통신분야의 풍부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원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동원분야 전산화사업을 1997년 10월에 완료하여 전산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송·건설·통신 동원분야도 전산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시에 미(美) 증원군에게 지원할 수 있는 품목도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동원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4) 사용동원은 일정기간 동원하여 사용하다가 동원해제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장비와 업체를 동원할 때 적용한다.

5) 수용동원은 동원과 동시에 물자 및 업체의 소유권이 소유자로부터 인수기관에 이전 취득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소모성물자 동원시 적용한다.

6) 통제운영은 동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 수리, 가공, 유통과정 등을 통제하는 것이며 통제부분 외에는 업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아울러 동원보상비 지급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전시 또는 실제훈련시 동원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 산업동원

산업동원은 1종부터 9종의 물자와 생산 및 정비업체, 홍보매체, 병원, 주유소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물자의 경우 과도한 군 규격요구로 인해 초기 동원충족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수용 물자 중 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군 규격을 완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송동원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원물자에 대한 실제 생산훈련을 실시하여 동원업체의 전시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아울러 매년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동원능력의 실태를 파악, 동원운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동원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전시에 군 병원을 창설하는 대신 민간병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 동원운영 방법을 사용동원에서 통제운영으로 개선하고, 군 병원 중심의 후송체계를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군과 민간인을 동시에 고려한 의료지원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수송동원

수송동원은 유사시에 군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수송용 장비와 장비의 정비업체, 운송, 하역 등의 업체를 사용동원 또는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군은 상호 보완·협력관계에 있는 수송장비 및 정비업체간의 통합(Package) 동원과 세트(Set)화 동원을 통하여 전시 수송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부족한 수송장비를 동일 지역 내에서 다른 차종으로 대체 동원하는 등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전시 동원능력을 확대하고 전시 부대 창설소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 건설동원

건설동원은 건물, 토지,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정비업체 및 건설업체 등을 사용동원 또는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군 표준장비를 성능이 유사한 민간장비로 대체하고 유사 품목을 발굴하여 동원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 통신동원

통신동원은 위성통신 및 일반통신회선(국제회선, 시외회선, 시내회선)과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사용동원 또는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전시 군사작전 지휘통신망을 신속히 지원하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질의 회선으로 동원지정하고 있으며, 통신동원회선 실제 구성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동원절차를 숙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민간자원 활용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제2절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

1. 향토방위 작전동원

향토방위 작전동원은 전시 또는 평시에 적 또는 반 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향토방위작전 수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수 차례의 개정으로 보완되어 왔다. 1999년 7월에는 1996년 9월 강릉지역의 북한 잠수함에 의한 무장공비 침투 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개정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동원초기 응소율 향상을 위해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동원명령 발령시 도표 3-15의 응소 기준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도록 하였으며,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소속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의무 불이행 시 또는 동원기피 목적의 위장 전출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도표 3-15]

응 소 기준 시간

· 지역내 거주 / 지역내 출타자 (해당 구·시·군 및 인접 구·시·군)	·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6시간 이내
· 지역외 거주 / 지역내 이외의 지역 출타자(사전 신고시)	·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24시간 이내
· 도서지역 / 출어한 어선승선자 등 (사전 신고시)	· 향방동원 발령통지로부터 48시간 이내

아울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예비군 육성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방위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향방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지역예비군의 경우 군 또는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직장의 장이 지원토록 규정함으로써 향방작전 수행능력의 향상을 기하게 되었다.

2. 전투근무지원

향토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전투근무지원을 위하여 예비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분배계획 및 지급절차 등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전투장구류도 즉각 지급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품목별 세트(Set)화하여 분배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졌다.

또한 원활한 예비군 급식지원을 위하여 지역 방위지원본부와 협조하여 식사준비에 따른 각종 취사기구, 운반수단, 연료공급을 포함한 제요소를 사전에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급식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작전지원을 위한 적정 수송수단 및 차량소요대수를 판단하여 방위지원본부와 협조, 관리하도록 하는 등 향토방위작전시 예비군 작전을 위한 전투근무지원태세를 확립하였다.

제3절 예비군자원 관리와 교육훈련

1.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

정부조직의 개편에 의해 읍·면·동의 병무조직이 폐지되고 인구가 적은 동사무소가 통·폐합됨에 따라 예비군 및 동원업무체제 또한 이에 맞춰 정비가 이루어졌다.

우선 읍·면·동장이 수행하던 예비군 편성 및 동원기능을 지방병무청장이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지역예비군중대와 지방병무청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예비군편성과 자원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과 지역예비군중대간 온라인(On-Line) 전산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예비군 지휘관의 선발에 있어서는 체력검정과 현역 복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선발과 연계시켜 성실하고 우수한 자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무 및 생활여건 제고를 위해 예비군 지휘관의 복무실적 등을 고려한 근무지역 변경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휘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휘관 재량에 의거 수시로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예비군 자원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예비군 대상자의 예비군 대원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역하는 부대에서 지방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어 자동으로 예비군에 편성토록 개선하였다. 현재 예비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현황은 도표 3-16과 같다.



2. 교육훈련

과거 수 차례에 걸쳐 국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이 단축되어 왔으며, 현재 1년차와 8년차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훈련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나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예비군 훈련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무년차에 따른 차등훈련으로 임무와 연계된 훈련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련횟수는 감소시키는 대신 훈련단위당 시간은 증가시키고 전시에 개인 및 부대임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훈련과제를 선정하여 실습위주의 훈련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군 복무체계를 1~4년차는 동원예비군, 5~8년차는 향방예비군으로 구분하여 예비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 동원 예비군 전투력 복원훈련

한편 현행 예비군에게 적용해 주고 있는 동원 및 훈련 보류제도는 안보환경과 사회여건의 변화로 일부 직종은 보류의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보류명분이 없는 직종은 폐지시키고, 관련 유사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평시 국가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직종으로 보류대상자를 축소 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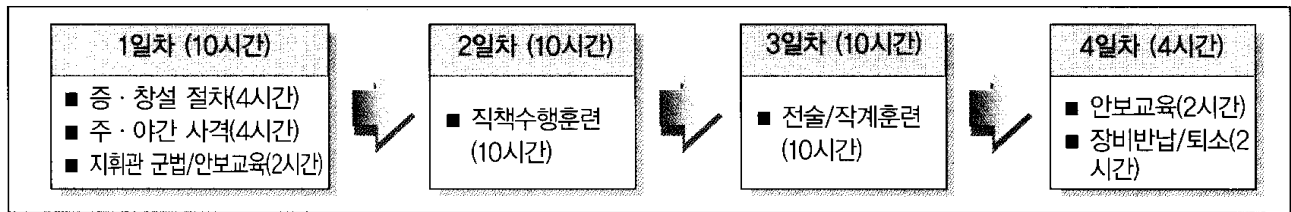
가.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동원예비군으로 지정된 자원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팀 단위 직책수행훈련, 전시 작전계획시행 훈련, 부대 증·창설절차 숙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예비군 교육의 핵심이 되는 훈련이다.

1999년부터는 훈련기간을 연간 3박4일로 연장하고 야간전투, 직책수행훈련 및 전술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훈련기간과 세부 훈련내용은 도표 3-17과 같다.

[도표 3-17]

훈련기간 및 세부 훈련내용



나. 동원 미참가자/동원 미지정자 훈련

동원 미참가자/동원 미지정자 훈련은 2~4년차 동원 미지정자원을 대상으로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간 출·퇴근하면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특히 주특기 및 팀단위 직책수행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병 이외의 각 병과훈련은 해당 병과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다. 향토방위 기본훈련 및 향토방위 작계훈련

향방기본훈련은 5~7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향토방위 작전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임무위주 훈련을 통해 개인 전투기량을 숙달하고 향토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향방작계훈련은 2~4년차 병 자원중 동원훈련 미참가자, 5~7년차 병 자원, 2~7년차 동원 미지정 하사관 자원을 대상으로 향방작계 시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한다.

라.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훈련자 전원이 동시에 순환실습이 가능하도록 예비군 훈련장의 과제훈련장 및 시설물 배치를 조정하여 실습간 유희병력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고 훈련통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흥미 유지를 위해 창의적인 훈련통제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훈련편의시설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동시에 예비군 훈련장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훈련장별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훈련장을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훈련받는 예비군 대원의 중식여건 개

선을 위하여 훈련장별 예비군식당을 건립하고 있으며, 향방기본 및 동원 미참자훈련 참가자에 대해서는 1일 1,500원의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로 훈련을 자율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하여 소속 예비군 훈련장보다 생활권내의 타 부대 훈련장이 훈련받기가 용이할 경우에는 타 부대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200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은 도표 3-18과 같다.

[도표 3-18]

2000년도 예비군 교육훈련시간

(단위:시간)

신규 전역자(간부/병)		100					100	
병	1년차	100				4	96	
	2~4년차	동원지정자	100	34(3박4일)			66	
		동원미지정자	100		32	12	56	
	5~7년차	68			8	12	48	
	8년차	68					68	
간부	1년차	100				4	96	
	2~7년차	동원지정자	100	34(3박4일)			66	
		동원미지정자	장교	100		34(3박4일)		66
			하사관	100		32	12	56

제4부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

- 제1장 국방개혁의 추진방향
- 제2장 국방개혁의 성과
- 제3장 향후 추진계획

여 백

제1장 국방개혁의 추진방향

국방부는 21세기 정보화된 선진형 신국방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방개혁 5개년 계획(1998~2003)'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중·단기과제인 국방조직과 군 구조개편, 방위력개선, 인사제도 및 교육체계 개혁, 국방관리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군개혁을 가속화하고 21세기형 선진정예국방으로 준비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 정보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제1절 추진 목표 및 중점

2003년까지의 중기 국방목표는 장기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축적된 기반을 발판으로 중기 이후부터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2003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국방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기 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국군'
- 둘째,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 직업군'
- 셋째,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 넷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이러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단기적인 국방개혁의 중점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국방환경 및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 군사혁신과 국방의 과학화·정보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 첫째, 한국적 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군 구조로의 개편
- 둘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 셋째,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로의 개선
- 넷째, 효율적 자원운용을 위한 국방관리의 혁신

제2절 추진 경과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 4월 15일 장관직속기구로 발족하여 국방개혁 5개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각군도 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방부와 각군간에 연계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7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착수하였고, 2000년 8월까지 58개 과제 중 총 45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장기적 차원의 미래 국방설계를 위하여 1999년 4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20~30년 후의 미래안보환경과 국가발전추세를 분석하여 국방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전장운영·군사교리, 군사기술·전력체계, 운영체계, 리더십·교육훈련 등의 제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강도 높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위원장을 장관의 국방정보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정보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9년 12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정보화 담당분과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2장 국방개혁의 성과

제1절 군 구조 개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1998년 12월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등 상부기능의 조정 및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조직은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고(부록39 참조),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위사업실과 합참의 시험평가 기구를 통합한 획득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조달, 품질보증 등과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였다.

합참은 신속한 작전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전자참모부와 작전참모본부의 C4I 부를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하였으며, 정보참모본부에 정보융합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사참모부와 군수참모부를 통합하여 인사군수참모본부로 승격시키는 등 합참이 명실상부한 군령의 최고기구로서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작전을 기획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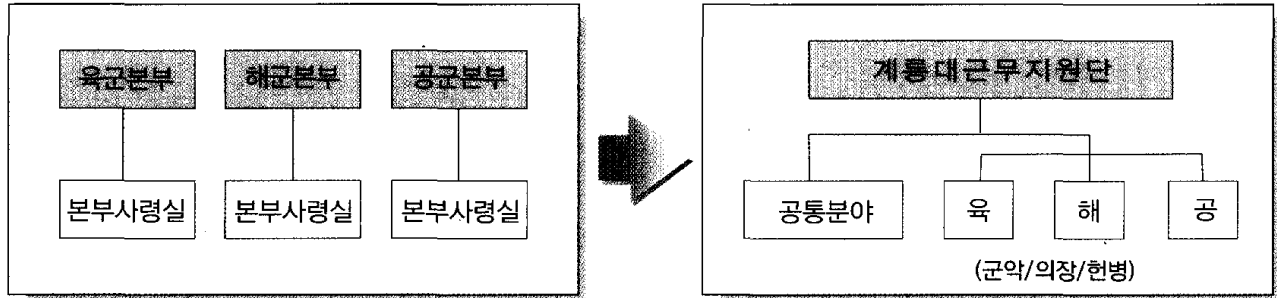
각군본부는 분산된 C4I기능을 지휘통신참모부로 통합하였고, 전투발전과 화생방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하였으며, 방위력개선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하였다.

육군의 지휘 및 부대구조의 조정은 보다 더 개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제대별 분산 및 지상부대 지원위주로 운용되던 육군항공사를 전략적·작전적·공세적 운용이 가능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1999. 4)하여 제 병과 및 기능을 통합하였고 권역별 지원전력과 전략예비전력으로 구분 편성하여 강습여단을 육군항작사에 예속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제병 협동작전수행체제를 갖추었으므로 제한된 독립작전과 공세 주축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단일 형태의 특전사 부대구조를 다양한 위협 및 분쟁과 특히 장차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통성 있는 부대로 개편(2000. 6)하였다.

북한군이 대규모 화생방 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육군 예하에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창설(1999. 6)하였다. 그리고 전시에 꼭 필요한 육상, 해상 및 공중으로의 전략적 수송 지원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수송사령부를 모체로 국군수송사령부를 창설(1999. 3)하였다. 또한 계룡대의 동일지역 내에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군 본부별로 편성, 운용하던 기존의 본부 사령실을 단일지휘체제하의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도표 4-1]

계룡대 근무지원단



통합(1998. 12)하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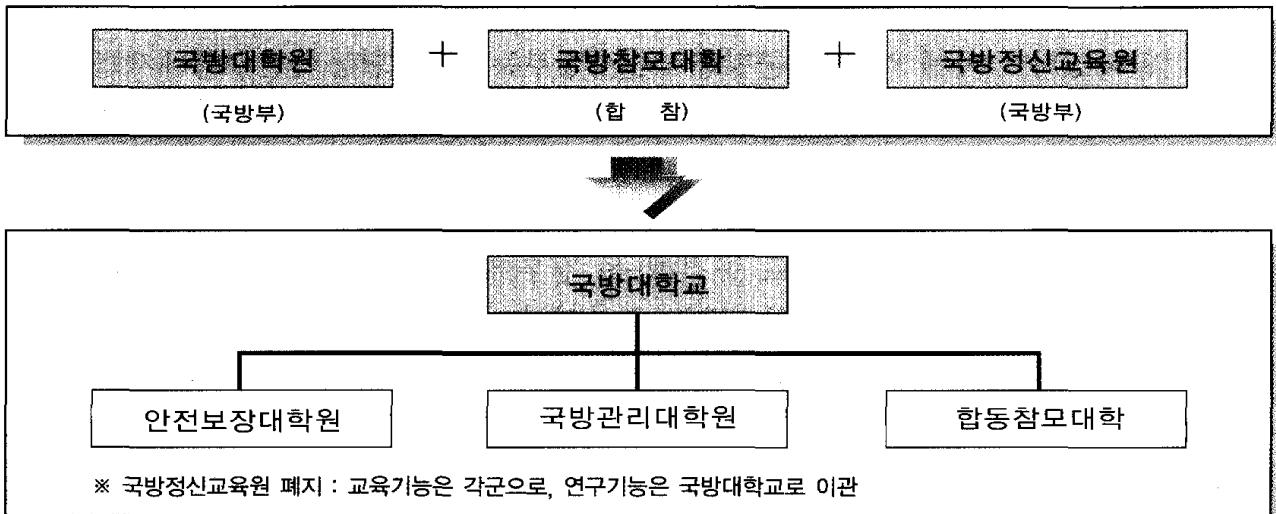
아울러 유사·공통기능 통·폐합의 일환으로 국방정보체계의 다원화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수집부대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신호, 인간, 영상정보 등 기능별로 개편(1999. 4)하였다. 또한 환자의 긴급 후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 내에 '항공의무 후송부대'를 창설하였다.

국방부 산하의 4개 연구기관은 연구기능이 미약한 국방품질관리연구소를 비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정보체계연구소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함으로써 정책연구 중심의 국방연구원과 무기·정보체계 개발 연구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의 2대 기관으로 재편(1999. 1)하였다.

또한 학교기관 중 국방대학원·국방참모대학·국방정신교육원은 각 기관의 교육목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안보관련 종합대학 형태인 국방대학교로 통합(2000. 1)되었다.

[도표 4-2]

국방대학교 창설



제2절 목표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

방위력개선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고 각종 제도를 혁신하였다.

조직개편은 각 기능별로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던 획득개발 관련조직을 정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획득실을 신설하였고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과정(Process)중심의 통합사업관리 조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통합되어 책임제 관리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분석·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의사 결정시에는 비용분석 및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획득실은 장관의 명을 받아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품질관리소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 및 통제하게 됨으로써 국방정책에 부합되도록 집행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부서간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조정·통제하게 되었다.

획득제도의 제반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8개 협의체 위주의 획득의사결정체계를 과감히 축소·폐지하여 3단계로 간소화시켰으며, 17개의 획득관련 법규를 1개로 통·폐합하고, 획득절차도 38단계에서 24단계로 단축하였다. 또한 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집중하되 집행은 각 군과 기관에 위임하고 사업관리, 시험평가, 기종결정, 계약단계 등에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정비·인력·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없는 분야는 전담체계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계열화 업체의 76%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방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미래전 양상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독자적인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관련부처간의 공동연구 및 자료 공유를 위해 민·군 겸용 기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5개 첨단무기체계와 관련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3절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개선

1. 인사·교육관리 개선

인사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직 및 진급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보직관리제도는 주요 직위별 보직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개인별 자력과 연계시켜 보직을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00년 말까지는 중령급 이하 장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전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급별, 단계별 보직관리체계를 설정하여 종전에는 지휘관 직위에만 적용하던 사전 보직예고제를 중령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진급관리제도는 진급공석 결정시 공개적인 정책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급공석 결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진급심사의 세부평가 기준을 계량화하여 2000년 진급심사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인사법을 개정하여 장교의 진급 최저 근속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령이하 장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계급 장교의 정채기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임기제 진급제도를 중·대령에게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명예진급제도는 소령부터 시행토록 하여 초과인력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양성과정으로부터 초·고군반, 각군대학, 국방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 교육목표 및 중점을 재정립하였다. 국방대학교에는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및 직무연수부와 부설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 및 합동교리발전부를 두어 국가안보정책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서 군내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 중 국방대학교 석사과정은 군·학 제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사과학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민간대학 위탁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폐지하였다.

2.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재와 미래의 전장환경에 부합되고 군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군 하부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교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토록 하고, 하사관은 병 지휘·통솔 및 신상관리, 내무교육, 병 주특기 훈련 및 측정, 병영생활, 의식주 문제, 사고예방활동, 보급, 시설 및 재난관리 등에 전담토록 하여 하사관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

분하였다. 하사관 획득제도를 개선하여 병과별로 체력 및 적성 등 선발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전문대·기능대 장학생 확대모집을 통한 하사관의 자질향상과 안정적 인력확보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양성 및 보수교육체제를 개선하고 민간대학 위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하사관의 전문대 이상 학위수준을 현 6%에서 11%로 상향 설정하였으며, 고급제대의 참모업무까지 하사관이 수행하도록 편제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하사관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는 장교 예속개념의 하사관(下士官) 명칭을 '부사관' (副士官)으로 바꾸기 위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제4절 국방관리의 혁신

1.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체계 기반 구축

국방정보화의 추진목표는 2015년까지 정보전 수행능력을 갖춘 '정예 정보화 군' 육성에 있다.

[도표 4-3]

국방정보화 추진목표

1단계(1999~2005)	2단계(2006~2010)	3단계(2011~2015)
기반완성/핵심체계 구축	기능확장/체계통합	선진정보체계 완성, 정예 정보화군 달성

국방부는 정보화기획관실을 획득실에서 분리하여 차관직속 기구로 개편(2000. 4)하고 국방정보화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보화기획관을 민간전문가로 영입하여 최신 전문지식을 국방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 인터넷 면회소(면회 장면)

이에 따라 국방정보체계의 기획·계획, 예산·집행·평가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방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평가, S/W관리, 정보보호 등 내실 있는 정보화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 개발된 정보체계와 개발 예정인 정보체계의 관리, 운용유지 및 개선에 관한 체계를 정비하고, 국방업무 정보화를 추진할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이용해 업무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여단급에 정보화 교육장, 대대급에 인터넷 교육장 및 인터넷 면회소, 중대에 PC방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화 인력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정보체계 형상 관리, 보안체계 개선 등 단계적인 국방정보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 군수조달의 투명성·경쟁력 확보

군수조달은 조달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관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선정되도록 경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규제 성격의 군납업체 등록제도와 업체실태 조사제도를 폐지하였고, 군납 안전단의 대상업체 및 품목을 1,235개에서 361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자유경쟁 원칙 하에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조달관련 정보도 조달본부 종합상담실에만 비치하여 오던 것을 인터넷 '조달 홈페이지(www.dpa.go.kr)'를 개설하여 군납 희망 업체들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군 전용품 조달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반상용물자 구매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중에 있는바, 2000년에는 740개 품목을 이미 이관하였으며, 미 이관된 126개 품목은 경제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물자구매시 계약부서와 담당자를 명시하고 동시에 계약서 보관기간을 장비 폐기시까지 연장하는 실명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나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3. 효율적인 군수지원체제 구축

민간자원이 풍부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군 보유수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하에, 군 표준장비 중에서 대체 가능한 520개 품목을 상용장비로 편제에 반영하고, 치장중인 수송 및 건설장비 3,564대를 전시동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7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전시동원물자 중에서 3,929개 품목의 규격을 완화함으로써 물자동원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시에 군수품으로 활용 가능한 365개 품목을 민수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초전소요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급·정비·수송분야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방안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험적용을 거쳐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군수지원을 위하여 ‘국방CAL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수준 하향조정, 수송기간 단축 및 수평 분배 등 물류체계 혁신방안의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제5절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사법정의와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 사법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을 분리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 및 검찰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국방부법무운영단을 해체하여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으로 분리·창설하고, 각군본부 군사법원을 독립·창설하였다(2000. 7). 고등군사법원에 재판연구부를 신설하여 판례분석 등 군사법 제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방부검찰단은 병역비리 등 각종 구조적·조직적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수부를 설치했다. 또한 고등군사법원과 각군본부에 국선변호부를 설치하고, 군사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풀(Pool)제 운영을 통해 장병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장관의 설치보류해제명령에 의해 사단급부대에 5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추가 설치(2000. 6)함으로써 영장청구 및 재판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켰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전시에는 원활한 군사법원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즉결심판제도를 도입(2000. 5)하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 군법무관을 군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법무관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부득이 하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법무관의 해외위탁교육을 확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군법무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현재 격년제로 40~50명을 선발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개선하여 25명 정도씩 매년 선발할 계획이다.

제6절 신 병영문화 창달

신병영문화 창달의 기본 목적은 전투위주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무장한 강한 전투원을 양성함으로써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군은 병영문화 창달을 위한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병영생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준일과표 및 주간시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 일과시간에는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그 외 시간에는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PC, 영어 및 한자학습 등 자기계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석 점호 방식을 내무사열식 형태로부터 인원 및 건강상태의 확인 위주로 개선하였다.

둘째, 부대운영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간부들이 오직 전투임무 위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각종 보고 및 검열, 지도방문 등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전투임무에 전 역량을 집중토록 하였으며, 야전군 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여)단급 부대의 지휘관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휘관이 책임지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경험이 부족한 초급간부들이 야전 실무현장에서 겪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행동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실무지침서'를 보급하여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으로 부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병영시설 및 각종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병역의무 수행을 보다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신 병영문화 창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첫째, 병영생활이 '수용' 개념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수련장'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둘째, 간부들은 오직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부대관리에 있어 과학적 기법과 전문성을 구비하게 되어 부대운영에 자신감을 견지하게 될 것이며, 넷째, 자율형 병영문화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 병영환경과 여건,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의욕과 희망을 북돋우는 병영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제3장 향후 추진계획

제1절 중·단기 개혁 지속추진

1. 군 구조 개편

군 구조 분야는 통일 후에 대비한 미래 군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합참 및 각군본부와 군사혁신기획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중에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안보상황 및 위협 분석, 군사전략과 군사력 운용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수준과 부대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국방부 및 합참의 기획문서에 반영하고 구체화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남북상황 변화시 큰 혼란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과제로 육군이 추진해 오던 ‘전방 2개 야전군사령부 해체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후방 2개 군단 해체 및 후방작전사령부 창설계획’도 미래 군 구조 연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무부대 개편은 우선 5단계의 의무지원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장병들의 의료혜택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후송체계 및 의료시설은 개선하면서 불필요한 병상 수는 줄여 나갈 계획으로 18개의 전·후방 병원 수를 2004년까지 16개로, 7,400개의 병상 수를 2009년까지 6,000개로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군체육부대의 해체 여부는 2002년 월드컵 등과 같은 국가적 체육행사와 세계군인체육대회(CISM)를 고려하여 2000년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99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 간호인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아울러 국방분야에 여성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군장교 및 하사관 양성과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여군학교는 2001년에 해체하여 장교는 3사관학교에서, 하사관은 하사관학교에서 각각 양성하고 보수교육은 해당 병과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2. 신 병영문화 창달

정보화, 과학화로 대변되는 미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병사 개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복잡하고 다양한 미래 전투상황은 장병 개인의 판단력과 전

문성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병영문화 창달’은 장병 개개인이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함으로써 판단력과 창의력, 자발성을 계발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즉각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2000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적용 및 보완이 필요한 중기과제는 면밀히 검토한 뒤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소요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영문화 개선은 강군 육성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상급부대는 통제나 간섭보다는 예하 부대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보화 추진

국방정보화는 2015년까지 미래정보전/체계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정보화/과학군을 육성하고, 발전된 C4I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운용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자원관리의 자동화 및 정보화 환경구축으로 전·평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여 정보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방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화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전력분야의 정보화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동화지휘체계(C4I체계)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국방정보화를 추진할 국방부 차원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기관/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정보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발전시켜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통신기반체계는 추진중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 전시 생존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술통제망, 위성망, 데이터링크(Data-Link) 구축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하에 C4I 및 자원관리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일치하도록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자원관리 분야의 정보화는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한 통합자원관리체계 및 지식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CALS체계, 각 분야별 자원관리,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구축에 역점을 둔다. 또한 목표지향적이고 통합지향

적인 사업관리와 점진적·단계적 사업추진 풍토를 조성하고 업무절차개선(BPR)을 통하여 사용자 요구에 부응한 실용성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화 인력양성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군복무기간 중 군 정보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 국가정보화 역군으로 활동하도록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대내외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제반 제도 및 절차와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조기에 정보화 군을 건설하도록 매진할 것이다.

제3절 국방연구개발 혁신

국방과학기술 능력은 군사력의 핵심 기반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군사력의 양적 규모보다는 첨단기술 위주의 질적 능력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국방과학기술 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첨단전력의 해외 도입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규제 및 통제도 더욱 심화되어 한계가 있다.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대부분의 주요 장비와 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기술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전력증강 방식이 해외구매 및 기술도입 조립생산에 중점을 두어 온데 기인한다.

이제 정보화시대의 전쟁패러다임이 발전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의 개념도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력발전의 개념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 혁신은 미래 첨단기술의 확보와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에 주안을 두고 제반 체계와 제도 및 절차를 재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연계하여 선진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미래 첨단핵심기술을 선별하여 중점 발전시킨다. 셋째, 일부 주요 핵심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일류화한다. 넷째, 비교우위의 민간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한다. 다섯째, 국제경쟁력을 가지도록 방위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혁신기획단’에 ‘연구개발혁신팀’을 새로이 구성(2000. 5)하였으며, 앞으로 국방연구개발과 방산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 정책화·계획화할 예정이다.

제4절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21세기의 전쟁 패러다임을 산업화시대의 대량파괴전 양상에서 정보화시대의 정밀타격·정보마비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래전의 모습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운반체계, 센서체계,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장가시화 및 정보공유능력이 발전되고, 전장공간이 기존의 지·해·공 3차원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며, 장거리 정밀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정보체계를 보호·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혁신이 추구하고 있다. 군사혁신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운영개념과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전투능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이다. 미국은 정보통신·로봇·미세전자기계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지식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 육군의 디지털전장(Digitization), ‘해군의 협동교전능력(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공군의 지구적 교전(Global Engagement)’ 등이 대표적인 군사혁신 개념이며, 이들은 모두 전장의 모든 센서와 정밀타격체계를 네트워크체제로 결합시켜 전장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전투력의 동시통합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고 전투의사결정 사이클을 신속하게 회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군도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산하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군사혁신의 목표는 정보·지식기반의 국방력을 창출하여 21세기의 생존·번영·통일을 보장하고 정보화시대의 국방발전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며, 다음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사혁신기획단’은 이러한 방향에 기초하여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여건에 걸맞는 군사혁신의 개념과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연구·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0~30년 후의 미래 안보환경과 국가발전추세를 분석하여 국방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 중·장기 국가발전 비전과 계획에 부합된 군사혁신 비전 및 개념 설정
- 핵심적인 군사혁신 과업 및 과제에 역점을 둔 구현방책 개발
- 미래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예측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군사기술혁신 추구
- 비교우위의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국방력 창출

군에 적합한 전장운영/군사교리, 군사기술·전력체계, 운영체계, 리더십·교육훈련 등의 제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을 정립하였다. 2000년에는 이러한 기본개념과 방향에 입각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고, 2001년에는 이를 정책화·계획화하여 다음의 국방기본정책서 등 장기 기획문서와 국방개혁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 백

제5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 제1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여 백

제1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제1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1. 올바른 병역문화 정립을 위한 제도 발전

병역 이행이 의무이면서 동시에 영광으로 인식되는 병역문화의 정립은 오늘날 병무행정이 실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 개개인이 병역의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정보 공개·공유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고객지향 서비스 행정구현,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병역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가. 병역처분기준의 합리적 설정

병역처분기준은 개개인의 병역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당해연도 전체 징병검사 수검자의 신체등위와 학력 수준을 기본요소로 하고, 군의 소요와

[도표 5-1]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 학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중졸							
중학중퇴이하	제2국민역						

[도표 5-2]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사유

대상(사유)	병역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6개월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1년 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 선고자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28개월 복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6월 이상 실형 선고자 중학중퇴 이하자 고아, 귀화자, 혼혈아 신체등위 7급사유 1년 초과자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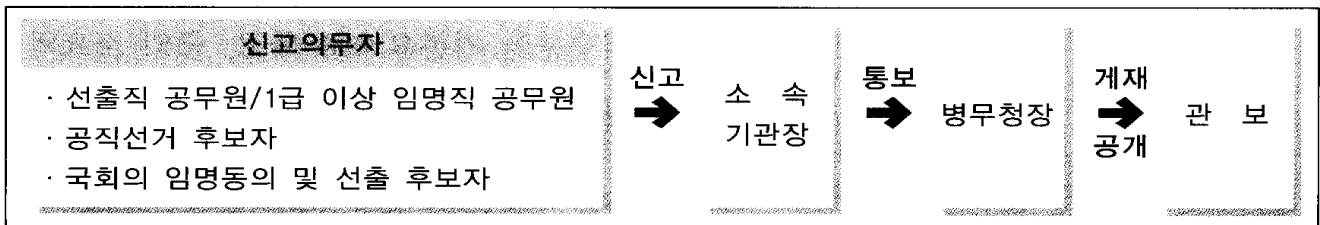
병역자원 증감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결정된다. 2000년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은 도표 5-1,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병역실명제도의 시행

병무청은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9년 5월 24일자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해당 지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은 신고기관의 통보내용을 종합하여 신고내용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공개하게 된다. 한편 최초 신고 이후 병역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정기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개절차는 도표 5-3과 같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공개하게 된다.

[도표 5-3]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절차



이와 관련하여 1999년 10월 29일에는 동법에서 정한 6,000여개의 공개대상직위 중 신고의무자 5,885명과 그 직계비속 6,789명 등 총 12,674명의 병역사항이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2000년 9월까지 총 13,965명(직계비속 7,413명 포함)이 공개되었다.

다. 징병전담의사 제도의 시행

지금까지 현역신분의 군의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징병신체검사는 1999년부터 징병전담의사 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징병전담의사는 현역군의관으로 임관되지 않은 전문의사 중에서 선발되어 병무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전국 11개 징병검사반에 소요되는 전담의사는 111명이나, 2000년까지 7개 검사반에 71명을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전원 전담의사로 징병신체검

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 내실 있는 '신체등위판정심의회위원회' 운영

병무청 내에 설치된 '신체등위판정심의회위원회'에서는 신체등위판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과 질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방병무청 내에 설치된 동 위원회에서는 개별 병역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지방병무청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와 신체검사결과 합격자로서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 등이다. 위원회의 판정은 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병원의 정밀검사를 받게 한다.

또한 심의대상자의 가족에게 심의판정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병역의무자 가족대표, 병무행정설명회 참관인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심의의 공신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가정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면제대상자 12,784명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12,558명을 합의 판정하였으며, 226명은 군 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마.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가 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인다는 데서 그 효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복무형태와 복무분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중 학력이 높은 사람을 먼저 소집하기 위하여 종전의 ① 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②나이가 많은 순으로 되어 있던 소집순서를 ①학력이 높은 순 ②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③나이가 많은 순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집대상자 적체지역에서 저학력자가 먼저 소집되고 고학력자가 소집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사고빈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후순위제도를 신설, 고졸이하 학력자 중 집행유예자를 포함한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제외), 소년원 재원 사실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문신 또는 자해 및 반흔 사유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였던 것을, 위반내용이 고의성이 없거나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직무명령에 의한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편입취소 대신 그 위반기간만큼 연장 복무토록 하였다.

[도표 5-4]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운영규모 (2000년도)

계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 봉사요원	예술·체육 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		
55,257(명)	12,513	35,742	5,544	1,253	101	104
비율(%)	22.6	64.7	10.0	2.3	0.2	0.2

또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10년 이상된 연구기관과 8년 이상된 공업분야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육성정책에 따라 지원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도표 5-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및 관리인원 현황 (2000년도)

구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개)	13,414	2,395	11,019
관리인원(명)	70,231	14,675	55,556

바. 병무행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병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45개 분야 360여종의 병무행정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민원실'에서는 민원 상담 및 국민제안은 물론, 신문고, 부조리신고센터 등 각종 신고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개인의 입영일자와 민원처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응답전화기(ARS)를 통하여 입영일자, 지원병 모집,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92종류의 병무행정에 관한 문의사항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징병검사장을 전면 개방하고 설명회를 열어 병역처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특히 매 학기초에는 각급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신입생을 위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편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이동병무상담소를 설치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한 안내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에 고정적으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쇄물을 통한 안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17세 이전에 외국에 조기 유학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의 국외 유학인정서 또는 유학특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한을 1999년 부터 폐지하여 조기유학자라 하더라도 일반 유학생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년 단위로 되어 있던 유학생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졸업 예정시까지 연장하였으며, 군복무필자 및 면제자(제2국민역)가 국외출국시 공·항만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는 폐지하였다.

그리고 거주지 시·군·구의 징병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거나 빨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전일까지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병무행정의 혁신 : '병무행정 Vision 21' 추진

병무청은 공정한 병무행정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양질의 자원 충원 등 새 천년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병무행정 Vision 21'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화된 병무행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0년에는 징·소집분야 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 2001년에는 예비군분야와 의사결정지원 및 행정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가. 추진실적

2000년 1월부터는 '전자우편처리센터'를 통하여 징병검사통지서 및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을 자동발송 처리함으로써 통지서 발송에 따른 업무량을 단축시켰다.

2000년 3월 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던 병적증명서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00년 5월 1일부터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처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향후계획

2001년부터는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징병검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 또는 시·군·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입영기일연기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연기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대학재학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부대별 잔류인원을 확인하여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 지역예비군 중대 및 각급 대학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자료협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각군을 비롯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 및 군 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를 ‘병무청 중앙 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일원화하여 병역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를 운영함으로써 병역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제2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1. 정보공개와 국방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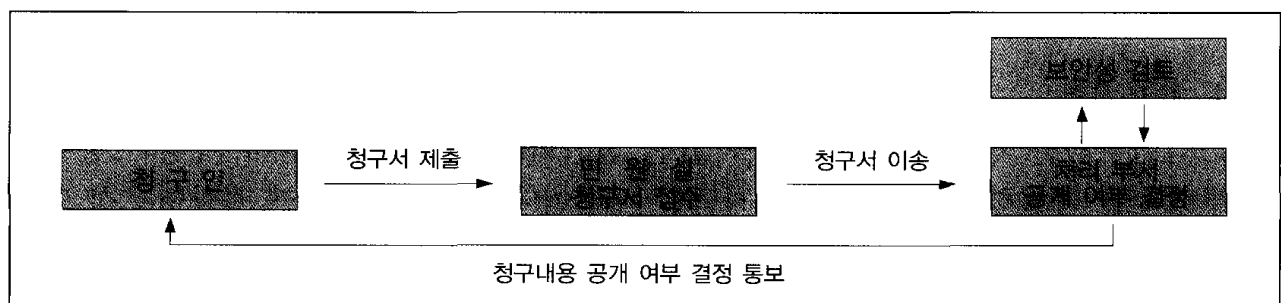
가.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도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및 각 산하기관은 기관별로 정보공개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군사기밀이 아닌 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또한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고 있다.

국민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 문서목록 등의 각종 정보를 열람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담당

[도표 5-6] 정보공개 처리 절차



부서는 15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국방부 및 산하기관은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서를 함께 통지하게 된다.

나. 국방민원

국방부는 국방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 대표전화 (02) 748-1111 및 민원실 전화 (02)748-6891~6892를 공개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국방신고센터(02)748-5959를 설치하여 국방정책 발전에 대한 건의, 군내 구타사고 및 각종 비리 등을 제보 받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일과종료 후에는 민원실 전화를 자동녹음 전화로 전환하여 24시간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동 녹음된 민원은 일과개시 즉시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도표 5-7] 민원처리현황 (1999. 12. 31. 기준)

서류민원	인터넷민원	방문상담	전화상담
연 3,899건	연 5,920건	연 2,658건	1일 평균 110건

서류민원 중 전공상 및 상훈복지 요구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민원은 젊은 세대의 군입대 및 군무원 모집 관련 문의 등 단순질의가 5,539건(94%), 진정성 민원은 381건(6%)을 차지하고 있다.

2. 열린 국방과 국방홍보

국방부는 국방정책 추진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열린 국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인 ‘일일 프레스 브리핑’을 실시하고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방소식’ 등 군 홍보매체를 통해 주요 국방정책 추진상황 및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등 국민적 관심사항을 적시에 알리고 있다.

2000년 3월부터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국방부 각 부서별 홈페이지란을 신설하고 각군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항이 관련 국·실과 각군에서 직접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해병대 캠프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열린게시판, E-mail 클럽, PC통신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방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간 15만 여명에 달하는 청소년 호국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병대캠프를 비롯한 각종 병영체험 및 부대 개방행사, 호국문예작품 공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상무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제3절 6·25전쟁과 국방

1. 6·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세계 공산화를 위한 팽창주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선을 남침한 것을 국군과 유엔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공산세력의 세계적화 의도를 저지한 최초의 전쟁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대표하는 세계자유수호전쟁이었다. 이때에 유엔군으로는 미국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인도 등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고, 20여 개 국가가 물자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6·25전쟁은 전쟁 기간 중 400만여 명의 인명피해,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 230억불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함으로써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민족분단을 고착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여 이 땅에 다시는 6·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목적은 ①6·25전쟁의 의의와 교훈을 계승시키고, ②노령화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복지시책을 확대하며, ③전후세대에게 호

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④참전 21개국과 유대강화 및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21세기 민족의 화해·통일·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다. 6·25전쟁 발발과 휴전협정 조인 각각 50주년이 되는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될 이 기념사업은 '전쟁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라는 주제로 52개의 정부 부·처 기본사업과 41개의 위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중앙기념행사 등 39개 기본사업과 36개의 위임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6·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 계승사업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호국안보의식을 고양하고 6·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6·25전쟁사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는 학술적으로 재정립하고, 미 정립된 군사분야 16개 과제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비군사분야 13개 과제 등 총 29개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6·25전쟁사 부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4월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내·외 학자가 참가하여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방학술회의를, 6월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학자가 참가하여 '한국전쟁 이후 50년, 냉전적 대립에서 평화 공존으로'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선열들의 호국 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50주년 상징조형물'을 전쟁기념관에 건립할 예정이고 전국 667개소의 전쟁관련 전적지를 지속적으로 정비·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관광 명소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국방 학술회의

나.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복지시책 확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 및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전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참전용사의 호국헌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대통령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2000. 6)하였으며,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및 유족 53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감사선물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역·마을·학교별로 참전용사

명예선양을 위하여 마을별 전사자 명비 제작, 도로 표지판에 참전무공수훈자 이름 넣기, 참전용사의 집 문패 달기, 참전용사 명예졸업장 수여, 무공수훈자 및 호국인물 흉상제작 등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지역별로 참전용사 위로방문 및 초청행사, 전상자 위로방문, 참전전우 찾기, 전쟁영웅 현양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호국영령 중 미처 수습하지 못한 유해를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주요격전지인 다부동, 안강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전반기에는 다



▲ 유해 발굴

발굴하여 이 중 아군유해 144구는 국립묘지 납골당에 안치하고 신원 확인된 유해 2구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였으며, 미군유해 1구는 미국에 인계하고, 북한군 유해 2구는 파주 북한군 묘지에 안장하였다. 후반기에는 금성, 백석산, 피의 능선, 충주 등의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실시중에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기본연금 인상과 상이등급을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계곤란 고령 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추가지원, 안장지원, 장제보조비 지급 및 의료수혜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전후세대의 국가관 확립 및 호국안보의식 고취

국민의 70%가 넘는 전후세대에게 6·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호국안보의식과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관련내용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00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연차계획에 의거 2004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병 및 예비군, 전국 초·중·고교, 각종 연수기관에 6·25전쟁 관련 교육용포스터 및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전수기 및 호국문예작품을 공모하여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예물을

발간(2000. 6)하였으며, 6·25전쟁 순회사진전시회를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연맹 단원 200여명이 애기봉-휴전선 일대-통일전망대를 잇는 '통일을 위한 행진'을 실시하는 등 각종 수련회 및 연수원 교육, 장병 및 예비군 정신교육, 자유수호옹변대회 등을 실시하여 전후세대들에게 호국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참전국간의 유대강화로 세계 속의 국가 신인도 제고사업

우리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함께 싸워준 참전우방국과 참전용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보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참전국 대표 및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한국에서 실시하는 참전국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참전국에서 실시하는 주요기념행사에 한국대표를 참석시키고 있다.

2000년 6월 25일에는 '6·25전쟁 50주년 중앙기념행사'가 대통령을 비롯한 참전 21개국 국방장관 및 주한외교사절, 국내·외 참전용사 등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기념관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유엔군 3만 8천명, 국군 3만명의 '전사자 명비' 봉헌과 '6·25전쟁 특별기획전' 개막식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25전쟁 당시 주요전투와 연계하여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육·해·공군 전투기념행사 등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투기념행사를 국내·외 참전용사 및 학생,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실시한 참전국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오산에서 실시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기념식 행사'(2000. 7)와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실시된 '장진호전투 기념행사' 등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등 한국대표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 6·25전쟁 50주년 중앙기념행사시 '전사자 명비' 봉헌



▲ 6·25전쟁 50주년 중앙기념행사시 화환증정

참전국내 기념행사 지원으로 미국에서 실시된 '워싱턴 6·25전쟁 개전행사', '6·25전쟁 참전용사의 날 행사', '노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및 뉴욕시에서 주관하는 국가급 퍼레이드와 호주 캄브라에서 실시된 참전기념비 준공식 등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국가보훈처관계관 등 한국 대표가 참석하여 참전국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였다.



▲ 6·25전쟁 참전비 준공식 참전국 행사(호주)

6·25전쟁 참전 21개국의 참전단체 및 참전용사 개인에게 대통령 감사서한을 발송하였다. 서한에서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특히 새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참전국은 일간지, TV 등을 통해 진심 어린 감사라고 보도함은 물론 개인별로 6·25전쟁 참전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는 감사 답신을 보내왔으며, 서한을 액자화하여 거실에 부착하겠다는 등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해 왔다.

6·25전쟁 당시 '6·25전쟁 종군 기장'을 수여하였으나, 미국 및 일부 영연방 국가는 외국 상훈을 받을 수 없다는 참전국 국내법의 제약으로 인해 종군 기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장 수여를 요청하는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종군기장을 제작하여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공식 전달식(2000. 7)을 가진 데 이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시 대통령이 미국 참전용사 대표에게 종군기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2000. 9), 2003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6·25전쟁 종군기장 및 대통령감사서한 전달장면

이러한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의 자긍심 고양과 한·미간의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종군기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참전용사 및 가족초청 위로행사, 재외 공관을 통한 자체 기념행사 지원, 해외 주요언론 한국특집기사 게재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참전국간의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4절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전체의 관심 및 참여 의식이 고양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수립, 집행되어야 하고 수립된 정책은 국민에게 사실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방의 사결정과정에 각계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 및 결정 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1.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방부는 1981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업무에 대한 민·군간 상호이해 제고에 힘써 왔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학계 및 언론계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부터 주요 국방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는 기구로 정책, 군비통제, 정훈/공보, 기획예산, 법무, 인사/복지, 동원, 군수, 획득, 시설, 정보체계, 합참의 12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총 4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연 1회 개최되는 전체회의와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되는 분과위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 또는 서신 등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에 응하고 있다.

1999년에는 ‘오·폐수 처리시설 시공평가’, ‘KNTDS(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 지휘·통제사업’ 등 총 15건의 정책에 대하여 자문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평화공존기 남북군비 축소시 보유 제한선 타당성’ 등을 자문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 민간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 확대

과거 민간 전문가의 국방정책 결정 참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의견 수렴, 연구 결과물의 정책 수립 자료로의 활용, 세미나를 통한 의견 교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수립·결정에 그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1997년에는 ‘국방정책검토위원회’에서, 1998년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1999년에는 ‘군사혁신기획단’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군사혁신기획단’의 경우, 일반사회로부터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군내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를 ‘풀(Pool)’ 개념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민간 학자들이 국방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민간부문의 국방관련 학술세미나를 장려·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실적은 관련된 정책의 검토와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정부출연금을 사용한 연구과제 수행은 1999년도부터는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관련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제1절 환경친화적 군 관리

군은 국토방위라는 기본임무 수행과 함께 주둔지역 내에서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국토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별·지역별 환경보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군 환경관리 기반 확충

가. 환경업무 수행체계 발전

군은 방대한 조직으로서 장병이 병영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는 특수한 집단이다. 따라서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거해 나가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의 전문화 및 전담화가 요구된다. 군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환경전담부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하 제대에도 환경군무원제도 등을 통해 환경업무 수행체계를 점진적으로 전문화시켜 왔다.

그러나 군 보유 환경기초시설과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등 각 분야에서의 군 환경개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군 환경업무 수행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한 첫 조치로, 군 입영대상자 중 전문대학 이상 환경 관련 학과 출신 및 환경 유자격자에게 환경 주특기를 부여하는 환경 특기병 제도를 2000년부터 발전시켜 환경기초시설 운용 및 군 환경관리 전반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2005년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완료할 것이다.

나. 장병 환경교육 강화

군은 지휘관을 비롯한 장병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하여 군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사회 환경보호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환경관 정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성급 장교 보수교육 과정에 환경교양교육을 시행하여 고급지휘관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병학교 등에서 환경 특기병 양성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병 환경교육은 각급 군 교육훈련기관 및 자대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부 및 각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각종 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으며, 정훈교육시간 등을 활용한 지휘관 기회교육에도 환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한편 군은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1999년에 연구된 '군 환경교육 기준 및 프로그램 개발'을 기반으로 군 환경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군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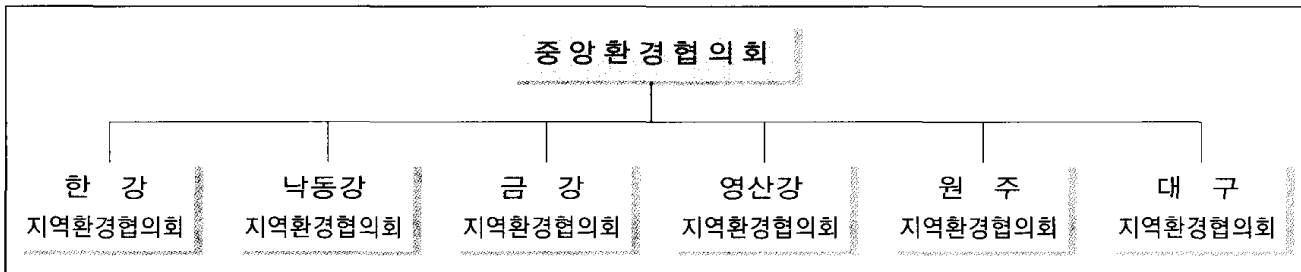
다. 군 환경 대외협조체제 구축

1998년도에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관·군 환경협의회는 중앙협의회 1개소와 4대강 수계(水系) 및 대구와 원주지역의 6개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협의회별로 4~5회의 정기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군 및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환경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대암산 용늪 및 백두대간 환경복구 활동, 민통선 지역 생태계 조사활동 지원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강수계 환경정화 활동 등 매년 수 차례에 걸쳐 관·군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군이 수거한 군항(軍港)폐기물 처리 등 쟁점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 및 교육교재, 강사요원, 오염측정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표 5-8] 관·군 환경협의회 구성체계도



※ 각 협의회 위원 : 20여명(군 및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

또한 국방부는 환경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소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지 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공동 운영중인 한·미군간 환경실무협의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국제군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 군의 발전된 환경기술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우리 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군 환경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군 환경협조체제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라. 군 환경 연구활동 전개

군은 군만의 독특한 환경 위해(危害)요인을 제거하고 '환경관리체계 정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군 환경보전학술대회

또한 1998년도부터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군 환경보전학술대회'를 통해 군 환경 실무자 및 환경전문가들의 군 환경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장병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2. 주둔지 환경오염 방지사업

가. 환경 기초시설 및 장비확충

군은 주둔지 및 주요 활동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많으나 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특별법령에 의해 외부인의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할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군 스스로의 환경보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은 오·폐수처리시설 등 법정처리시설 및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군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군 주둔과 운용에 의한 환경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다.

군은 2000년도 말까지 706개소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게 되며, 향후 2001년까지 한강·낙동강수계, 2002년까지 금강·영산강수계, 2003년까지는 기타 전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도표 5-9] 환경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구 분	총소요	1999보유		2000계획		2001~2005		2006년 이 후
		개소	누계(%)	개소	누계(%)	개소	누계(%)	
환경기초시설(개소)	4,427	764	17	87	19	3,576	100	
환 경 장 비 (점)	5,789	3,400	59	117	61	1,394	85	878

※ 환경시설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2,256개소(총 시설의 51%)가 포함됨.

또한 소각로, 토양오염방지시설 등 총 4,427개소의 환경시설을 2005년까지 확충하고 법정기준 강화로 기능이 미흡한 기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시설 및 장비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수집과 전시회 개최 등 환경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갈대습지·부레옥잠·미나리밭 등을 통한 '오수 자연정화 방안'도 실용단계에 있다.

나.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군은 엄격한 폐기물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발생 생활 폐기물은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군 진개차 또는 종량제봉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다. 한편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과 같이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재활용을 위해 자체 처리하는 것 외에는 전문폐기물업체에서 처리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1999년말 현재 19,991개소의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전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표 5-10]

군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99년 기준)

(단위:톤)

구 분	발생량	위탁처리	자 체 처 리		
			재활용	소 각	보관
계	222,424	151,726	44,433	12,114	14,151
생활 폐기물	일반쓰레기	147,053	15,838	11,601	869
	음식물쓰레기	32,780	6,992	457	-
지정폐기물	19,130	9,118	2,386	0	7,626
건축폐기물	23,461	16,871	878	56	5,656

다.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군은 각종 군사시설 건설사업계획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군 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환경시설 위탁관리방안 강구

군이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유형별로 대책을 수립하며 환경시설과 장비를 확충·운영하는 등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부대마다 환경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투력 유지 및 개선 위주로 편성된 군조직 내에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급 제대에 환경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단기

간 내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군 환경관리의 전문성 및 경제성, 효율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부 제대에서 시행중인 환경위탁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군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환경관리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군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어 군이 안심하고 전투력 향상에 전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가. 지역환경 정화활동 전개

군은 병영 내의 환경오염방지 활동과 병행하여 부대주변의 지역환경 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공간을 깨끗이 정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군은 서해와 남해에 산재한 60여개 도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낙도 봉사단을 결성·운영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육군은 백두대간 환경복구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주둔지 및 작전/훈련지역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

군의 관할지역은 그 면적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산림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청정지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고, 작전·훈련 등 군의 활동은 직접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 동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군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군의 활동범위는 대상지역이 전산야에 걸쳐 확대되며 도처에 참호와 장애물, 숙영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시공간 확보를 위한 수목제거작업 등 자연환경에 인위적 변화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각급 제대의 각종 훈련 시에도 매년 반복되게 되는데 군은 지휘관 및 장병의 환경



▲ 군 환경보호활동

보전 의식을 높이고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고려토록 하여 훈련 중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훈련 후에도 부득이하게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상태로 복구토록 노력하고 있다.

4. 환경복구사업 전개

가. 오염토양 복구사업 추진

유류저장시설의 유류누출에 의한 토양오염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변 농작물을 황폐화시키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은 1,300여 개소의 유류 저장시설에 대하여 2000년까지 1차 토양오염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 오염된 토양은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는 복구완료할 예정이다.

[도표 5-11]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검사 실시/계획 현황

구 분	계	1998실시	1999실시	2000계획
토양오염검사(회)	1,242	228	623	391

※ 검사대상시설 : 2만리터 이상 유류저장시설(복원개소는 대상시설의 25%로 추정)

1997년도부터 추진중인 부산지역 구정비창 부지의 오염토양복원 사업 중 제1정비창 지역은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제2정비창 지역은 토양오염 조사를 완료하고 부산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나. 오염환경 복구기반 확립

군은 유류 누출,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오염토양 복구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다양한 오염유형별 토양복원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특정무기체계 운용에 따른 특이한 오염유발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오염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복원절차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오염환경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군 자체 예산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외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군 관할지역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협조로 유류오염에 의한 '오염토양시험복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1999년도에는 오염토양 복원절차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오염지역에 대한 탈 오염처리 및 복원사업 추진시에는 오염 허용기준 및 단계별 처리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복원 완료시까지 각 단계별 관련정보가 유기

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축적된 정보를 유사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5. 작업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국방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규정’ 과 ‘군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군사시설 내의 유해환경 요인인 중금속, 유기용제, 소음, 분진, 의료·산업용 방사선 등의 관리방안과 군 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육군종합정비창 내에 군 방사선 안전도 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 군별로 특수 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200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장병의 건강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군사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지침’ 을 2001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물질별 관리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방인트라넷에 게시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지역사회와 군 시설

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정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이를 매수·보상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유희 국유지와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일반회계예산뿐만 아니라 유희 국유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예산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적극 매수·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목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군의 사유지 정리실적은 아래와 같다.

[도표 5-12]

군 사용 사유지 정리현황

구 분	총 대 상	기 정 리 (1983~1999)	정리계획	
			2000	2001이후
대상토지(만평)	4,702	3,203	231	1,268
소요예산(억원)	5,468	3,191	490	1,787

2. 군용시설 이전 추진

우리 군은 국민생활 편익증진, 도시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심지역 등의 군 시설을 연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부터 1999년까지 총 3조 1백억원을 투자하여 209개 부대를 이전하였고, 2000년에는 2,001억원의 예산으로 44개 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12개 부대를 이전하였다.

[도표 5-13]

군용시설 이전 현황(1999년말 기준)

(단위:부대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인천	기타
총사업('66~'99)	209	53	40	18	20	18	23	9	28
· 1999년 사업	10	1	1	1	1	0	1	0	5

앞으로도 군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군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병행하여 군시설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우리 군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관련법(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접적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33억 7천여 만평을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 작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과 완화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1997년부터 1999년 전반기에 걸쳐 제·개정된 바 있으며, 민통선 북방 통제보호구역내 취락지역이나, 통일정책 관련 사업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에 대하여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종전까지는 탄약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의 신·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철도·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내 주택이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비행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이던 지원항공기지의 보호구역을 2km로 축소하였으며, 헬기전용 작전기지도 축소 조정하여 항공기지 주변의 규제범위를 완화하였다.

둘째, 1998년 8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사전분석제도’를 시행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건축행위의 허용고도를 명시한 ‘사전분석도’를 행정기관에 비치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열람·활용케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등 34개 지역 1,500여 만평의 군사보호구역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였다.

셋째, 1998년 6월에는 수도권 개발지역 등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10개 지역 327만 2천여 평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였다. 그리고 민통선 내 취락마을 16개 지역 233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건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였다.

[도표 5-1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실적 (단위:만평)

연도	계	1980이전	1981~1985	1986~1988	1989~1993	1994	1995~1998
해 제	88,052	850	1,500	30,850	832	53,518	397
변 경	9,723	260	425	3,251	832	4,267	688

제3절 대민 지원 활동

1. 군의 대민 지원사업 및 국책사업 지원

가. 군의 대민 지원사업

우리 군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기본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이 보유한 인력,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일손부족 등으로 적기에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기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내기, 벼베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수로 보수, 농경지 정리 등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고 있으며 농기계수리봉사단을 편성하여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여 주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도표 5-15] 1999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현황

참여인원	동원장비	주요 지원 실적				
		영농지원	농기계수리	농수로보수	식수지원	의료지원
772,931명	5,593대	5,614정보	7,659대	217km	179톤	24,694명

한편 군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불우이웃과 '1부대 1개 이상 자매결연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법률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대민 무료법률상담도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3월말부터 4개월간에 걸쳐 경기도 파주와 홍성 등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일 평균 330명의 군병력과 90여대의 제독차량을 지원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국책사업 지원

군은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건설과 농촌 경지 정리 사업 등 국토개발에 계속 참여해 왔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자유로 노반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1996년에는 백령도, 대청도 도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다.

최근에는 1997년 5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강화도 해안순환도로 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19km 구간의 노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로서 2000년 6월부터는 9.5km 구간에 대해 1개 중건설중대와 굴삭기 등 각종 토공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군의 지원으로 약 18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접경지역의 교통·관광·영농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군 작전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 강화도 해안도로 공사

2. 재해·재난 지원활동

가. 재해·재난 지원을 위한 군의 준비

우리 군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재해대책업무 처리규정'과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능동적인 구조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첫째, 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탐색구조부대는 특전사·항공사·해작사·공작사 예하의 특수능력을 구비한 18개 부대로 구성,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설치되어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고, 선박의 조난 등 사고유형에 따라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를 파견시키고 있다.

둘째, 재난구조부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은 광역시·도 단위로 1개씩 총 14개의 재난구조부대를 지정하여 행정관서의 요청이나 주민신고시에 응급복구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구조부대와 행정관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합동훈련과 민·관·군 합동 재난구조 시범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효과적인 구조지원을 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즉, 육·해·공군의 지원병력과 장비를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지상지원은 육군의 군단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해상지원은 함대사령관의 책임하에 두었다.

넷째, 대형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폭설 및 폭우 다발지역의 인근부대에 제설차, 불도저, 포크레인 등 복구장비를 사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다.

다섯째, 전국 어디에서나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로 자동연결 되는 전화(080-960-6119)를 개설하여 주민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의 병력 및 장비가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후보고' 체제를 확립하였다.

여섯째, 재해·재난 구조지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1996~1999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였으며, 2000년 말에는 8.7억원의 장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탐색·인명구조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구조지원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재해·재난시 의료·방역·수질검사·세탁·급수 등의 총체적 개념에 의하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응급환자 및 중환자 후송시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 의무후송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재난 지원활동 실적

1999년의 자연재해는 도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와는 달리 재해양상이 국지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된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필수 작전병력을 제외한 가용병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 군의 재난·재해 복구 활동

1999년 8월의 집중호우시에는 군 부대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선 대민지원·후 군피해복구'라는 방침 아래 우선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차후에 군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였다.

앞으로도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적극적 지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실있는 훈련과 장비를 보강하여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도표 5-16]

1999년 대민지원 실적

구 분	지 원		실 적					기 타
	병력 (명)	장비 (대)	인명구조 (명)	도로복구 (km)	제방하천 복구(km)	대민진료 (명)	농지보수 (ha)	
계	1,446,651	20,452	578	534.9	485.3	12,861	1,429.1	
태풍 '올가' 수해복구 (7.31~8.25)	1,103,123	20,452	578	534.9	485.3	12,861	1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수용 306명 · 수상주민대피 3,430명 · 가옥정리 21,071동 · 담 장 8,274m · 산 사 태 114개소 · 방 역 22,274ha · 세탁지역 72,650kg · 급수지원 19,939톤 · 쓰레기처리 427톤
태풍 '앤', '바트' 벼세우기지원 (9.21~10.7)	343,528						1,2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 군 : 297,655명 3,819.8ha · 해 군 : 22,448명 202.84ha · 공 군 : 14,864명 151.15ha

부록

여 백

1999 세계 분쟁 현황

지역	총돌분쟁	대립분쟁	잠재분쟁	계
미주	콜롬비아내전 멕시코내전 페루내분		포클랜드분쟁	4개
아프리카	부룬디내전 기네아-비소내분 나미비아분쟁 라이베리아내전 이디오피아내전 르완다내전, 앙골라분쟁 우간다분쟁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국경분쟁 차드분쟁, 소말리아내전 시에라리온내전 콩고(자이르)분쟁 콩고(브라자빌)내분 나이지리아내분 수단내전, 알제리내전	이집트-수단분쟁 서부사하라분쟁 나이지리아-카메룬 국경분쟁 세네갈내분 지부티내분 케냐정/부족분규 토고정쟁 이집트 종교분규	니제르내분 레소토사태	27개
중동	터키쿠르드족분쟁 레바논내전 이란-이라크분쟁 이라크내분 팔레스타인분쟁 미·영-이라크분쟁(걸프전쟁) 이란내분	이란-UAE영유권분쟁 이스라엘-시리아분쟁 이란-아프가니스탄분쟁	이라크-쿠웨이트분쟁 이스라엘-요르단분쟁	12개
아시아	스리랑카내전 인도네시아분리운동(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내전 미얀마분쟁, 인도분리운동 캄보디아내전 카슈미르분쟁 필리핀내전, 남북한대립 네팔내분, 방글라데시내분	남사군도분쟁 서사군도분쟁 센카쿠/조어도분쟁 중국-대만대립 중국-인도국경분쟁 쿠릴열도 영유권분쟁 티베트독립운동		18개
CIS	그루지아-압하지야분쟁 타지크내전 러시아-체첸분쟁 우즈베크내전 키르기즈내전	몰도바내 분리운동 아제르-아르메전쟁 에스토니아-러시아분쟁 북오세티아-인구시분쟁		9개
유럽	코소보독립분쟁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그리스-알바니아분쟁 사이프러스분쟁 알바니아내분	그리스-마케도니아분쟁 루마니아 민족갈등 보스니아 내전 보이보디나 자치분쟁 불가리아 민족운동 슬로바키아 민족갈등 에게해 분쟁 이스트리아영유권분쟁	13개
전체	45개	25개	13개	83개
	소 계 : 70개			

※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 분쟁의 양상과 전망' (www.kida.re.kr)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영 국	프 랑 스
I C B M (대륙간탄도미사일 5,500km이상)	개 수	550기	756기	35~40기	0	0
	종 류	미니트맨 III : 500 피스키퍼 : 50	SS-18 : 180 SS-19 : 160 SS-24 : 46 SS-25 : 370 SS-27 : 20	CSS-4:15~20 (DF-5) CSS-3/20:10 (DF-4)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2,500~5,499km)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800~2,499km)	개 수	0	0	46기	0	0
	종 류	-	-	CSS-2 : 38 (DF-3) CSS-5 : 8 (DF-2)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 수	432기	412기	12기	48기	?
	종 류	트라이던트 C-4 : 192 트라이던트 D-5 : 240 (SSBN:18척)	SSN-8 : 60 SSN-18 : 160 SSN-20 : 80 SSN-23 : 112	CSS-N-3 : 12	트라이던트 D-5 : 48 (SSBN:3척)	M-51 : ? M-45 : (SSBN: ?척)
전략폭격기	개 수	178대	74대			
	종 류	B-2A : 17 B-1B : 91 B-52H : 70	TU-95 : 68 TU-160 : 6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 - 2000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 총 괄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총 병 령	1,371,500	1,004,000	약 2,480,000	36,300
예 비	1,303,300	약 20,000,000	1,200,000+	49,900

■ 육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령	현 역	469,300	348,000	1,830,000	145,900
	예 비	783,900	?	1,000,000	?
사 단 (예비)		10(8)	37	80	12
전 차		7,684	15,500	9,300	1,080
경 전 차		6,715	200	1,200	-
정 찰 전 차		113	2,000	-	90
장 갑 차		17,800	26,300	5,500	840
건 인 포		1,593	2,075	14,500	460
자 주 포		2,555	2,636	다 양	310
다 련 장 포		857	900	"	110
박 격 포		879	254	"	1,250
대 전 차 유 도 무 기		토 우 8,457 드래곤 24,400 채블린 500	AT계열의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680
지대공 미사일		1,737	2,300	11	710
헬 기		4,923	2,300	143	453
항 공 기		249	-	-	10

■ 해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예비)	369,800 (23,480)	171,500	230,000	43,800
잠수함(전략)	84(18)	70(21)	71(1)	16
항 공 모 함	12	1	-	-
순 양 함	27	7	-	-
구 축 함	54	17	18	9
프 리 기 트	37	10	35	46
해안초계함	21	112	676	3
소 해 함	26	72	119	34
상 륙 함	42	25	70	6
상 륙 정	202	?	140	-
지 원 함	92	436	160	29
수 송 함	24	-	39	10
전략수송함	86	상선 약2,800	?	-
예비수송함	142	-	-	-
전 투 기	1,510	114	435	90(P-3C)
헬 기	506	362	176	100
해 병 사 단	3	1	2(여단)	-

■ 공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예비)	361,400 (176,500)	210,000	470,000	45,600
장거리폭격기	208	232	폭격기 320	-
정 찰 기	259	135	290	26
지 휘 기	40	-	-	-
전 투 기	2,598	1,455	3,000	363
수 송 기	1,051	약 280	425	43
급 유 기	606	20	?	-
훈 련 기	1,217	1,000	200	170
헬 기	216	-	210	-
민 간 예 비	630	1,500	?	-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8-1999

부록 4

남북 경제지표 비교

구분	한국		북한		한국의 북한대비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GNP(억\$)	3,130	4,021	126	158	24.9배	25.5배
1인당GNI(억\$)	6,742	8,581	573	714	11.8배	12배
경제성장률(%) GNI기준	-6.7	10.7	-1.1	6.2	-	-
무역총액(억\$)	2,255.9	2,634.4	14.4	14.8	156.7배	178배
외채총액(억\$)	1,493.5	1,364.5	121	123	12.3배	11.1배
총인구(만명)	4,643	4,686	2,194	2,208	2.1배	2.1배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UN, 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를 GNI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GNI=GNP)

부록 5

북한 연도별 군사비 규모(1991~2000)

()내는 북한 공식발표 군사비, (단위 : 억\$)

연도	GNP (한국은행)	총예산 (북한발표)	군사비	GNP 대 군사비 비율 (%)	총예산 대 군사비 비율 (%)	환율 (미/북한원)
1991	229	171.7	51.3(20.8)	22.4	29.9(12.1)	2.15
1992	211	184.5	55.4(21.0)	26.3	30(11.4)	2.13
1993	205	187.2	56.2(21.5)	27.2	30(11.4)	2.15
1994	212	191.9	57.6(21.9)	27.2	30(11.5)	2.16
1995	223	208.2	63.0	27	30	2.05
1996	214	?	57.8	27	?	2.14
1997	177	91.0	47.8	27	52	2.16
1998	126	91.0	47.8(13.3)	37.9	52(14.6)	2.20
1999	158	92.3	47.8(13.5)	30	51(14.6)	2.17
2000	?	93.6	45~50(13.6)	?	48~53(14.5)	2.18

※ 1995~1997년도 군사비 규모는 GNP의 평균 27%, 1998년도는 총예산의 평균 52%를 적용한 잠정 추정치 임

남북 군사력 비교

1999. 12. 31. 기준

구분			합		북	
병력	지상군		56만여명	69만여명	100만여명	117만여명
	해군 ¹⁾		6.7만여명		6만여명	
	공군		6.3만여명		11만여명	
주요 전력	지상군	부대	군단	11개	20개	
			사단	49개 ²⁾	67개 ³⁾	
			여단 ⁴⁾	19개	78개 (포병 30여개 여단 제외)	
		장비	전차	2,36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400여대	2,300여대	
			야포 ⁵⁾	5,180여문	12,500여문	
	헬기		600여대	-		
	해군	수상전투함	160여척	430여척		
		지원함	20여척	470여척 ⁶⁾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 ⁷⁾		
		항공기	70여대	-		
	공군	전투기	540여대	870여대		
		특수기	40여대			
		지원기	230여대	840여대 ⁸⁾		
	예비 전력 (병력)			304만여명 ⁹⁾	748만여명 ¹⁰⁾	

- 주 : 1) 해병대를 해군에 포함
 2) 해병대 사단 포함
 3) 미사일 사단(1) 포함
 4) 보병, 기보, 전차, 특수전, 경비, 해병, 강습 등 기동/전투여단 포함
 ※ 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 여단 제외
 5) 야포는 로켓, 유도무기, 다련장, 방사포 포함
 6) 해상경비정대 소속 해상경비정 170여척 포함
 7) 잠수정 40여척 포함
 8) 항공기(헬기)는 공군에서 통합 운용
 9) 전역 8년차 예비군까지
 10) 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사회안전부 요원 포함

북한의 미사일 개발/제원

■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일 자	개발 / 생산 활동
70년대 초	·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획득(추정)
1976~1981	·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 역설계/개발
1984	·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
1986	· SCUD-C 미사일 시험 발사
1988	· SCUD-B/C 작전 배치
1989	· 노동 미사일 최초 식별, 개발 시작 추정
1993	· 노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1994	· 대포동 1호 미사일 최초 식별
1998	· 노동 미사일 작전 배치
1998. 8	· 대포동 1호 시험발사(북한측 : 위성발사 주장)

■ 북한의 미사일 제원

구분	SCUD-B	SCUD-C	노동-1호	대포동-1호	대포동-2호
사거리 (km)	300	500	1,300	2,500	개발 추정
탄두중량 (kg)	1,000	770	1,000	1,000(추정)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연합 및 합동훈련 현황

1. 한·미 연합연습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을지포커스렌즈 (UFL)연습	종합지휘소 연습	한국방위를 위한 총무계획 및 작계 5027 수행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위기 관리절차 연습 • 전시전환절차 연습 • 미 증원군 전개절차 연습 • 작계 시행절차 연습
연합전시증원 (RSOI)연습	지휘소 연습	미 증원군의 한반도 전개절차 숙달과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지원, 동원, 군수지원, 후방지역 조정관 임무, 전투력 복원 절차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증원군 이동관리 및 부대 추적 절차 연습 • 전시지원(WHNS)절차연습 • 양륙공항/항만 방호 및 연합선박 통제 연습 • 한국국적 선박 동원절차연습 • 전투력 복원 훈련
독수리 연습 (Foil Eagle)	야외 기동연습	연합 특수작전 및 후방지역 작전능력과 공·지·해 합동 작전능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특사 작계시행 훈련 • 2군 후방지역 및 통합방위 작전 연습 • 군단급 FTX 및 연합/합동 상륙 작전
팀스피리트 (T.S)훈련	야외 기동훈련	한·미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 1994년 이후 연습중단 * 1998년 이후 연습실시 여부 언론발표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구급 연합 및 합동훈련 • 공중강습, 도하, 사단급 기동훈련 • 항모훈련, 비상 이·착륙훈련

2. 한국군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훈련명	형 태	목 적	훈 련 내 용
합참지휘소 (압록강)연습	지휘소 연습	전시대비 합참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시작전지휘/참모활동절차 숙달 • 전쟁억제/위기관리 전환절차 숙달 •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향상
호국훈련	야외 기동훈련	대부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군사대비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투/국지도발 대비능력 향상 • 공·지·해 합동작전능력 향상 • 신작계 검증 및 적 화생전위협 대비 책강구 • 실전적 전투근무지원 체제 확립

3. 한반도 주변의 주요 연합훈련

훈련명	시 기	참 가 규 모	훈 련 내 용
한태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짝수년 5~7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영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공방전, 해상교통로 보호 • 해상차단 및 항공강습 • 함포 사격 훈련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격년제 (홀수년 8~9월)	한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해군간 함정·항공기의 조난선박 수색 및 구조 훈련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 (Pacific Reach)	2000년 최초 실시 (10.1~14)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태평양 구역내 우방국간 상호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내용누락

내용누락

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를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島嶼중에서 白翎島(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大靑島(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小靑島(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延坪島(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隅島(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島嶼群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 ㄷ. 한국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인원의 輪還臨時任務를 담당한 인원이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境外에서 단기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輪還'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輪還인원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輪還은 一人對一人의 교환 기초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一曆月內에 輪還정책하에서 한국 境外로부터 삼만오천명 이상의 군사인원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이 該當側이 본 정전협정 효력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 군사인원의 累計總數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인원도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入境과 出境의 지점 및 每個 지점에서 入境하는 인원과 出境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輪還을 감독하며 정찰한다.
- ㄹ. 한국 境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每次 반입에 관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중에서 교체되는 處理情況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갈 수 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그의 중립국시찰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上記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감시한다.
- ㄹ.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 ㅂ. 埋葬지점이 기록에 있고 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上記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 ㅅ.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의 중립국시찰소조가 下記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幫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시찰소조의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독위원회본부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輸送機材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 .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 ㄱ.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 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 ㄴ. 중립국감독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협정의 전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협정 전체규정의 文句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小組의 사업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정전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 중에서 각방의 3명은 將級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參謀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명, 보조 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어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ㄱ.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엔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 ㄴ. 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半數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협정의 실시를 감독하며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 ㄱ. 본부를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移設할 수 있다.
- ㄴ.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ㄹ. 본 정전협정 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 ㅁ.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 ㅂ.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 ㅅ.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 ㅇ. 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失鄉私民歸鄉協調委員會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휘한다.
- ㅈ. 敵對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을 담당한다. 단 上記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相互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ㅊ. 그의 工作인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敵對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增補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감독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3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每個 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正委員이 어떠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제공한 參謀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위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ㄱ.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처음엔 20개의 중립국감독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감독소조는 오직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지도를 받는다.
 - ㄴ. 每個 중립국감독소조는 최소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또 그 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시찰소조에 임명되는 組員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되는 分組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各方 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시찰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감독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책임과 권한

41.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감독위원회는
 - ㄱ.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ㄷ. 그 戰員 및 그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13항 ㄷ목, 제13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시찰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特點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ㄹ. 중립국시찰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ㄹ.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시찰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이동 시찰소조를 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독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시찰소조 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ㅁ.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을 前目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정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ㅂ. 그의 공작인원과 그의 중립국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43. 중립국감시소조는 下記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지역

인 천

(북위 37도 28분, 동경 126도 38분)

부 산

(북위 35도 06분, 동경 129도 02분)

군 산

(북위 35도 59분, 동경 126도 43분)

대 구

(북위 35도 52분, 동경 128도 36분)

강 룡

(북위 37도 45분, 동경 128도 54분)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지역

신의주

(북위 40도 06분, 동경 124도 24분)

홍 남

(북위 39도 50분, 동경 127도 37분)

신안주

(북위 39도 36분, 동경 125도 36분)

청 진

(북위 41도 46분, 동경 129도 49분)

만 포

(북위 41도 09분, 동경 126도 18분)

중립국시찰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외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3. 총 칙

44.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 부분은 매번 회의 후 가급적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시찰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小組 總體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적 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중립국시찰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해당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본 정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건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감독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정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감독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每個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任意의 위원과 통신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各方이 수용하고 있는 전체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下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전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인도되며 어떠한 沮礙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 조의 각 항 관계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협정 조인 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總數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收容番號 또는 軍番號를 포함한다.
 - ㄴ. 각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收容下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협정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 ㄷ. 세 가지 글을 병용하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한국문 중에서는 '송환', 중국문 중에서 '遣返' 이라고 규정한다.
52. 各方은 본 정전협정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총돌 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病傷전쟁포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전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各方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ㄱ.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3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전쟁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 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ㄴ.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 ㄷ.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服務로서 쌍방이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이 전쟁포로 인도인수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服務를 제공할 수 있다.
- ㄴ.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 (1) 한 小組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各其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에서 쌍방 전쟁포로의 인도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운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포로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

하며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나라의 적십자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 (4) 각 공동적십자소조의 임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 (6) 어떠한 공동적십자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송환위원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책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정전협정 제51항 ㄱ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ㄱ.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재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재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기간 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재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도망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ㄱ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1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포로 인도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어떠한 도망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ㄱ.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私民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 ㄴ.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私民 중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은 군사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本目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民政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 ㄷ. 쌍방의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조 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 ㄹ. (1)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2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중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上記 私民의 귀향을 협조하는 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運輸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越境지점을 선정하며 越境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2)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 (3)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할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4조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5조 부 칙

61.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敵對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3개국어에 의한 각 협정의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클라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팽 덕 회

<참 석 자>

국제연합군대표 미육군중장
윌리엄 K.해리슨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제1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제4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제2장 내부분쟁 불간섭

제5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비방·중상 중지

제8조 남과 북은 언론·뼈라 및 그 밖의 모든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제15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제18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24조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행기구

제25조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제26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범불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제8장 수정 및 발효

제27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8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기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

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협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사이의 회담이 9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남측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대한민국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들과 북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차수를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그 이행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군사적 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남북 정상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당면과제인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하여 각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 실무급이 10월초에 만나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사항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 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쌍방은 2차 회담을 11월 중순에 북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 9. 26

제 주 도

대 한 민 국
국 방 부 장 관
조 성 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 민 무 력 부 장
김 일 철

북한 핵문제 관련 경과일지

1962. 1.	• 북한 IRT-2000형 연구용 원자로 건설 : 소련의 지원하에 착공
1974. 9.	• 북한 IAEA 가입
1977. 9.	• 북한 IAEA와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 협정체결(IRT-2000)
1980. 7.	• 북한, 열출력 30MW 제1원자로 착공
1985. 12.	• 소련 원자력발전소의 대북제공(440MW×4)을 위한 경제기술 협력 협정 체결 (그러나 결국 미제공)
12. 12.	• 북한 NPT 가입
1986. 12.	• 북한 정무원 산하 원자력 공업부 신설
1987. 2.	• 북한 제2원자로 시험 가동
6. 5.	• IAEA, INFCIRC-153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안) 북한에 전달
1990. 3. 6.	•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1. 16.	• 주UN 북한대사, IAEA사찰 수락조건으로 주한 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 사찰 제의
1991. 6. 28.	• 노태우 대통령, 동북아 비핵화실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 표명
11. 8.	• 노태우 대통령 비핵 5원칙 선언 : 한국은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으며,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을 포기, 북한의 핵사찰 수용 촉구
12. 31.	• 한국과 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 핵무기 제조 접수 사용 금지 · 핵에너지 평화목적 이용 · 재처리 및 농축시설 미 보유 · 쌍방합의하는 대상에 사찰실시 · 1개월내 핵통제공동위 구성 · 본문 교환시 효력 발생
1992. 1. 30.	• 북한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에 서명
3. 14.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설립(1차회의 : 3.17)
4. 9.	• 북한 IAEA 안전조치협정서 비준 • 북한-IAEA 핵안전조치협정 발효(4.10)
5. 4.	•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IAEA에 제출함. 북한 7개 시설과 1989년 결합 핵연료에서 재처리한 약 90g의 플루토늄 보유를 신고
5. 23.~6. 5.	• IAEA 북한 제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찰 실시
12. 12.	• IAEA는 핵폐기물 보관시설로 의심되는 2곳에 대한 접근을 북한에 비공식 요청. 북한은 1곳에 대해서만 유안사찰 허용
1993. 2. 10.	• IAEA Hans Blix 사무총장, 북한의 2곳 미 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수용 촉구
3. 12.	• 북한 NPT탈퇴선언(6.11 탈퇴 유보)

1993. 5.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에게 (1) IAEA 사찰 수용, (2) NPT 탈퇴 철회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6. 2. ~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북한 뉴욕에서 첫 번째 고위급회담 개최 • 북한 IAEA의 전면적이고 비편향적인 안전조치에 동의
7. 14. ~ 7.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2번째 고위급 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문제 일괄처리를 미국에 제의
199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하고 5MW 흑연감속로에서 핵연료를 인출
6.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IAEA 탈퇴서한 제출
6. 15. ~ 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북한 방문 • 핵프로그램 동결 대신 미·북간의 고위급 회담 재개 제의
7. 8. ~ 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간 3번째 회담 제네바에서 개최, 북한 핵동결에 대해 논의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 체결 • 흑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1,000MW급 경수로 2기 제공) • 대체 에너지 증유를 연간 50만톤 제공 • 미·북 관계 개선 •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남북대화 재개 • 북측의 비핵화의무 이행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활동 동결 선언
1995. 1. 18. ~ 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W원자로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북 회담 개최 (건설보관 합의)
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에서 KEDO 협정 서명 • 집행이사국 : 한국, 미국, 일본, EU(4개국) • 일반회원국 :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칠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7개국)
6.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W 원자로 폐연료봉 처리를 위한 미국 기술진 북한 도착 (폐연료봉 8,000여개 확인)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전문 18개조 / 부속서 4개
1996.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NAC International사가 5MW 원자로의 폐연료봉에 대한 밀봉작업(Canning) 개시
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북한간 '특권 면제', '통행', '통신' 의정서 서명
9.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1997. 6.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북한간 '미지급시 조치의정서' 서명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금호 사무소 개설, 부지 정지 공사 착수
1998. 8.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me(8.17)지에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핵의혹 제기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9.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총회, 북한 핵사찰 이행결의안 채택

1998. 1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이사회 경수로 비용 분담결의안 서명 · 총공사비 : 46억불 · 한국 : 공사비의 70%(정률, 약 32억 2천만불) · 일본 : 10억불 상당의 엔화 기여(정액) · 미국 : 잔여 3억8천만불에 대한 조달책임
1999. 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금창리 지하시설 사찰협상 타결 · 사찰일정 : 1차 1999.5월 중순, 2차 2000년 5월, 3차 미국 요청시 · 기타 : 식량 60만톤 지원, 감자재배 시범사업 지원
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KEDO·일본간 차관공여 협정 서명
5. 18. ~ 5.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 · 국무부 한국과 부과장 Joel Wit의 14명 · 방문결과 : 거대한 복합 터널로 구성된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그러나 차후 전용 가능한 거대한 시설임 · 미국 입장 : 기본합의문 위반 사항 발견하지 못함, 추가원자로 건설은 합의문 위반
5. 25. ~ 5.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한 방문
7.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KEDO간 차관공여 협정 서명 : 차관 규모 32.2억불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KEDO 차관공여협정 비준 · 핵연료봉 보관탱크에 모니터링 장치 미허용
8.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은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긴급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
9.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간 미사일 회담 합의
9.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대통령 특별보좌관 W. Perry의 대북정책권고안 미 의회 보고 · 대북정책 추진 3단계 : 1.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자제유도와 미국의 대북제재 일부 완화(단기), 2. 북한 핵, 미사일 개발중단 보장(중기), 3. 한반도 냉전 종식(장기) · 정책권고 : 1. 포괄적이고 통합된 접근방식의 대북정책 채택, 2. 미 정부의 대북정책 조정을 위한 대사급 고위직 대북조정관 임명, 3. 한·일과의 고위정책조정감독그룹 존속, 4. 미 의회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5. 북한 도발에 의한 긴급상황 가능성에 대비
9.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턴 미 대통령 대북제재 부분 해제 발표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백남순 외상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KEDO에 2백만 호주달러 지원 결정
1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A 대북 핵안전협정 이행촉구결의안 채택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연차총회 뉴욕에서 개최
1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의회 2000년도 중유비용 3,500만불 승인
10.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상원 CTBT 비준안 부결
10.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행 러시아 열차에서 방사능 검출. 러, 북 핵 밀거래 의혹 제기

일 자	주요내용
1999. 10.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초음파 유량 측정기로 대북 중유감시 · 중유공급지역(공급비율) : 선봉(59%), 평양(15%), 북청(15%), 청진(5%), 동평양(3%), 순천(2%), 영변(1%)
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공화당 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속 가능성 지적
11.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분 중유 50만톤 북한에 제공완료
11. 23. ~ 11.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집행이사회 개최, 용자계획 및 주계약 체결 문제 논의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 한전간 주계약 공식 서명 · 1호기 2007년, 2호기 2008년 완공 예상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국내업체인 한국중공업, 한국전력기술(주), 한국 원자력연료(주) 등과 KEDO 원전 협력 계약 체결
2000.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 북 베를린 회담 개최, 워싱턴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1.28)
1.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일본국제협력은행 경수로건설비용 분담금 용자계획 체결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경수로 지연에 따른 제네바합의 파기 가능성 경고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지원 경수로 본공사 시작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 북 고위급 준비회담 뉴욕에서 개최 · 북한 : 테러국 제외, 관계 개선 · 미국 : 미사일포기, 제네바합의 지속 논의
4. 1. ~ 4.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 북한간 훈련의정서 협상(3차) · 합의 도달, 서명만 남음
5. 25. ~ 5.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의한 북한 금창리지역 2차 사찰 실시 · 1차 방문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함
7. 3. ~ 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 북한간 품질보증의정서 협상(4차) · 기술적인 문제로 협상 결렬
7.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 · EU간 추가 기여문제 협의

주요 국제 군비통제협약/기구

1. 핵확산 금지조약(NPT : Non-proliferation Treaty)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의 평화적 이용 증진 • 핵무기 기술, 핵물질의 획득·이양·원조 금지 • 핵확산 방지를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NPT가입시 IAEA와의 안전 조치협정 체결 의무화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8년 아일랜드가 유엔 총회에 핵무기 확산의 위험성에 관한 가결의안 제출 • 1966년 유엔은 18개국 군축회의(ENDC)로 하여금 조약원칙을 제정토록 결의 • 1970년 미·소·영 등 주도로 발효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7개국(2000년 9월 현재) ※ 주요 미가입국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 • 1975년 한국가입, 1985년 북한가입(1993.3 탈퇴선언후 1993.6 탈퇴 유보)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5월 NPT 평가/연장회의를 개최, 무기한 연장 결정 • NPT평가회의의 5년마다 개최 • 핵 선진국은 NPT 강화를 계속 주장, 핵 후진국은 소극적 안전보장과 평화적 핵이용 관련 핵 선진국의 협력을 촉구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아국의 적극 지지 및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 촉구 • 핵의 평화적 이용은 제한받지 않도록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 핵 비보유국들의 핵 보유국에 대한 실질적인 핵 군축 요구 증대

2. 전면 핵실험 금지조약(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 수중, 대기권, 우주 등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 핵폭발을 포함한 전면적 핵실험 금지 • 검증이행 체제 수립(국제 검증기구, 핵실험 탐지 기지망 구축 등) ※ 5개 핵무기 보유국, 남·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44개국(원자력 발전소 보유국) 비준 후 180일 경과 시 발효(단, 2년내 발효 불가)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이후 UN 제1위원회(정치·안보분야)가 수차례 CTBT 권고 결의안 채택 불구, 미국 등 핵강국 비협조로 진전 별무 • 냉전종식, START(전략무기 감축협정) 체결, 1995년 NPT 연장회의 등으로 인해 CTBT 체결 필요성 증대 • 1996.9월, 호주 주도하 한·미·러 등 126개국 공동제안으로 CTBT 결의안을 제52차 UN 총회에 상정, 채택
가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9월 서명 개방 후 2000. 9월 현재 한·미·일·중·러 등 155개국 서명(필수 비준국 44개국 중 28개국 비준), 비준 55개국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3월 이후 서명국들은 사찰, 교육, 감시체계 운용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CTBTO(전면핵실험금지조약기구)창설 작업 추진 중 • 미국 등 서방그룹은 협약의 발효를 위해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주요 미서명국의 조기 서명 유도에 주력 • 서명국들은 입시사무국 조직·예산 등에 합의, 실무 산하조직도 구성 완료하여 이행준비 방안을 강구 중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CTBT 가입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속 예상 • 아축 전문요원의 CTBT 기구 진출노력 계속

3. 생물무기 금지협약(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무기/투발수단의 개발·생산·비축·획득·사용을 배제하고 비축된 생물무기 및 생산설비를 폐기하거나 평화 목적으로 전용 • 세균학 분야의 평화적 이용 노력 지속 • 5년마다 BWC 평가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이행상의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이행의 검증 및 제재 방안 결여 -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어연구 활동 허용으로 필요시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취약점 내포 - 행정 및 기술 업무 담당 기구(사무국) 없음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년 6월 Geneva 의정서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성, 독성, 기타 가스 및 세균의 전쟁목적 사용금지 규정 - 그러나 이들의 개발, 생산 및 비축에 관한 규정은 없음 • 1970년대 소련, 동구 국가들은 생·화학무기의 포괄적 금지 협약을 주장하였으나 미·영 등이 생물과 화학무기를 분리해서 다룰 것을 주장, 생물무기 금지 협약안만 제출 • 1969년 미국의 화학무기 폐기 선언, 1970년 화학무기 생산비축 및 사용 포기 선언으로 BWC 협상 가속화 • 1971년 12월 회원국들은 생물무기 금지 협약(안) 채택 • 1975.3.26. 협약 발효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1 개국(2000. 9 현재), 1987. 6. 한국가입, 1987. 3. 북한 가입 •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제검증체제 구축(검증기구 수립 및 검증 관련 세부 절차) 방안 논의 중 • 1995년~현재까지 제네바에서 BWC 검증방안 논의를 위한 특별그룹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국 대표단 구성(외교부, 국방부, 산자부 관련 요원) • 제3차 평가회의(1996.12)시 차기 평가회의가 개최되는 2001년까지 검증의정서 협상을 완료하기로 회원국간 합의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WC 검증의정서 협상에 적극 참여, 아국 입장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국의 생물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지속적 강구 • 북한의 BWC 검증체제 참여 유도를 위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검증체제 참여시 북한 생물무기 위협제거 가능

4. 화학무기 금지협약(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 금지 •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 폐기(협약 발효후 10년 이내) • 협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 실시. • 당사국은 화학무기에 의한 위협으로부터 국제적 지원 및 보호 받을 권리 보유.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8년부터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다자간 협상결과 CWC 발족 • 1993.1.13 CWC 서명식(파리, 한국 포함 126개국) • 1997.4.29 협약 발효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발족 ※ CWC 협약 이행의 검증 및 협의를 위하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설립.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국 171개국, 비준 139개국(2000. 9. 현재) • 1997년 한국 가입, 북한 미가입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당사국총회(1998.11)에서 한국이 의장국으로 피선 • ADD 화학분석실이 OPCW 공인실험실(미국을 비롯한 12개국)로 지정 • 1998년 11월 OPCW사무총장 방한 • OPCW내의 참모 및 국제사찰관 요원으로 4명의 영관장교 진출 활동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을 비롯한 모든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을 이행토록 추진 • 비준 당사국간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 관련 국제적 기술협력 증진 추진

5. 쟁거 위원회(ZC : Zangger Committee)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 : 핵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 • 수출규제품목 : 핵물질, 장비 및 시설 ※ 기술 및 이중용도 품목 미포함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T 3조 '당사국은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는 핵물질 및 장비를 제공할 수 없다' 는 조건을 시행하기 위해 스위스 외교관 Zangger씨 주도로 1974. 8. 설립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개국(우리나라는 1995. 10. 17. 가입/북한 미가입)
<p>평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품목이 적고, 수출조건이 미약하여 전체적인 역할 미미

6. 핵공급국 그룹(NSG : Nuclear Supplier Group)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관련 물질의 수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에 대한 IAEA전면 안전조치 적용 - 제3국으로 재이전(수출)시 원공급국의 사전 동의 - 물리적인 방호조치 및 평화적 목적 사용 서약 • 규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부 : 핵물질/시설/장비/기술 등 43종(쟁거위원회 규제품목 포함) - 2부 : 2중용도 품목 69종(로봇, 공작기계, 고품약 등 첨단재료)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이후 쟁거위원회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강력한 통제 체제의 필요성 인식 확대 • 1978년 1월 미국, 영국 주도로 7개국이 런던지침을 발표하여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NSG) 설립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영, 러 등 35개국(한국은 1995.10.13. 가입/북한 미가입)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세계/개도국들에 대한 원자력 수출규제/기술이전 제한 예상 • 한반도 핵위협 감소를 위해 회원국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및 對북한 감시 노력 지속

7. 호주 그룹(AG : Australia Group)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회원국 상호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확산 관련 정보교환/협의로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의 효율성 제고 - 필요시 추가조치 채택 등을 검토 • 비공식 협의체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조치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시행 - 규제조치는 회원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지에 좌우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화학무기 사용 주장 대두 • 1985. 4. 호주 외무장관 Haydon에 의한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협의 제안, 호주그룹 설립 • 1985. 6. 제1차회의 이후 연 2회 '파리' 호주대사관에서 회의 개최 • 54개 품목의 화학무기 원료물질 수출 통제 • 생물무기 원료물질 및 제조시설/장비 이전 통제 합의(1992.12)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개국(1999.3. 현재, 한국 : 1996.10. 가입)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WC 발효와 연계, 화학무기 확산방지에 더욱 주력

8. 바세나르 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식 무기 :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등 'UN재래식무기 등록제도' (1992. 2)에 따른 품목 -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 정밀공작기계, 슈퍼 컴퓨터 등 • 통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회원국이 통제품목 선정, 수출허용 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 - 수출관련 정보교환 의무화, 회원국간 협력 및 수출통제 일관성 도모
<p>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11, 미·영·불 등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1949년 창설) 17개 회원국은 냉전 이후 지역분쟁 유발국으로의 전략물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COCOM을 해체하고 러시아, 동구 등 공산권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창설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9월 현재 33개국 가입(한국 포함)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체제 출범후 현재까지 세부 운영방침 등 계속 논의중 •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공고' (1993발행, 1999. 5 개정)를 통해 협조

9.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차별적 살상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 4개 의정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금지 · 제3의정서 : 화염무기 사용금지 · 제4의정서 : 레이저 실명무기 사용금지 • 제2부속의정서(지뢰) 개정안(1996.5.3)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지불능 대인지뢰의 원칙적 사용금지 · 탐지물질(8g이상 금속) 부착후 민간인 보호조치(표식, 감시, 차단물) 강구시 사용가능 · 탐지물질 부착은 9년간 유예 가능(즉 9년간 사용가능) · 원격투발(500m이상) 대인지뢰는 자동폭발·자동무능화 장치 구비 · CCW 회원국간 기술이전 허용, 비회원국에게 지뢰/기술이전 금지
<p>가입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9월 현재 79개국 가입(미, 중, 러, 일 등 가입, 북한 미가입, 남한 가입 추진중)
<p>최근동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타와 협약 문안에도 CCW 미가입 국가의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미가입 국가의 최소한 CCW 가입을 촉구하는 의미)함으로써 CCW의 가입은 선택적이 아니라 당위적인 조건으로 변화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18.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관리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의 2통으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텔레스

제31차 SCM 공동성명(1999. 11. 23.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1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9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11월 23일 동 회의에 앞서 조영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셸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제21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국제안보상황과 한반도 내외의 안보환경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안보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긴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크게 공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반도에 관련된 문제는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국정부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구의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한 포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류증진과 협력강화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 및 서해안공단 개발사업 추진 등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들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언 장관은 북한과의 화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일관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한 확고한 안전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양국 장관은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와 99년 9월 및 11월의 미·북 베를린회담 등을 통해 최근 이룩한 미·북 관계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은 향후 계속될 미·북간 협의가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대화 진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기대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페리 조정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보여진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의 및 조율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5. 양 장관은 4자회담의 성공적 진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제4차, 제5차 및 제6차 본회담에서 4자가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분과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룩한 진전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차기 제7차 4자회담 본회담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1953년의 군사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북한군간 장성급회담이 정전협정의 유지와 비무장지대 위기관리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6.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 2월에 합의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하며,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라 영변 및 태천 핵시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로 해체해야 할 북한의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내 경수로 건설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지하의혹시설 건설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합의에 의해 향후에도 계속될 동 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그 성격에 대한 의혹이 감소된 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7.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한·미 양국의 국가 이익에 계속 위협을 주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은 지난 6월 연평해전과 관련, 북한에 대해 지난 46년간 남·북한군간의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었던 북방한계선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등 주요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한국 및 미국의 안보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의 생·화학 무기의 생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북한이 화학무기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8. 코언 장관과 조 장관은 1999년 9월 북한이 미·북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시험, 개발, 배치 및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의 견지를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9.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의 억제를 위해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한·미 연합군이 방어전력으로 연합방위태세, 전술, 교리, 전문성, 훈련 및 상호운용성을 계속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간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한국의 생·화학전 대비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점에 주목하였다.
10. 양자 안보동맹관계의 장기적 미래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한·미 양국이 민주적 가치와 안보이익을 계속 향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21세기에 대비한 장기적 한·미 동맹관계 발전 방향을 토의하기 위한 실무급 안보대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국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한·미 공동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지난 50년동안 동반자로서의 양국간의 신뢰와 우호관계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장관은 노근리 사건의 조사과정이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투명성 있게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가능한 신속히 타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국의 현행 미사일 자율규제 문제가 MTCR 지침에 입각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3.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커다란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통해 협의되고 있는 획득관련 문제가 SCM 분과위원회 및 양국 산업체들간의 전향적인 협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시지원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합의를 근거로 부록화와 기술약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전시지원협정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하였다.
14. 양국 대표단은 제31차 SCM 및 제21차 MCM이 한·미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2000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조 장관은 코언 장관이 보여준 미측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제32차 SCM 공동성명(2000. 9. 21.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32차 안보협의회의(SCM)가 2000년 9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조성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조영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헨리 셀턴 미합중국 합참의장은 9월 20일 제22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특히 6.13~15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긍정적 발전에 대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적극적인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협력과 근본적인 긴장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 코언 장관은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양 장관은 동 회담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심도있게 토의되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히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3. 양 장관은 금번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1) 한·미 양국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대북포용정책 2)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 3) 긴밀한 한·미·일 공조 4) 국제사회의 지지 등 4가지 요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과 1994년의 '미·북 제네바 합의', 그리고 NPT 및 이와 관련된 안전조치 협정상 북한의 책임 등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의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에 대한 제2차 조사가 신속히 완료되어, 관련시설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1999년 5월 1차 조사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5. 양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 당국간 대화, 남·북 경협, 비무장지대 화성기 비방 자제 등 조치로 남·북간 화해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양 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미사일 계획 등이 한·미 및 지역안보에 계속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남·북 대화 및 북한과 여타 국가간의 외교관계 증진으로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지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북한이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6. 양 장관은 핵 비확산, 미사일 및 테러문제와 같은 미·북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양측간 대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또한 2000년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미·북간 최초의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이 2000년 6월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하고, 미·북 미사일회담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미·북 양측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 관심사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양국 관계가 개선·발전되기를 희망하였다.
7. 양 장관은 4자회담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용한 포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최근 남·북 관계 및 미·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4자회담이 재개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1953년 군사정전협정이 유효하며 항구적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8.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위협을 억제하고 대북한 포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코언 장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억제 및 격퇴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대한민국에 대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사시 한·미간 긴밀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미 증원전력의 적시적인 전개 등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며 연합대비태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 안보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반도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쌍무 안보동맹관계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가치와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장관은 21세기에서의 장기적 한·미 안보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장관은 한·미 공동협의를 통해 노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지난 50년 동안 동반자로서 양국간에 형성된 신뢰와 우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유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장관은 노근리 진상규명 과정이 포괄적이고 철저하며, 투명성 있게, 그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11.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2000년 8월 서울에서 재개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SOFA를 개정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측의 관심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SOFA를 개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SOFA 개정을 가급적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양 장관은 또한 한국이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MTCR 지침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코언 장관은 주한미군이 연합토지관리계획 수립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를 개시토록 승인했음을 밝혔다. 양 장관은 동 계획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 국민의 요구와 주한미군의 훈련 소요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간에 세부계획을 충분히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계획은 주한미군이 소규모의 신규 공여지를 제공받고 현재 사용중인 상당부분의 공여지를 반환함으로써 미군 부대 및 시설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4.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정책검토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등 SCM 분과위원회가 양국 국방부간 현안문제 협의 및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5. 양국 대표단은 제32차 SCM 및 제22차 MCM이 한·미 안보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와 미래의 안보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조 장관과 코언 장관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유지하며, 다음 SCM은 2001년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6. 코언 장관은 한측의 따뜻한 환영과 친절한 환대, 그리고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준 데 대하여 조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끝]

군사교류협력 현황(1995~2000)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5	1.19	미국 합참의장 방한	
	1.27	미국 국무장관 방한	
	2. 8	미국 한국전참전기념사업회장 방한	
	2.24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3.21	미국 육군참모총장 방한	
	3.27	미국 태평양 사령관 방한	
	4. 3~14		합참의장, 미국/일본 방문
	4.18	미국 의회전문위원/보좌관 방한	
	4.29~5.10		국방차관, 캐나다/폴란드/일본 방문
	5. 1~5	일본 항공막료장 방한	
	5. 7~12	말레이시아 참모대교수 방한	
	5.19~21	한·러시아 장관회담(서울)	
	5.19~22	호주군함(2척, 533명) 방한	
	5.22~28	일본 방위연구소 학생 방한	
	5.23~27	독일 국방장관 방한	
	5.24	미국 국방지도협의 회원 방한	
	6. 1~7	태국 육군대학원생 방한	
	6. 5	미국 육사생도 방한	
	6. 6~9	파키스탄 해군참모총장 방한	
	6. 9		제2차 동아시아 안보토의 참가(미국)
	6.11~16	페루 국방장관 방한	
	7.10~15		국방차관, 말레이시아 방문
	7.25~28	말레이시아 육군총장 방한	
	8.16	미국 방위비 분담대사 방한	
	8.24	미국 상원의원(1명) 방한	
	8.26~29		한·이스라엘 국방장관 회담(이스라엘)
	8.28	미국 해군차관 방한	
	9. 2		한·미, 한·일국방장관 회담(미국)
	9. 6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9.14~15	한·독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서울)	
	9.22~24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울)	
	9.30	영국 왕립국대원생 방한	
10.11~14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서울)		
10.18	미국 국방비 분담대사 방한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5	11. 2	미국 국방장관, 합참의장 방한	
	11. 4~10	터키 지상군사령관 방한	
	11. 9~23		아·태 영관장교 안보세미나 참가(일본)
	11.13~18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학생 방한	
	11.29	에티오피아 국방장관 방한	
1996	1. 5	한·영 국방장관회담(서울)	
	1.15	미국 국방부 아·태차관보 방한	
	1.18~19		ARF 회기간 지원그룹회의 참가(일본)
	2.25~29	파라과이 육군사령관 방한	
	2.26	한·스웨덴 국방장관회담(서울)	
	3. 2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3.18~26		아·태 다자안보대화참가(태국)
	3.26	필리핀 공군사령관 방한	
	3.30~4.2	싱가포르 해사생도 순항훈련 함정(1척, 49명) 방한	
	3.30~4.6	파키스탄 해군참모대생(13명) 방한	
	4. 4~9	프랑스 해군함정(1척, 90명) 방한	
	4.15	미국 국방장관 방한	
	4.27~5.3		국제 안보협력회의 참가(영국)
	5.13		한·일 국방장관회담(일본)
	5.17		한·태국 국방장관회담(태국)
	5.19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사우디)
	5.26~28	사우디 전걸프전 통합사령관 방한	
	6. 3	한·파키스탄 국방장관회담	
	6. 3~8	폴란드 바르샤바군관구사령관 방한	
	6. 4	일본 신진당의원단 방한	
	6. 7		제3차 동아시아 안보토의(미국)
	6. 9~14		제5차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움(미국)
	6.10~16	일본 방위연구소 학생 방한	
	6.12	네덜란드 통신장관 방한	
	6.13~17	프랑스 국방참모대생 방한	
	6.21~25		국방차관, 싱가포르 방문
	6.29~7.4	태국 해사 순항함정(2척, 400명) 방한	
	7. 2~14		합참의장, 루마니아/스위스/스웨덴/일본 방문
	7. 8	미국 태평양사령관 방한 한·호주 정치군사합동회의(서울)	
	7. 8~10	한·말레이시아 군수공동위원회(서울)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6	7.16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7.26~8.2	러시아 해군창설 300주년기념행사 참가 (합정 2척, 425명)	
	8. 6	세계정치학회, 군사연구위원회 회원 방한	
	8. 7	미국 제7함대사령관 방한, 미국 국방부 정보본부장 방한	
	9. 2~6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방한	
	9.14~18	뉴질랜드 국방차관 방한	
	9.17~20	영국 공군참모총장 방한	
	9.21~24	말레이시아군 총사령관 방한	
	9.23~24	일본 방위청 정무차관 방한	
	10.16~19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참가
	10.21~24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방한	
	10.30~31		국방부장관, 미국 방문
	11. 3~ 6		국방부장관, 러시아 방문
	11.15~20	이탈리아 해군함정 방한(2척 562명)	
	12. 8~10	일본 통합막료의장 방한	
12.11~21		한·구주 국방정책실무회의 참가 (독일/프랑스/영국)	
1997	2. 1~ 4	미국 육군 예비군 사령관 방한	
	2. 3~ 5	키르키즈 국방장관 방한	
	2.25~29	파라과이 육군사령관 방한	
	3.20~22	일본 육상막료장 방한	
	3.29	스위스 국방참모총장 방한	
	4. 1	Cohen 미 국방장관 방한	
	4. 8~ 9	미국 합참의장 방한	
	4.20~26	스웨덴 군 총사령관 방한	
	4.21~25	몽골 국방부 정보국장 방한	
	4.22	미국 Dalton 해군성장관 방한	
	4.22~29	일본 방위청장관 방한	세계 공군참모총장 회의 참가(미국)
	4.30~5.4	터키 지상군사령관 방한	
	5. 6	West 미 육군성장관 방한	
	5.18~21	한·이 방산군수공동위, 이스라엘 국방사무차관 방한	
	5.21~6.19	영국 해군함정 방한(5척 1,700명)	
	6. 2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방한	
	6.14~16	인도 해군참모총장 방한	
	6.21~7.5		합참의장, 미국/멕시코/일본 방문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7	6.23~27	제6차 한·태 방산군수공동위	
	6.26	제2차 한·불 국방정책 실무회의	
	7. 4~9	러시아 부총리 방한	
	7. 5~8		합참의장, 방일
	7. 7~11	방글라데시 국방차관 방한	
	7. 9~11	태국 공군총사령관 방한	
	7.10~12	필리핀 장관 방한	
	7.13~17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일본)
	7.22~26	제3차 한·필리핀 군수·방산 공동위	
	7.28~8.1	터어키 국방부 경제·기술차관보 방한, 제2차 한·터어키 방산협력회의	
	7.31~8.1		태평양지역 국제군수회의참가(벤쿠버)
	8. 7~9		제4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일본방위청)
	9. 2~6	일본 항공마료장 방한	
	9. 3~5		제4차 한·불 방산·군수 공동위(파리)
	9. 5~8	호주 해군함정 방한(2척)	
	9. 8~10		제7차 한·영 방산·군수공동위(런던)
	9.21~25	영국 해군참모총장 방한	
	9.24~28	독일 함정 방한(4척)	
	10. 8~10	일본 방위청 방위심의관 방한	
	10.20~24		제2회 아·태 국방당국자 포럼 참가(동경)
	10.27~28	제3차 한·독 국방정책실무회의	
	10.27~11.1	일본 육자대 간부학교 학생장교 한국방문 (28명)	
	11. 5	일본 방위연구소 부소장, 정책차관보 예방	
	11. 6~20		제4차 아·태 안보세미나 참가(동경)
	11.16~19	독일 국방차관 방한, 한·독 방산협력 MOU체결	
	11.19~21	브라질 해군함정 방한	
	11.19~23	이태리 국방사무 차관 방한, 방산·군수 공동위 개최(서울)	
	11.19~26		국방차관, 러시아/중국 방문
	11.21		한·러 정책실무회의(모스크바)
	11.26~29	루마니아 국방장관 방한, 군수·방산협력 협정 체결	
12. 5	한·호 국방세미나 실시(KIDA)		
12. 9		제29차 SCM/MCM(워싱턴)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8 1.21~22	미 국방장관 방한	
2. 2~4	일본 공막방위부장 방한	
3.24	호주 외무장관, 국방장관 예방	
4. 1	일본 정보본부 본부장, 국방부 방문	
4.19~25	케냐 국대원장 방한	
4.23~24	한·미·일 동아시아 안보토의(서울)	
4.24	미 CFR 대표단 방한	
4.27~29	미 합참의장 방한	
5. 1~ 4	미 공군참모총장 방한	
5. 2~17	호주 사관생도 방한	
5. 6	미 국방부 국제안보차관보 방한	
5. 6~ 9	이태리 국대원장 방한	
5. 6~10	러시아 지상군 총국장(총사령관) 방한	
5. 9~14	스위스 장교단 방한	
5.13~28	필리핀 해군창설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호위함 1척)	
5.28~6.3	러시아 제1국방차관 방한	
6. 8~12	프랑스 국방장관 특사 방한	
6.14~21		호주 국방관리세미나 참석
6.16~18	30회 SCM 분과위원회 개최	
6.16~19	제2차 한·영 국방정책 실무회의 (서울)	
6.25	제5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서울)	
6.26	제1회 한·일 안보정책 협의회(서울)	
7. 6	나이지리아 국대원생 방한	
7. 8~13	태국 해사생도 순항분대 방한	국방장관, 미국 방문
8.21	중국 군 부총참모장 방한	
8.25~9.25	베트남 군인 축구팀 방한 전지훈련	
8.31~9. 2		국방장관, 일본 방문
9. 9~10	한·호 국방정책실무회의	
9.12~18		아·태지역 민·군 포럼(미국)
9.19	美 국방부 부장관 방한	
9.28~10.2		아·태지역 군고위급 회의(미국)
10.12	스위스 국방장관 방한	
10.28~11.2	브라질 육군장관 방문	
10.29	프랑스 공군참모총장 방한	
11.10	미상원의원(아·태 소위원회장) 방한	
11.16	캐나다 국방참모총장 방한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8	11.16~21	제5차 한·불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11.26	일본 육상막료장 방한	
	11.29~12.3	한·캐나다 국방정책 실무회의	
	12.15~20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 참가 (중국)
1999	1. 6~8	한·일 국방장관회담	
	1.14~15	제30차 SCM 개최	
	1.19	프랑스 국방장관 방한	
	2. 2~14		합참의장, 미국/캐나다 방문
	2. 5	파키스탄 해군 참모총장 방한	
	2.26~27	한·미·일 안보토의 개최	
	3. 2~ 7	러시아 해군 사령관 방한	
	3.10~14	미 국방정보본부장 방한, 미 육군 총장 방한	
	3.17~19	미 태평양 사령관 방한	
	3.21~24	프랑스 해군 총장 방한	
	3.23~26	호주 국방총장 방한	
	3.29~4.1	일본 해자대 실무장교단 방한	
	4.12~16	중국 조정선수단 방한	
	4.22	캄보디아 군 총사령관 방한	
	5. 6	일본 공막장, 장관예방	
	5. 7	뉴질랜드 육군 총장 방한	
	5. 9~19		제54회 CISM 총회 참가(네덜란드)
	5.13	방글라데시 해군총장 방한	
	5.17~21	한·필리핀 군수·방산 공동회의	
	5.21	미 국참대생 국방부 방문	
	5.26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	
	6. 4	싱가포르 국방장관 장관예방	
	6. 6~12		터키군 상륙기동 훈련 참관
	6.13~21	한·호주, 한·뉴질랜드 안보·국방정책실무회의	
	6.16~17		친선 군사사절단 러시아 방문
	6.16~20	에콰도르 육군 총사령관 방한	
	6.17	스위스 국방·체육·민방위 장관 방한	
	6.21~26		제31차 SCM/SCC, DTICC, LCC 분과위(미국) 참석
	7. 4~ 6	싱가포르 교육부장관 겸 제2국방장관 방한	
	7. 7~ 9		국방부 차관, 뉴질랜드/브라질/베네수엘라 방문
	7.13~14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1999	7.15	제1차 한·일 합참·통막 회의(일본)
	7.19~24	해사생도 중국 방문
	7.29	한·미 국방장관 회담
	8.6~19	제2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8.12	한·러 국방정책 실무회의 개최
	8.23~29	한·중 국방장관 회담
	9.3	한·러 국방장관 회담
	9.13~17	쿠웨이트 국방장관 방한
	10.4~9	스위스 군사연구회 장교단(21명)
	10.5	영국 국대원생 차관예방
	10.6	독일 국참대 총장(랑에 소장), 차관예방
	10.11	일 방위대학교장 정책보좌관 예방
	10.18~22	베트남 차관 방한
	11.10~15	중국 교육대표단 방한
	11.11~21	상무 농구팀, 방중
	11.17~21	국방장관, 터키 방문
	11.21~23	제31차 SCM 및 제21차 MCM
	11.24	한·캐나다 국방정책실무회의
	12.5~11	베네주엘라 감찰총감 방한(차관회담)
12.7~10	한·몽골 국방장관 회담	
12.14~18	한·중 국방정책협의회	
2000	1.19~23	한·중 국방장관회담(1.20일)
	1.23~27	한·터키 군수·방산공동위
	2.8	한·러 정보실무회의
	2.12~13	제2차 한·이집트 정보교류회의
	2.14~15	제1차 한·호주 해군 대 해군 회의
	2.14	佛 군사고등연구원장 일행 국방부 방문
	2.17~18	한·러 군축 비확산회의
	2.24	호주 재야국방장관 장관 예방
	2.26	미 태평양사령관 장관 예방
	2.27~3.9	한·영·불·독 군수·방산공동위
	3.14~17	일 통막의장 방한
	3.15~25	중국 심양농구선수단 방한
	3.17~18	미 국방장관 방한
	3.19~22	미 공군총장 방한
	3.23~4.1	한·영·불·독 국방정책실무회의
	4.13~19	합참의장, 동티모르/호주 순방

일 정		방 한	해 외 방 문
2000	4.22~27		차관, 베트남 방문
	4.24~28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
	5. 1~ 5	터키 지상군 사령관 방한	
	5. 9~10	한·호 POL·MIL/MIL·MIL 회의	
	5.14~18	스페인 공군총장 방한	
	5.14~19	인니 해군총장 방한	
	5.15~24		국방부장관, 러시아/일본 순방
	5.28~6. 6	중국 국방대학 대표단 방한	한·인니(5.28~31)/필리핀(6.1~3)/ 태국(6.4~6) 군수·방산공동위
	5.29~6. 2	일본 해막장 방한	
	6. 3~6.28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참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벨기에, 캐나다, 터키, 필리핀,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태리, 태국, 콜롬비아)	
	7. 5~7. 8	뉴질랜드 국방장관 방한	
	8.27~8.31	방글라데시 해군 총장 방한	
	8.28~9. 4		합참의장, 중국방문
	9. 3~9. 7	필리핀 해군사령관 방한	
9.25~10. 1	말련 육군참모총장 방한		

아·태 지역 다자안보기구/참가국

국가명	ARF(23개국)		NEACD (5개국)	CSCAP (20개국)
	ASEAN (10개국)	ASEAN 외 참가국 (13개국)		
한국		○	○	○
북한		○		○
미국		○	○	○
일본		○	○	○
중국		○	○	○
러시아		○	○	○
호주		○		○
캐나다		○		○
뉴질랜드		○		○
말레이시아	○			○
태국	○			○
인도네시아	○			○
싱가포르	○			○
필리핀	○			○
베트남	○			○
라오스	○			
미얀마	○			
브루나이	○			
캄보디아	○			○
파푸아뉴기니		○		○
인도		○		○
EU 의장국		○		○
몽골		○		○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 국방부 참가 현황(1996.1~2000.7)

일자/장소	다자안보협력회의
1996.1.18~19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국방백서 정기발간 장려 및 고위관리회의에 제출 논의 - 국방관계자들의 고위관리회의 및 회기간 회의 참가 장려
1996.4.15~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UN 재래식무기 이전·등록제도 참여 추진 - 회원국간 군사훈련 참관 및 통보 문제 논의
1997.2.19~20 아일랜드 더블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재난구호회의 - 각국의 재난구호기관간 연락망 구성 논의 - 각국의 재난구호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교환 논의
1997.3.6~8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각국 국방정책에 대한 대화 지속 및 국방정책서 제출 권장 - UN 재래식무기 이전·등록제도에 미참여 회원국 참여 촉구 - 비군사적 분야의 신뢰구축조치 활성화 방안 논의
1997.3.10~14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PKO 회의 - 국가별 PKO 파견요원 훈련내용 표준화 논의 -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정책기조 및 참여현황 소개
1997.4.7~11 뉴질랜드 웰링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뢰제거 워크숍 - 범세계적 지뢰문제 논의 - 지뢰사용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발표
1997.5.19~20 말레이시아 랑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4차 고위관리회의(SOM) - 지역 안보정세 논의, 회기간 회의 평가 - 국방대학원장 회의 개최 합의
1997.7.27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4차 외무장관회의 - 한반도 평화체제 및 4자회담에 대한 지지 확인 - 대만 핵폐기물의 이전에 대한 부당성 역설 및 이해/조력 유도
1997.10.7~8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1차 국방대학원장 회의 - 역내 안보교육 및 연구분야 협력 논의 - 국방대학원장 회의의 지속적 개최 논의
1997.11.4~6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아·태 안보정세에 대한 평가 - 해양안보분야 협력 증진 논의

일자/장소	다자안보협력회의
1998.3.4~6 호주 시드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새로운 신뢰구축조치, 국방정책, 예방외교 논의 - CWC 및 대인지뢰금지 관련 논의
1998.5.20~22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5차 고위관리회의(SOM) - 아·태지역 안보상황, 군축 및 비확산 논의 - 한반도 관련 남북대화, 4자회담, KEDO 등 의장성명에 반영
1998.7.27 필리핀 마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5차 외무장관회의 - 안보정세/현안 논의 및 회기간 회의결과 보고 - NEASED 지지 유도, 대인지뢰금지 관련 정부입장 반영 - 제2차 국방대학원장회의 한국개최 재확인
1998.9.1~3 호주 캔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국방백서회의 - 국방백서 작성방법 등 수록내용 논의 - 국방백서 미발간 국가들에 대한 조언
1998.9.8~10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2차 국방대학원장회의 - Internet, e-mail 정보교류 확대, 교재개발/공동연구 추진 - 학생/교수 교환방문 및 국대원장간 안보 공감대 확산
1998.11.4~6 미국 호놀룰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신뢰구축조치 검토(단기, 중장기) - 해양전문가 회의에서 해양법/질서, 해양보호 문제 논의
1998.11.25~27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군의료 심포지움 - 말라리아 등 열대전염병 논의 및 의료기관/군병원 방문
1999.3.2~5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국가별 안보인식 교환, 신뢰구축/예방외교 관련 검토 - 대북포용정책, 4자회담, 남북기본합의서, KEDO, 대인지뢰금지관련 한국입장 반영 및 Y2K 문제 공동대응 제기 - 국제 군비통제/군축, 비확산 문제 등 논의
1999.3.22~26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PKO 세미나 - PKO 운용 관련 선진 경험 교육
1999.4.11~14 러시아 모스크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재난구호회의 - 재난구호를 위한 쌍무/다자협력 강화 논의 - 선진 장비를 이용한 재난구호활동 견학
1999.4.18~23 미국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국방/외교 전문인력 개발 프로그램 - 다자안보협력 기법 교육 - 위기관리센터 견학 및 다자협력 실습
1999.5.19~2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6차 고위관리회의(SOM) - 국가별 안보인식 교환, 신뢰구축/예방외교 관련 검토 - 국제 군비통제/군축, 비확산 문제 논의 - 회기간 회의 결과 종합, 외무장관회의 건의사항 작성

일자/장소	다자안보협력회의
1999.7.26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6차 외무장관회의 - 한반도, 남중국해, 동티모르, 강대국 관계 등 국제/지역안보인식 교환 - 군비통제/군축, 신뢰구축/예방외교 진전 관련 합의 - 향후 1년간 회의 및 활동 승인
1999.9.21~25 몽골 울란바토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3차 국방대학원장 회의 - 21세기 아·태 지역의 다자안보협력 - ARF 참가국 국방대학원/방위연구소간 다자협력 논의
1999.10.19~20 중국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국방/외교 관리 전문화 프로그램 - 중국외교/국방정책에 대한 소개 - 예방외교 개념 논의
1999.11.12~15 일본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지역안보상황 인식 교환 - 국방관리업무·오찬 실시, ARF에서의 군 역할 증진 논의
1999.12.13~16 호주 캔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전쟁법 세미나 - 전쟁법의 적용과 교육훈련에 관한 논의 - 전쟁확산 방지를 위한 교전규칙 준수 문제 논의
2000.1.25~28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재난구호 세미나 - 개별국가, 소지역 및 지역적 차원의 재난구호 협력방안 논의 - 지역 재난대비태세 강화방안 논의
2000.3.28~31 호주 캔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국방언어학교회의 - 각국의 국방언어 교육훈련 실태 논의/정보 교환 - 한국의 군사영어교육 현황 소개
2000.4.4~7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회기간 회의 (ISG-CBMS) - 대북포용정책, 베를린 선언 등 설명 국제적 지지 확보 - 초국가적 범죄 정치·안보 인식 교환
2000.4.23~28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외무/국방 관리 전문화프로그램 -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논의 - 아세안 협력방식에 대한 이해 증진
2000.5.4~6 베트남 하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재난구호회의 - 참가국간 재난구호를 위한 효율적 협조방안 논의 - 재난구호간 군의 역할 논의
2000.5.17~19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7차 고위관리회의(SOM) -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련 설명 및 지지 확보 - 북한의 ARF 가입 관련 문제 논의
2000.7.27 태국 방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F 제7차 외무장관회의(FMM) - 북한의 ARF 가입 및 남북관계 진전 환영 - 역내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CBM/예방외교 발전 적극 동참 합의

전세계 PKO 활동현황

2000. 8. 30. 기준

순번	명칭	설치시기	배치지역 및 임무	인원	국가수
1	UNTSO	1948. 6	팔레스타인 지역 정전감시	153	22
2	UNMOGIP	1949. 1	인도/파키스탄 국경(캐슈미르) 정전감시	46	8
3	UNFYCIP	1964. 3	사이프러스 정전감시	1,251	11
4	UNDOF	1974. 6	시리아 · 골란고원 정전감시	1,035	6
5	UNIFIL	1978. 3	남부 레바논 정전감시	5,619	11
6	UNIKOM	1991. 4	이라크/쿠웨이트 정전감시	1,111	32
7	MINURSO	1991. 9	서부사하라 정전감시 및 선거지원	265	29
8	UNOMIG	1993. 8	그루지아 정전감시	102	22
9	UNMIBH	1995.12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정전감시	1,723	43
10	UNMOP	1996. 1	프레블라카반도(크로아티아) 평화협정 이행 지원	27	23
11	UNMIK	1999. 6	코소보 평화와 안정지원	4,018	57
12	UNAMSIL	1999.10	시에라리온 정전감시	12,481	35
13	UNTAET	1999.10	동티모르 평화와 안정 지원	9,352	48
14	MONUC	1999.11	콩고민주공화국 정전감시	262	37
15	UNMEE	2000. 8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10	8

※ 15개 임무지역, 89개국 37,400명 참가

우리 군의 PKO 참여 현황

■ 참여실적

- 참여지역 : 6개 지역(소말리아, 앙골라, 서부사하라, 인도·파키스탄, 그루지아, 동티모르)
- 참여인원 : 연인원 2,820여명
 ※ 1999. 8. : 32명(세계 50위) → 2000. 11. : 476명(세계 26위권)

■ 세부 참여현황

2000. 11월 기준

지역		부대/인원	기간	교대주기	연인원
既往 참여	소말리아	공병대대 252명	1993. 7~1994. 3	6개월	504명(2진 파견)
		사령부 참모 6명	1993.12~1994. 9	1년	6명
	앙골라	공병대대 198명	1995.10~1996.12	6개월	594명(3진 파견)
		사령부 참모 6명	1996. 2~1997. 2	1년	6명
현재 참여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20명	1994. 9~	6개월	345명 1-4진 : 42명, 5-6진 : 20명 7진 : 14명 8-13진 : 20명
	인·파	군읍서버 9명	1994.11~	1년	54명
	그루지아	군읍서버 3명	1994.10~	"	27명
	동티모르	보병대대 419명	1999.10~	6개월	1,256명
		사령부 참모 12명	2000. 1~	1년	12명
		여단본부 13명	2000. 2~	6개월	21명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병일지

■ 파병준비 ~ 호주 타운스빌 이동

일 자	내 용	비 고
1999. 9. 7	유엔으로부터 파견 가능성 타진(비공식)	
9. 12	인니 하비비 대통령, 다국적군 전개 동의의사 표명	
9. 13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파병계획 심의(제70차)	파병방침 결정
9. 14	파병 관련 당·정 협조회의	
9. 15	유엔 안보리 다국적군 창설승인(결의 제1264호) 유엔 사무총장/호주 외무장관 공식 파병 요청	다국적군 사령부 창설(9.16)
9. 19	국방부 현지조사단 파견(9.19~9.25/호주, 동티모르)	준장 김태영외 1명
9. 20	파병계획 청와대 보고/국회 설명 파견전 국내 교육훈련(9.20~10.2, 2주간)	호주군 동티모르 전개
9. 21	파병계획 국무회의 의결	
9. 24	연락장교 전개(호주 시드니 전구사령부)	중령급 2명
9. 28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방부 파병지령 하달
9. 29	상륙수부대 창설식(특전사 5여단, 육군총장 주관)	
10. 1	선발대 출발(58명) 상륙수부대 대통령님 신고(계룡대, 국군의 날 행사시)	합참 협조/정찰단 동승
10. 4	상륙수부대 환송식(14:00/서울공항, 국방장관 주관) 제1제대 출국(15:00, 209명)/호주 타운스빌 이동	현지적응 훈련 (제대별 1주간, 타운스빌)
10. 9	제2제대 출국(15:00, 152명)/호주 타운스빌 이동	

■ 동티모르 전개 이후

일 자	내 용	비 고
1999. 10. 16	선발대 동티모르 전개(156명) 화물수송선 콤포항 도착	
10. 22	본대 동티모르 전개(263명) 장비 및 물자 하역/수송 완료	
10. 25	다국적군 지휘부 상록수부대 방문(사령관/부사령관)	UNTAET창설 승인 (안보리 결의 1272호)
11. 27	유엔의 동티모르 PKF 참여요청 접수	
12. 7	합참 현지 지도방문(12.7~12.11)	작전부장의 18명
12. 21	국회 국방위 위문단 상록수부대 방문	국방위원장의 의원 4
2000. 1. 8	PKF 사령부 참모파견	준장 권행근 외 11명
1. 28	구스마오 CNRT의장 국방장관 예방	
2. 1	다국적군 → 유엔 PKF로 전환	
2. 18	동부여단 연락단/헌병반 파견	대령 이병주 외 12명
3. 10	부대교대 대비 재보급(3.10 ~ 4. 8)	해군 LST 2척
3. 20	제2진 부대창설식	
4. 18	제2진 1제대 출국	지도방문단 동승(6명)
4. 20	제1진 1제대 귀국	
4. 26	제2진 2제대 출국	
4. 27	제1·2진 지휘권 교대	제2진 임무개시
4. 28	제1진 2제대 귀국	
5. 3	제1진 해단식 (특전사 5여단 연병장)	
9. 29	상록수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국회의결	연장기간 : 2000.10~2001.12

연차별 정부재정과 방위비

(단위: 억원,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 경상 GDP (증가율)	3,773,498 (16.7)	4,184,790 (10.9)	4,532,764 (8.3)	4,443,665 (△1.9)	4,837,778 (8.9)	5,321,556 (10.0 내외)
· 정부재정 (증가율)	556,058 (16.8)	635,883 (14.4)	711,528 (11.9)	807,629 (13.5)	884,850 (9.6)	926,576 (4.7)
· 일반회계 (증가율)	518,811 (20.0)	588,228 (13.4)	667,064 (13.4)	755,829 (13.3)	836,852 (10.7)	864,740 (3.3)
· 재정용자 특별회계 (증가율)	37,247 (△14.9)	47,655 (27.9)	44,464 (△6.7)	51,800 (16.6)	47,998 (△7.3)	61,836 (28.8)
· 방 위 비 (증가율)	115,070 (9.9)	127,360 (10.7)	143,505 (12.7)	143,755 (0.2)	143,368 (△0.3)	150,432 (4.9)
· 국 방 비 (증가율)	110,744 (9.9)	122,434 (10.6)	137,865 (12.6)	138,000 (0.1)	137,490 (△0.4)	144,390 (5.0)
· 병 무 청 (증가율)	1,161 (8.1)	1,388 (19.6)	1,599 (15.2)	1,590 (△0.6)	1,422 (△10.5)	1,305 (△8.2)
· 전·해경 (증가율)	3,165 (11.1)	3,538 (11.8)	4,041 (14.2)	4,165 (3.1)	4,456 (7.0)	4,737 (6.3)
· 방위비 비율						
· 대 GDP(%)	3.0	3.0	3.2	3.2	3.0	2.9
· 대 재정(%)	22.2	21.7	21.5	19.0	17.1	17.4

* 방위비의 대 재정비율은 일반회계 기준임.

2000년도 사항별 국방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999 예산	2000 예산	증감	%
합계	13조 7,490	14조 4,390	6,900	5.0
투자비	5조 2,304	5조 3,437	1,133	2.2
· 방위력개선	4조 1,403	4조 2,188	785	1.9
· 장비유지	1조 514	1조 878	364	3.5
· 지원장비 획득	387	371	△16	△4.1
경상운영비	8조 5,186	9조 953	5,767	6.8
· 인건비	5조 298	5조 5,609	5,311	10.6
· 사업비	3조 4,888	3조 5,344	456	1.3
· 급식	9,467	9,567	100	1.1
· 피복	2,161	2,212	51	2.4
· 부대활동	2,993	3,380	387	12.9
· 교육훈련	1,521	1,295	△226	△14.9
· 장비운영	4,550	4,151	△399	△8.8
· 시설건설	3,888	4,061	173	4.4
· 시설유지	2,020	2,061	41	2.0
· 물자획득	717	670	△47	△6.6
· 예비전력	594	568	△26	△4.4
· 연구 / 보조기관	1,060	964	△96	△9.1
· 주둔군지원	1,968	2,255	287	14.6
· 기본사업비	3,949	3,985	36	0.9
· 책특회계전출금	-	175	175	-

연도별 국방비 구성현황

(단위:억원)

연도별	국 방 비		경 상 운 영 비			투 자 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구성비	금액	증가율	구성비
1979	15,366	-	9,077	-	51.9	6,289	-	40.9
1980	22,465	46.2	13,219	45.6	58.8	9,246	47.0	41.2
1981	26,979	20.1	16,408	24.1	60.8	10,571	14.3	39.2
1982	31,207	15.7	19,392	18.2	62.1	11,815	11.8	37.9
1983	32,741	4.9	20,525	5.8	62.7	12,216	3.4	37.3
1984	33,061	1.0	20,122	△2.0	60.9	12,939	5.9	39.1
1985	36,892	11.6	21,845	8.6	59.2	15,047	16.3	40.8
1986	41,580	12.7	23,842	9.1	57.3	17,738	17.9	42.7
1987	47,454	14.1	26,001	9.1	54.8	21,453	20.9	45.2
1988	55,202	16.3	30,550	17.5	55.3	24,652	14.9	44.7
1989	60,148	9.0	34,155	11.8	56.8	25,993	5.4	43.2
1990	66,378	10.4	38,515	12.8	58.0	27,863	7.2	42.0
1991	74,764	12.6	44,988	16.8	60.2	29,776	6.9	39.8
1992	84,100	12.5	51,968	15.5	61.8	32,132	7.9	38.2
1993	92,154	9.6	57,981	11.6	62.9	34,173	6.4	37.1
1994	100,753	9.3	64,637	11.5	64.2	36,116	5.7	35.8
1995	110,744	9.9	71,032	9.9	64.1	39,712	10.0	35.9
1996	122,434	10.6	79,772	12.3	65.2	42,662	7.4	34.8
1997	137,865	12.6	89,032	11.6	64.6	48,833	14.5	35.4
1998	138,000	0.1	87,098	△2.2	63.1	50,902	4.2	36.9
1999	137,490	△0.4	85,186	△2.2	62.0	52,304	2.8	38.0
2000	144,390	5.0	90,953	6.8	63.0	53,437	2.2	37.0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1998년 기준

국	가	GDP (10억US\$)	국방비 (억US\$)	GDP 대 국방비(%)	병 력 (천 명)	1인당 군사비 (US\$)
미	국	8,500	2,659	3.2	1,402	982
일	본	3,800	370	1.0	243	293
독	일	2,100	324	1.5	334	395
프	랑 스	1,400	398	2.8	359	676
러	시 아	1,100	539	5.2	1,159	368
영	국	1,300	366	2.8	211	624
캐	나 다	604	66	1.1	61	229
이	태 리	1,200	226	2.0	298	391
스	페 인	553	73	1.3	194	186
멕	시 코	400	38	1.0	175	39
브	라 질	583	181	3.2	313	108
아르헨티나		289	52	1.8	73	147
중	국	703	367	5.3	2,820	30
대	만	310	139	4.6	376	642
인도네시아		189	49	2.6	299	24
태	국	137	20	1.5	306	32
이 스 라 엘		97	110	11.6	175	1,844
말레이시아		88	32	3.7	110	146
싱 가 포 르		96	47	5.0	73	1,543
이 집 트		69	28	4.1	450	45
호	주	390	74	1.9	57	391
인	도	469	138	3.0	1,175	14
한	국	426	129	3.1	672	278
북	한	14	20	14.3	1,055	93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2000년도 주요 군사장비 전력화 계획

종 류		2000년도 구입수량	구입처
지 상 전 력	지휘용/사격지휘 장갑차	48/56대	연구개발
	K-9 155미리 자주포	18문	연구개발
	화생방 정찰차	23대	연구개발
	BO-105 소형정찰헬기	10대	기술도입생산
	MSC-500K 전술통신체계	6식	연구개발
	차기 VHF	34대	기술도입생산
	저고도탐지레이더	8대	연구개발
	오리콘성능개량	10문	연구개발
해 상 전 력	구축함(KDX-I)	1척	국내건조
	상륙함(LST)	2척	국내건조
	함대함 하퐁유도탄	16발	FMS
	잠수함(KSS-I)	2척	국내건조
	해상초계기(ISAR)	5식	FMS
	해상작전헬기(LYNX)	8대	해외구매
	해상감시레이더	13대	연구개발
공 중 전 력	전투기(KF-16)	10대	면허생산
	기본훈련기(KT-1)	13대	연구개발
	대공제압무인기	110대	해외구매
	공대공유도탄(AIM-120)	100발	FMS

방산관련 협정체결 현황

2000년 6월말 기준

방산군수협약 협정	과학 기술자 및 지능 교환협정	품질 보증 협정	가격결정 협정
미 국	미 국	미 국	미 국
영 국	프 랑 스	영 국	영 국
프 랑 스	이 태 리	프 랑 스	독 일
이 태 리	영 국	스 페 인	
스 페 인		스 위 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스라엘		이태리	
태국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벨기에	
필리핀		덴마크	
루마니아		호주	
캐나다		필리핀	
러시아		독일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터키	
네덜란드			
터키			
베네주엘라			
18개국	4개국	15개국	3개국

※ 고딕체로 표시된 6개국은 1999년 이후 신규로 협정이 체결된 국가임.

세계무기수출입 현황

1. 수출현황

(단위: US 백만불, 1990년 불변가)

수출국 및 순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1998	
1994-1998		1993-1997							
1	미	국	1	9,844	9,580	9,712	12,404	12,342	53,882
2	러	시 아	2	1,155	3,271	3,602	2,956	1,276	12,260
3	프	랑 스	5	756	806	1,924	3,284	3,815	10,585
4	영	국	3	1,494	1,708	1,800	3,238	673	8,913
5	독	일	4	2,637	1,425	1,399	686	1,064	7,211
6	중	국	6	731	849	751	338	157	2,826
7	네	덜 란 드	7	495	378	414	551	506	2,344
8	이	탈 리 아	8	306	330	366	442	298	1,742
9	우	크 라 이 나	10	189	192	195	516	449	1,541
10	캐	나 다	9	365	436	239	137	217	1,394
11	스	페 인	11	275	111	99	637	221	1,343
12	이	스 라 엘	12	115	206	257	292	147	1,017
13	체	코	13	378	188	132	30	16	744
14	벨	라 루 스	14	8	24	129	516	16	693
15	벨	기 에	16	20	296	144	89	51	600
16	스	웨 덴	17	63	180	155	51	136	585
17	모	르 도 바	15	165	-	-	392	-	557
18	폴	란 드	20	131	184	65	20	1	401
19	호	주	19	24	22	15	318	3	382
20	스	위 스	18	70	75	122	62	35	364
21	노	르 웨 이	21	186	54	9	56	2	307
22	덴	마 크	22	230	-	3	-	-	233
23	슬	로 바 키 아	23	28	85	48	44	-	205
24	우	즈 베 키 스탄	63	-	-	-	-	170	170
25	브	라 질	25	38	40	28	28	-	134
26	싱	가 포 르	31	11	2	-	75	41	129
27	북	한	24	48	48	22	-	-	118
28	인	도 네 시 아	33	25	38	-	-	52	115
29	카	타 르	26	51	15	-	44	-	110
30	한	국	29	8	25	20	27	30	110
31	그	리 스	35	-	-	30	52	18	100
	기	타*		226	298	303	131	209	1,167
합			계	20,073	20,861	21,984	27,416	21,944	112,278

*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억달러 미만을 수출한 국가들 (출처: SIPRI Yearbook, 1999)

1. 수입현황

(단위: US 백만불, 1990년 불변가)

수입국 및 순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1998
1994-1998		1993-1997						
1	대 만	2	731	1,162	1,451	5,311	4,656	13,311
2	사우디아라비아	1	1,298	1,249	1,961	3,292	1,948	9,748
3	터 키	3	1,386	1,327	1,132	1,394	1,376	6,615
4	이 집 트	4	1,926	1,645	940	931	440	5,882
5	한 국	5	642	1,553	1,589	731	656	5,171
6	그 리 스	7	1,172	943	241	832	1,566	4,754
7	인 도	8	497	932	988	1,266	466	4,149
8	일 본	6	678	948	624	662	1,181	4,093
9	아랍에미리트	11	629	442	600	840	756	3,267
10	타 일 랜 드	12	758	628	555	1,128	63	3,132
11	쿠 웨 이 트	10	49	974	1,338	418	228	3,007
12	말 레 이 시 아	15	453	1,143	200	780	59	2,635
13	파 키 스 탄	14	683	242	552	614	525	2,616
14	중 국	9	112	427	1,115	834	104	2,592
15	미 국	13	711	459	431	696	223	2,520
16	이 스 라 엘	20	796	229	73	46	1,285	2,429
17	스 페 인	18	646	395	441	230	402	2,114
18	핀 란 드	19	196	162	581	439	647	2,025
19	싱 가 포 르	26	187	232	538	123	685	1,765
20	인 도 네 시 아	21	600	359	547	141	66	1,713
21	브 라 질	23	236	236	491	437	196	1,596
22	스 위 스	31	114	106	199	400	441	1,260
23	칠 레	25	151	537	223	194	103	1,208
24	이 란	16	348	243	537	24	24	1,176
25	이 탈 리 아	24	131	187	241	552	4	1,115
26	카 타 르	36	14	15	58	553	389	1,029
27	독 일	17	596	130	110	18	132	986
28	오 만	30	201	175	347	158	17	898
29	캐 나 다	27	432	177	164	86	33	892
30	페 루	29	142	97	182	469	-	890
31	영 국	44	38	93	216	88	362	797
32	베 트 남	37	-	277	246	96	168	787
33	호 주	28	302	71	149	24	189	735
34	멕 시 코	40	65	65	63	230	306	729
35	스 웨 덴	35	252	84	47	258	87	728
36	노 르 웨 이	34	57	102	200	186	170	715
37	네 덜 란 드	38	140	47	187	99	242	715

수입국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4-1998	
38	미얀마	32	-	223	93	243	131	690
39	카자흐스탄	39	-	162	219	166	-	547
40	알제리	41	161	332	5	29	-	527
41	아르헨티나	47	148	85	44	98	110	485
42	아르메니아	45	310	51	106	-	-	467
43	포르투갈	33	431	15	3	14	-	463
44	덴마크	49	66	129	53	74	141	463
45	오스트리아	54	56	37	14	169	177	453
46	프랑스	55	3	41	30	160	210	444
47	콜롬비아	50	39	87	39	160	119	444
48	뉴질랜드	46	16	4	18	349	17	404
49	모로코	43	129	40	89	143	-	401
50	사이프러스	48	61	29	177	110	18	395
51	바레인	51	14	26	225	74	9	348
52	요르단	64	-	24	43	104	164	335
53	헝가리	22	4	67	125	72	58	326
54	스리랑카	50	56	60	158	42	40	356
55	슬로바키아	41	35	252	35	-	-	322
56	폴란드	58	6	154	114	-	-	274
57	필리핀	56	109	32	30	54	47	272
58	방글라데시	57	89	126	4	24	-	243
59	예멘 남부반군	62	196	-	-	-	-	196
60	앙골라	63	96	1	10	3	84	194
61	크로아티아	60	57	86	2	37	-	182
62	튀니지	64	21	58	60	40	1	180
63	벨기에	59	64	28	2	34	34	162
64	불가리아	65	1	-	51	77	16	145
65	예멘	67	-	142	-	-	-	142
66	시리아	53	63	43	21	-	-	127
67	레바논	66	13	59	27	6	17	122
68	에리트레아	75	16	1	30	48	27	122
69	루마니아	73	43	1	35	12	20	111
70	캄보디아	72	64	-	34	6	4	108
71	남아프리카	68	19	38	51	20	-	128
	기타*		334	342	398	512	241	1,827
합계			20,073	20,861	21,984	27,416	21,944	112,278

* 1994년부터 1998년까지 1억달러 미만을 수입한 국가 및 비국가단체들 (출처 : SIPRI Yearbook, 1999)

우리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단위:억원)

연 도	국 방 비	첨단투자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비율(%)	
			전략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국방비 대비	첨단투자비 대비
1996	122,434	42,662	3,008	1,095	4,103	3.4	7.1
1997	137,865	48,833	3,432	1,211	4,643	3.4	7.1
1998	138,000	50,902	3,661	1,129	4,790	3.5	7.2
1999	137,490	52,304	5,960	1,051	7,011	5.1	11.4
2000	144,390	53,437	6,482	967	7,499	5.2	12.1

※ OECD 연구 개발비 산출기준에 의거 재산출
(2000년부터 기획예산처 연구개발예산 산출 정부공통기준 적용)

주요국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단위
국가별							
미 국	국 방 비(A)	274,624	271,739	257,975	253,423	252,379	US \$
	연구개발비(B)	36,597	35,772	36,404	36,469	35,324	(백만불)
	비 율(B/A)	13.30	13.16	14.11	14.39	14.00	(%)
영 국	국 방 비(A)	35,725	34,196	35,736	36,111	33,254	US \$
	연구개발비(B)	3,408	3,422	3,491	3,785	3,909	(백만불)
	비 율(B/A)	9.54	10.01	9.77	10.48	11.75	(%)
프 랑 스	국 방 비(A)	42,240	37,861	32,711	30,703	28,353	US \$
	연구개발비(B)	5,525	4,932	3,821	3,254	3,148	(백만불)
	비 율(B/A)	13.08	13.03	11.68	10.60	11.10	(%)
독 일	국 방 비(A)	34,625	32,745	26,641	26,002	23,790	US \$
	연구개발비(B)	1,981	1,850	1,487	1,410	1,262	(백만불)
	비 율(B/A)	5.72	5.65	5.58	5.42	5.30	(%)
일 본	국 방 비(A)	53.4	46.4	41.7	37.6	39.9	US \$
	연구개발비(B)	1.6	1.4	1.3	1.0	1.1	(10억불)
	비 율(B/A)	3.00	3.02	3.12	2.66	2.76	(%)
러 시 아	국 방 비(A)	48,577 (59,379)	80,185	104,300 (83,000)	81,765	-	러시아 roubles(bn) * ()속은 revised
	연구개발비(B)	4,936	6,475	11,574	10,800	-	
	비 율(B/A)	10.16	8.08	11.10	13.2	-	(%)
중 국	국 방 비(A)	7.47	8.6	9.7	11.0	-	US \$
	연구개발비(B)	-	-	-	-	-	(10억불)
	비 율(B/A)	-	-	-	-	-	(%)

※ 참고자료(러시아·중국 제외) :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 단위 : Constant 1997 US\$million (일본 : 1998 US\$bn)

민·군 겸용기술개발 과제 현황

구 분	과 제 명	비 고
1997년도 추진과제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출력 코일 레이저 · 비냉각 열상 시스템 · 보조 동력장치 	과학기술부 지원
1998년도 추진과제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통신용 광대역 적응형 배열 안테나 · 초고전/고용량 캐퍼시터 · 탄소(C)-탄소(C) 복합재 브레이크 디스크 · 무인잠수정 운항제어 및 매니플레이터 기술 	
1999년도 추진과제 (1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용량 유무선 ATM 교환기 개발 · 다중표적의 지능형 자동추적/인식기법 개발 · 반도체를 이용한 중성자 탐지소자 개발 · 평면위상배열 안테나용 변위기/복사소자 모듈 · 진행파관(TWT) 개발 · 광대역 고감도 DLVA 개발 · 고출력 증폭기용 고전압 전원공급기 개발 · 다중채널 고온 초전도 SQUID 센서 개발 · 플라즈마를 이용한 마그네타이트 피막처리 개발 · 반도체 브리지 개발 연구 · 전자제어식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 개발 · 고성능 유압 서브밸브 개발 	국방부 지원
2000년도 추진과제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VR을 이용한 상황변화 실시간 적용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Blind Source Noise Cancellation 기술 개발 · 타이타늄 내충격 합금 개발 연구 · 고전압/대전류용 스위치 연구 개발 	국방부 지원

국방과학기술의 민간이전 현황

■ 일반업체/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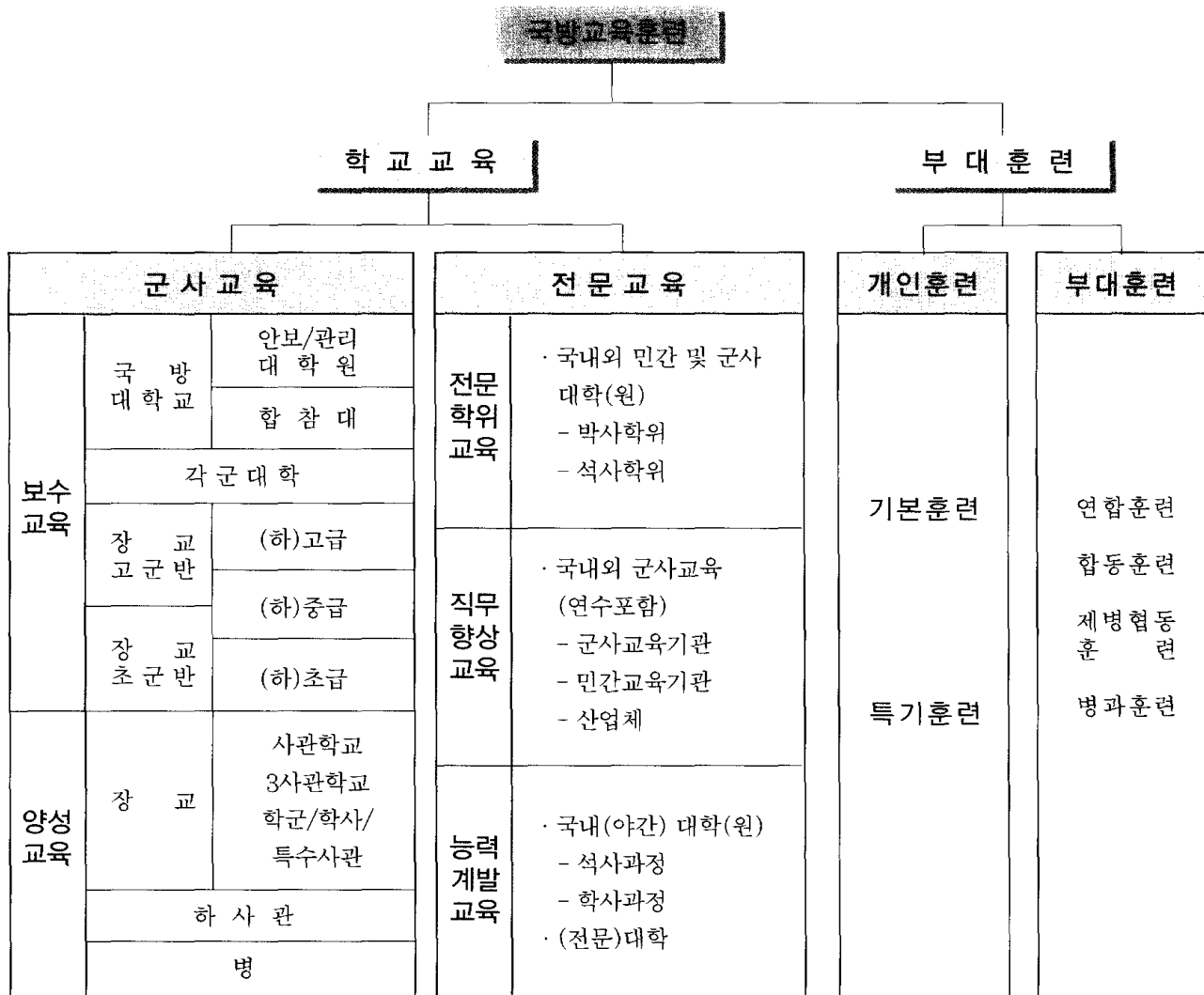
기술명	승인 (건수)	이전업체/기관	비고
전산지도 정보 및 도시용 S/W	46	LG소프트웨어, 해양수산부, 공군본부, 기무부, 국가정보원, 한국기계(연), 한국통신기술, 삼성전자, 환경부, 한동대, 지혜엔터프라이즈, 전자파특화연구센터, 육군, 기술정보21, 비상기획위원회, 항공우주(연), 범아엔지니어링, 플러스정보통신, (주)신화, 거림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 (주)LG정밀, (주)지오뱅크, (주)미디어데이터시스템, 한국자원(연), 모아기술, 대우중공업, (주)중앙제이디에스	이전완료 (28)
		한국토지공사, (주)삼성에스디에스, (주)데이콤	이전중(3)
적외선 탐지소자 제작기술	1	(주)태산정밀	이전완료
음향 차폐장치 설계기술	1	(주)유니슨산업	"
300톤급 반잠수 쌍동선형 해상 시험선 설계기술	2	한국기계(연)	" (2)
압전 세라믹 진동체 동특성 해석 및 설계기술	1	(주)대원전자	이전완료
6자유도 운동재현 및 유압구동 제어기술	3	(주)삼성항공, (주)현대정공, 한국기계(연)	이전완료(3)
한국연안 조석예보 S/W	1	한국기계(연)	이전완료
초경화 표면처리 기술	1	(주)한국광학개발	"
광섬유 격자를 이용한 광섬유소자, 광섬유 복굴절 변조기 등(4종)	1	(주)도남시스템	특허실시
무선ATM 접속기술	2	(주)가우리정보통신, 광주과기원	이전완료(2)
비행궤적 실시간 모니터링 S/W	1	광주과기원	이전완료
폐회로 디젤추진장치	1	한국중공업	이전완료
자세제어용 공압 구동장치 설계	1	항공우주연구소	이전완료
주파수 고속변경 저잡음 마이크로파 신호발생기	1	래디오닉스	이전중
소형 고성능 베인-펌프 설계기술	2	영화(주), 한화(주)	이전중(2)
마이크로파 벡터 수신기 설계기술	1	KMW(주)	이전중
고성능분자화약, HNIW의 개선된 합성기법	1	동원특수화학(주)	이전중
차기 전술통신체계 연동기술	1	LG 이노텍	이전중

■ 방산업체

기 술 명	업 체	비 고
고폭약(H-6)제조 및 KM-180 충전기술	(주)한화	이전완료
압축형 복합화약 기술(DXD52, 56)	"	"
주조형 복합화약 기술(DXD-3) 및 기뢰탄두 충전기술	"	"
추진제 원료합성 기술	"	"
주조형 복합화약(DXD-4) 기술	"	"
압축형 복합화약(DXD-53) 기술	"	"
압축형 복합화약(DXD-57) 및 Pentolite 기술	"	"
HNS 합성기술	"	"
주조형 복합화약(DXD-5, 6)기술	"	"
고폭화약 화약가공 기술	(주)풍산	"

부록 37

국방교육훈련체계



군 정보화 교육 및 추진현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국민 정보화교육과 연계된 장병 정보화교육
- 국방 정보화교육은 국민 정보화교육의 도장으로서의 역할
- 연간 20만명의 전역장병에 대한 국가 정보화 인력양성 배출
- 국방고위정보화책임관(CIO)제도 도입으로 정보화교육 강화

나. 필요성

- 장차 정보전에 대비한 군 인력의 정보화
-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장병 정보화교육
- 국민교육의 도장으로서 정보화인력 양성 배출
- 군 정보화 교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 CIO제도 도입, C4I, CALS 구축에 따른 전장병 정보화교육 강화

2. 정보화 교육 현황

가. 정보화 교육체계

구 분		전 산 전 문 요 원	일 반 이 용 자
육군	양성교육	전산실무장교 초급과정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육군대학(중령반, 대령반)
	보수교육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실무부대 자체교육 (사단급이상)
해군	양성교육	종합행정학교 전산학부	종합행정학교 전산학부
	보수교육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해군대학,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
공군	양성교육	통신전자학교 전산교육대	통신전자학교 전산교육대, 각 실무부대 전산실
	보수교육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공군대학,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
국직 기관	양성교육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 국방전산소
	보수교육	민간대학원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국방대학교, 국방전산소, KIDA, 민간기관

나. 정보화 교육실적

(단위: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1998년	계	14,423	8,739	2,861	1,821	1,002
	사용자	13,404	8,088	2,790	1,725	801
	관리자	1,019	651	71	96	201
1999년	계	93,298	49,849	10,151	23,049	10,249
	사용자	85,900	46,360	9,643	21,698	8,199
	관리자	7,398	3,489	508	1,351	2,050

다. 실무위탁교육

(단위: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1998년	549	120	69	64	296
1999년	725	261	83	122	259

※ 정보통신교육원,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보기술교육원, 산업기술교육센터 등

라. 사·여단급이상부대 정보화 교육장 구축

(단위:개소)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1998년	16	12	4	-
1999년	43	25	11	7

마. 중대급 부대 컴퓨터교육장(PC방) 설치

(단위:개소)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1999년	6,842	5,978	459	405

※ 중대급에 486급PC 3대 설치(20,526대) : 위문품, 임차만료 PC 등

3. 정보화 교육 추진계획

가. 연도별 교육목표 인력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계	20만명	27만명	27만명

나.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구 분	교육내용/수준	교육기관	
정보화 전문인력 · 정보체계분야 석·박사 · 정보체계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선진정보화 정책 및 신기술 습득 ·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구비 · 정보체계설계 및 개발 능력구비	· 국방대학교, 군사과학대학원 · 국내·외 민간대학/연구기관 · 한국국방연구원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정보체계 관리인력 · 정보, 통신병과 · 정보체계운용 지원요원	· 정보체계관리/운영능력구비 · 통합정보전 수행지원능력구비	· 양성/보수 교육 - 각군 정보통신학교 · 기회교육 - 민간대학/연구소	
정보체계 이용자	· 주요직위자 - 정책결정/ 관리자 - 대령급이상 간부	· 선진국/한국군정보화 정책 및 추진방향 · 통합정보전 / CIO 수행능력	· 각군대학/국방대학교 - CIO 교육과정 · 기회교육 - 학교기관/정보화교육장 - 순회교육
	· 일반간부 - 장교, 준사관, 하사관 - 군무원/일반직	· 정보체계(C4I, 자원관리 체계, OA등)운용 능력구비 · 정보전 수행능력구비	· 양성교육 - 장교/하사관 양성과정 · 보수교육 - 합참대, 각군대학, 병과학교 · 기회교육 - 정보화교육장
	· 일반병사	· 정보기기이용능력구비 · 전역전 정보검색사 2급 자격증 취득	· 정보화교육장 · 대대 인터넷 교육장 · 중대 PC방

다. 단계별 세부 추진전략

(1) 정보화 교육장 구축(사·여단급 부대)

(단위:개소)

단 별	연 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비 고
계		16	43	55	36	
육 군		-	18	28	-	국 방 예 산
		12	7	5	36	정통부지원
해 군		4	8	6	-	국 방 예 산
		-	3	5	-	정통부지원
공 군		-	4	2	-	국 방 예 산
		-	3	9	-	정통부지원

※ 육군 사단급이상 부대(48개소)는 2001~2002. 50석 규모 확대

(2) 국방 사이버교육 체계구축(2000~2002)

- ‘국방원격체계구축’ 연구(ADD 용역과제) : 1999~2001
 - ※ 국방 사이버교육체계 구축이론 연구 및 프로토타입(Prototype) 완료
 - ⇒ 전군 사이버교육체계 구축 여건 조성
- 연구결과에 의한 시범부대 선정, 체계구축 및 점진적 확장 추진
- 정보화교육장 원격교육체계 이용 국방원격교육 기반 구축(150개소)
 - ※ 국방 인트라넷을 통한 정보화교육 및 국방업무 전반에 걸친 원격교육 가능
- 사이버교육 훈련을 위한 통합교육환경 제공 및 지원
- 정부기관의 공무원 사이버교육 체계 및 관련 산·학·연의 사이버교육체계와 연계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4. 기대효과

가. 장병 정보화 교육장 확대 구축으로 장병 정보화교육 기회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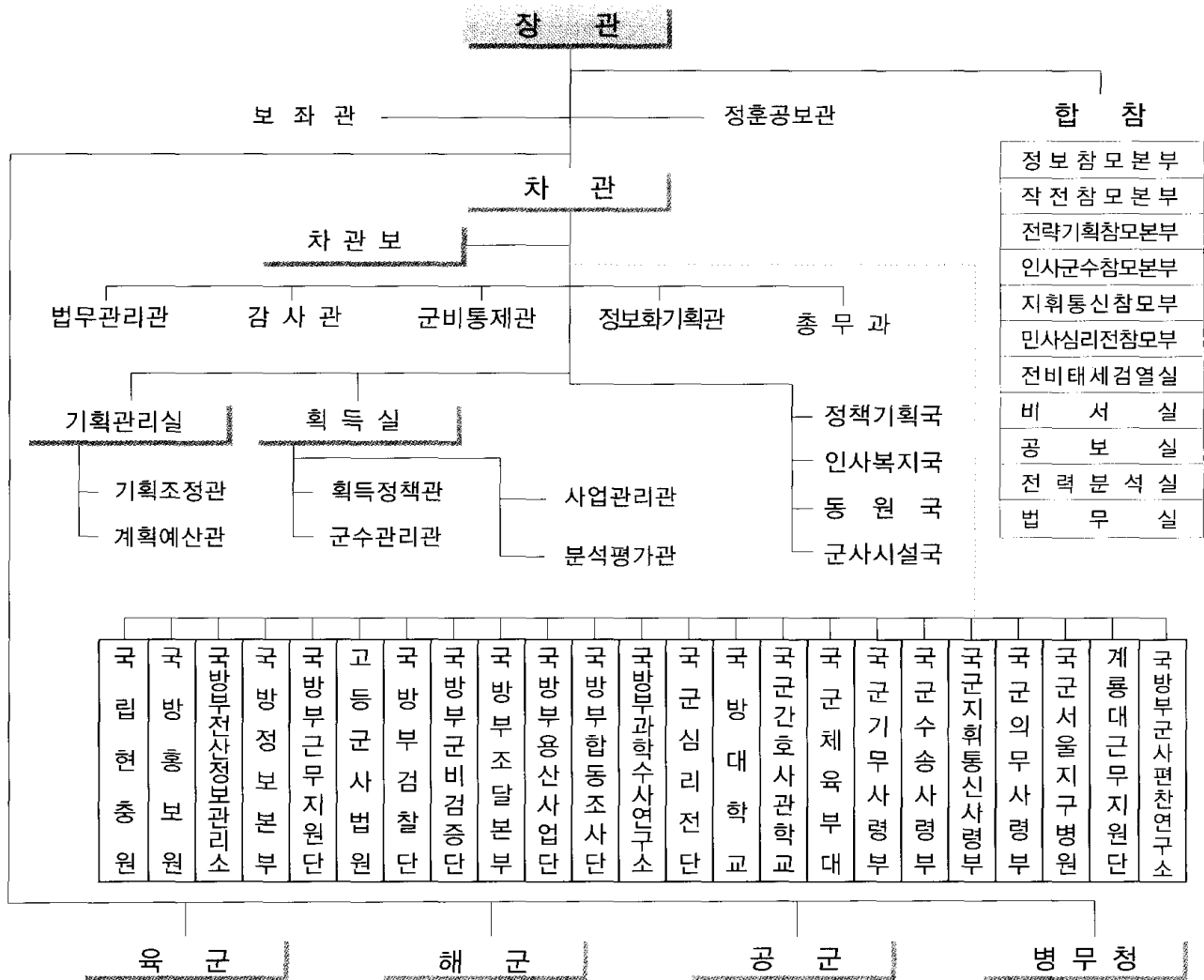
나. 첨단 정보화 교육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

다. 관리자/실무자/이용자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으로 첨단 정보전 능력 배양

※ 고위관리자(대대급이상) 정보화 선도그룹으로 육성 → 정보화정책 추진, 통합 정보화/CIO수행능력 구비

라. 정보화인력 양성 배출에 따른 국가지식 정보화사회 구현에 군이 선도적 역할 수행

국방기구조 및 국방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기타
합계	759,059	608,903	74,739	68,049	7,368
군인	691,600	560,500	67,850	63,250	-
군무원	28,583	13,980	4,834	4,799	4,970
일반직 공무원	2,398	-	-	-	2,398
상근예비역	36,478	34,423	2,055	-	-

6·25전쟁 참전국 현황

■ 전투부대 파견국 : 16개국

국 명	참전연인원 (명)	참 전 규 모		
		지 상 군	해 군	공 군
미 국	1,789,000	· 보병사단 8 · 해병사단 1 · 연대전투단 2 · 병력 302,483명	· 극동 해군 · 미 제7함대	· 극동 공군
영 국	56,000	· 보병여단 2 · 해병특공대 1 · 병력 14,198명	· 함정 17척 (항모 1척포함)	-
오스트레 일 리 아	8,407	· 보병대대 2 · 병력 2,282명	· 항공모함 1척 · 구축함 2척 · 프리깃함 1척	· 전투비행대대 1 · 수송기편대 1
네덜란드	5,322	· 보병대대 1 · 병력 819명	· 구축함 1척	-
캐 나 다	25,687	· 보병여단 1 · 병력 6,146명	· 구축함 3척	· 수송기대대 1
뉴질랜드	3,794	· 포병대대 1 · 병력 1,389명	· 프리깃함 1척	-
프 랑 스	3,421	· 보병대대 1 · 병력 1,119명 (1,185)	· 구축함 1척	-
필 리 핀	7,420	· 보병대대 1 · 병력 1,496명	-	-
터 어 키	14,936	· 보병여단 1 · 병력 5,455명	-	-
타 이	6,326	· 보병대대 1 · 병력 1,294명 (2,274)	· 프리깃함 7척 · 수송선 1척	· 수송기편대 1
그 리 스	4,992	· 보병대대 1 · 병력 1,263명	-	· 수송기편대 1
남아프리카 공 화 국	826	-	-	· 전투비행대대
벨 기 에	3,498	· 보병대대 1 · 병력 900명	-	-
룩셈부르크	83	· 보병소대 1 · 병력 44명 (48)	-	-
콜 롬 비 아	5,100	· 보병대대 1 · 병력 1,068명	· 프리깃함 1척	-
이디오피아	3,518	· 보병대대 1 · 병력 1,271명	-	-

■ 의료지원 및 시설 파견국 : 5개국

국 명	참전연인원 (명)	참 전 규 모	
		근무인원(명)	지원부대 및 시설
스웨덴	160	154(162)	적십자 병원
인도	627	70(333)	제60야전병원
덴마크	630	100	병원선
노르웨이	623	105(109)	이동 외과병원
이탈리아	128	72	제68적십자 병원

* 참전규모의 병력은 전쟁말기 최대수준을 유지한 병력(1953. 7.)

* ()내의 병력은 전쟁말기가 아닌 최대수준을 유지한 병력.

부록 41

6·25전쟁 인명피해 현황

(단위:명)

국 명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776,360	178,569	555,022	28,611	14,158
한 국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미 국	137,250	36,940	92,134	3,737	4,439
영 국	4,908	1,078	2,674	179	977
오스트레일리아	1,584	339	1,216	3	26
네덜란드	768	120	645	-	3
캐나다	1,557	312	1,212	1	32
뉴질랜드	103	23	79	1	-
프랑스	1,289	262	1,008	7	12
필리핀	398	112	229	16	41
터어키	3,216	741	2,068	163	244
타이	1,273	129	1,139	5	-
그리스	738	192	543	-	3
남아프리카공화국	43	34	-	-	9
벨기에	440	99	336	4	1
룩셈부르크	15	2	13	-	-
콜롬비아	639	163	448	-	28
이디오피아	657	121	536	-	-
노르웨이	3	3	-	-	-

* 한국군 포로 수치는 교환포로와 추가 송환포로를 포함한 수치임.

6·25전쟁 당시 남북 군사력 비교

구 분	부 대 / 병 력		주 요 장 비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지상군	· 보병 : 8개 사단 · 해병 : 1개 부대 · 기타 지원부대 등 9만 6,140명	· 보병 : 10개사단 · 전차 : 1개 여단 · 기타 기계화부대, 경비대, 특수부대 등 19만 1,680명	· 곡사포 : 91문 · 대전차포 : 140문 · 박격포 : 960문 · 장갑차 : 27대	· 곡사포 : 552문 · 대전차포 : 550문 · 박격포 : 1,728문 · 장갑차 : 54대 · 전 차 : 242대
해 군	7,715명	4,700명	· 경비함 : 28척 · 보조함 : 43척	· 경비함 : 30척 · 보조함 : 80척
공 군	1,897명	2,000명	· 연습/연락기 : 22대	· 전투기/전폭기/기타 : 211대
계	10만 5,752명	19만 8,380명		

6·25전쟁 당시 남북 경제지표 비교

구 분	남 한	북 한	비 고 (기준년도)
총 인 구(만명)	2,019	975	1949
국 민 총 생 산(억불)	7.1	3.9	1949
식 량 생 산 량(만톤)	345.5	124.4	1950
수 산 물 생 산 량(만톤)	21.6	27.3	1949
석 탄 생 산 량(만톤)	112.9	400.5	1949
발 전 시 설 용 량(만kw)	23.1	104.7	1950
철 도 총 연 장 (km)	4,423	3,815	1950
도 로 총 연 장 (km)	24,932	13,549	1949
무 역 총 액 (억불)	1.4	5.1	1949

※ 자료 :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1998. 8, 통계청)

군 환경시설 설치 중기계획

(단위:개소)

구 분	총 소 요	확 보 (2000까지)	중 기 계 획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4,427	851	540	1,119	1,160	416	341	3,576
오·폐수처리시설	1,308	632	279	222	175	0	0	676
합병정화조	621	74	261	151	135	0	0	547
소각시설	229	138	0	26	27	26	12	91
소음방지시설	13	7	0	2	1	2	1	6
토양오염방지시설	2,256	0	0	718	822	388	328	2,256
소요예산(억원)		2000:150	845	770	686	107	100	2,508

군 보유 토지 및 건물 용도별 현황

(1999. 12. 31. 기준)

■ 토 지

(단위:만평)

용도별 \ 군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계	41,382	29,097	3,311	5,381	3,593
건물 부지	7,880	6,342	299	476	763
훈련장 부지	20,580	15,807	783	2,197	1,793
탄약고 부지	3,729	3,156	210	279	84
비행장 부지	2,525	308	58	2,090	69
기타 부지	6,668	3,484	1,961	339	884

■ 건 물

(단위:만평)

용도별 \ 군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계	697	459	72	104	62
행정 시설	92	47	9	16	20
주 거 시설	301	209	33	36	23
공 장 시설	45	25	6	13	1
저 장 시설	114	83	7	21	3
기 타 시설	145	95	17	18	15

국회 국방위원회 소개

■ 위원회 기능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와 기타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

■ 1999/2000 상반기 위원회 활동(국방부 소관)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01회 임시국회 (1999.2.8~3.9)	1999. 2.24	· 방위력 개선사업 심사소위 구성 · 국방현안 보고 및 질의 답변
제203회 임시국회 (1999.4.9~5.3)	1999. 4.14	· 청원 심사소위 구성 의결 · 김훈 육군중위 사망사건 수사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1999. 4.23	· 방위력개선사업 심사소위 심사결과 보고 · 김훈 육군중위 사망사건 재조사결과 보고
	1999. 4.27	· 주요현안/병무비리 수사결과 보고 및 질의
	1999. 5. 3	· 공직자들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관한법률안 심의 의결
제204회 임시국회 (1999.5.31~6.25)	1999. 6.10	· 북한 경비정 북방한계선(NLL) 월선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1999. 6.17	· 북한 함정 서해 NLL 침범 대응작전 관련 보고 및 질의 답변 · 대북 경고 결의안 채택
제206회 임시국회 (1999.8.2~8.14)	1999. 8.10	· 국방대학교설치법안,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의결 · 청원 심사소위 심사결과 보고 · 현안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

구 분	국방위 회의	주 요 내 용
제207회 임시국회 (1999.8.17~9.9)	1999. 9. 7	· 주요 현안업무 보고 · 북한의 NLL 무효화선언 관련 북한군 동향 및 군사 대비태세 보고 및 질의 답변
제208회 임시국회 (1999.9.10~12.18)	1999. 9. 20	· 1999년도 국정감사 계획안 의결 · 199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 의결
	1999. 9. 21	·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19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동티모르 국군과병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
	1999.9.29~10.18	· 국정감사(국방부, 합참, 각군 등 20개기관)
	1999. 11. 5	·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관련 보고
	1999. 11. 17	·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및 질의답변 · DMZ 고엽제 살포 관련 현안 보고 및 질의답변
	1999. 11. 18	·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1999. 11. 23	·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의결 ·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진상조사단, DMZ 고엽제살포 진상조사단 구성 의결 ·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DMZ 고엽제 살포 관련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
	1999. 11. 24	·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진상조사 활동
	1999. 11. 29	· DMZ 고엽제 살포 현장조사 활동
	1999. 12. 1	·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 · 공군 전투기 추락사고 진상조사 및 DMZ 고엽제 살포 진상조사 활동 결과 보고
제211회 임시국회 (폐 회 중)	2000. 5. 17	· 백두사업 추진현황 등 주요 국방현안 보고 및 질의 답변 ※ 제15대 국회 마지막 국방위원회
제212회 임시국회 (2000.6.16~7.4)	2000. 6. 22	· 국방부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 제16대 국회 개시 국방위원회
	2000. 6. 28	· 병무청 업무현황 보고 및 질의 답변

■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위원장



천용택(2선, 전남강진원도)
前 국방부장관
前 국가정보원장

한나라당(간사)



박세환(2선, 전국구)
(예)육군대장
당 총재안보특보



강삼재(6선, 경남마산회원)
前 신한국당 사무총장
당 부총재



강창성(2선, 전국구)
前 보안사령관
당 상임고문



김기배(4선, 서울구로갑)
前 국회내무위원장
당 사무총장



김태호(4선, 울산중구)
前 내무부장관
前 당 사무총장



박승국(2선, 대구북구)
前 대구광역시의회부의장
당 총재특보



이연숙(초선, 전국구)
前 정무장관
당 부총재



이희창(2선, 전국구)
前 당 대통령 후보
당 총재



정재문(6선, 부산진갑)
前 국회통일외무위원장
당 당중앙위의장

새천년민주당(간사)



유삼남(초선, 전국구)
前 해군참모총장
당 연수원장



박상규(2선, 인천부평갑)
前 중소기업특별위원장
前 국민의회의 부총재



서영훈(초선, 전국구)
前 대한적십자 사무총장
당 대표최고의원



이인제(3선, 충남논산금산)
前 제15대 대통령후보
당 최고위원



장재달(3선, 전북전주완산)
前 국민의회의 안보위원장
당 정책위 부위원장



정대철(5선, 서울중구)
前 국민의회의 부총재
당 최고위원



한화갑(3선, 전남무안신안)
前 국민의회의 원내총무
당 최고의원

자유민주연합



강창희(5선, 대전중구)
前 과학기술부장관
당 부총재

국방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

■ 조직분야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개정요지
국군조직법	제정 9호(1948.11.30)	○ 국방기관의 설치조직을 정함
	부분개정 2642호(1973.10.10)	○ 해병대를 해군에 편입시키고 군기(軍旗)를 사용하도록 함 ○ 각군 예속하의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관한 국방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부분개정 2829호(1975.12.31)	○ 합동참모본부 설치와 합동참모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방대학교설치법	제정 937호(1961.12.31)	○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간부의 자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직기관으로 국방대학원을 설치함
	부분개정 3202호(1979.12.28)	○ 교육과정을 안보과정, 석사과정, 단기특별과정으로 구분함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를 설치함
	폐지 및 제정 6017호(1999.9.7)	○ 국방참모대학과 통합한 국방대학교 설치에 따라 국방대학교 설치법으로 제정함
단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2703호(1974.12.21)	○ 육·해·공군의 단기복무장교 양성을 위해 단기사관학교 설치근거를 정함
	부분개정 3112호(1978.12.5)	○ 단기사관학교 졸업자에게 대학 편입학 자격을 부여함
	부분개정 3596호(1982.12.31)	○ 학사과정을 신설함
	부분개정 4838호(1994.12.31)	○ 입학자격을 전문대졸업자 또는 대학2년 이상 수료한 자로 변경함
국군간호사관 학교설치법	제정 2828호(1975.12.31)	○ 군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국직기관으로 국군간호학교(3년제) 설치근거를 마련함
	부분개정 3247호(1980.1.4)	○ 국군간호학교를 국군간호사관학교로 변경함 ○ 졸업후 소위로 임용된 자에게 간호계 전문 대학 졸업자격을 부여함
	부분개정 3267호(1998.12.4)	○ 전문대학과정을 4년제 대학과정으로 변경함
사관학교설치법	제정 374호(1955.10.1)	○ 육·해·공군의 정규장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4년제 사관학교를 설치함
	부분개정 2670호(1973.12.31)	○ 일반학 과정에 문학사와 공학사의 교육과정을 추가함
	부분개정 5058호(1995.12.29)	○ 여자생도를 모집할 수 있도록 입학자격을 변경함

■ 인사분야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개정요지
군인사법	제정 1006호(1962.1.20)	○ 군인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반기준을 규정함
	부분개정 3265호(1980.12.4)	○ 군인사법의 적용을 보충역 소집자까지 확대함 ○ 장기복무하사관과 단기복무하사관으로 구분함
	부분개정 4085호(1989.3.22)	○ 하사관 계급구조변경 ○ 공군의 기본병과에 방공포과를 신설함 ○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하여 명예전역 제도를 도입함
	부분개정 4839호(1994.12.31)	○ 고충처리제도 신설 ○ 직업보도교육 신설
	부분개정 5703호(1999.1.29)	○ 해병대의 장교진급선발위원회를 해병대 사령부에 설치
군법무관임용법	제정 243호(1952.4.24)	○ 군법무관 임용근거를 마련함
	부분개정 1904호(1967.3.3)	○ 군법무관 대우는 법관과 검사에 준하도록 함
군사법원법	제정 1004호(1962.1.20)	○ 신규제정
	부분개정 2539호(1973.2.17)	○ 군검찰부와 검찰간의 사건이송 규정 신설 ○ 즉시항고제도 신설, 구속사유를 조정함 ○ 현행법에 대하여는 구속후 영장발부제도 신설
	부분개정 3993호(1987.12.24)	○ 군사법원으로 제명 개정
	부분개정 4704호(1994.1.5)	○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두던 고등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에 설치 ○ 군검찰부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하고 검찰수사관제도를 신설함 ○ 구속영장의 발부권자를 관할관에서 군판사로 변경하고 검찰관이 구속영장 청구시 부대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함 ○ 약식절차제도를 신설
	부분개정 6037호(1999.12.28)	○ 긴급체포제도 도입 ○ 입건통보제도 신설 ○ 즉결심판제도 도입
군무원인사법	제정 1337호(1963.5.1)	○ 군속에 대한 정의와 대우·임용권의 한계와 자격 등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함
	전문개정 3342호(1980.12.31)	○ 군속을 군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 ○ 일반군무원과 특수군무원으로 구분함
	전문개정 4159호(1989.12.30)	○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 구분하고 신규채용자에 대한 시험임용제도를 도입함 ○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함
	부분개정 5061호(1995.12.29)	○ 1급 군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 ○ 장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반드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국군포로대우등에 관한법률	제정 5705호(1999.1.29)	○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의 파악과 송환대책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군포로의 귀환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군수분야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개정요지
군수품관리법	제정 1310호(1963.3.23)	○ 물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부분개정 4248호(1990.8.1)	○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과 각군참모총장은 외국군과의 합동훈련 및 작전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군수품을 미리 대여하고 사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540호(1973.2.17)	○ 군수산업의 진흥발전과 군수물자의 조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부분개정 3003호(1977.7.23)	○ 군수산업육성기금을 설치함
	부분개정 3699호(1983.12.31)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제명 변경
	부분개정 5614호(1998.12.31)	○ 기술력이 있는 우수업체의 방위산업참여 확대 ○ 수출지원제도 신설

■ 시설/통신분야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개정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2388호(1972.12.26)	○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활동의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부분개정 3497호(1981.12.31)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 보호구역으로 구분함 ○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부분개정 5270호(1997.1.31)	○ 휴전선인근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인 출입통제선의 설정범위를 축소 조정함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군용전기통신법	제정 901호(1961.12.30)	○ 군사행정 및 작전수행에 기여토록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함
	부분개정 4346호(1991.3.8)	○ 장애물 등의 제거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의 근거 신설

■ **계엄/징발분야**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개정요지
계엄법	제정 69호(1949.11.24)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국가안보상 일정범위 내에서 군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전문개정 3442호(1981.4.17)	○ 경비계엄의 경우에도 국회에 통고토록 함 ○ 비상계엄지역안에서 국민의 재산을 파괴한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징발법	제정 1336호(1963.5.1)	○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작전상 긴요한 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부분개정 2263호(1970.12.31)	○ 징발보상금의 지급청구 소송절차를 정함
	부분개정 3527호(1981.12.31)	○ 평시에도 진지 및 방책 등 군작전에 필요한 부동산을 징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

■ **병무분야**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개정요지
병역법	제정 41호(1949.8.6)	○ 병역의무의 개병주의 채택
	전문개정 444호(1957.8.15)	○ 현역, 예비역, 국민병역의 3종으로 구분함 ○ 국민학교 정교사 단기현역제도 신설
	전문개정 1163호(1962.10.1)	○ 역종을 현역·예비역·보충역·국민역으로 구분 ○ 병무행정을 분장하기 위해 병무청 실시
	부분개정 2226호(1970.8.7)	○ 병무행정을 병무청장이 주관하도록 함
	전문개정 2259호(1970.12.31)	○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에 대하여 군사교육을 실시함 ○ 병무행정의 일부를 구청장, 시장, 군수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부분개정 3111호(1978.12.5)	○ 현역병으로 징집할 자로서 판사·검사·의사·목사·신부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전문개정 3696호(1983.12.31)	○ 병역의무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통합함 ○ 학생군사교육중 사망 또는 부상한 자에 대하여 군사원호보상과 군의료시설의 가료가 가능토록 함 ○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제도의 적용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함
	전문개정 4685호(1993.12.31)	○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고,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제도 신설 ○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통합

법 명	공포호수(일자)	개 정 요 지
요 요 법	부분개정 4840호(199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무관제도 신설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8일이상 이탈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부분개정 5271호(1997.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를 징집으로만 선발토록 함 ○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의 기술자격요건 폐지
	부분개정 5757호(199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에 위임된 병무행정사무를 지방 병무청으로 환원 ○ 징병검사 전담의사제도 도입 ○ 국외이주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등의 면제연령을 조정함(31세→36세)

군 사법제도 개선

□ 개 요

- 군 사법조직 및 운영체계 전반에 걸친 일대 혁신
- 군 사법제도의 효율성·공정성·신뢰성 제고

□ 개선방향

- 군 지휘권 강화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재판의 공정성 제고 → 법무조직 개편(군사법원과 군검찰 분리)
- 법무조직 경쟁력 강화 → 군법무관 획득 및 인사관리제도 개선
- 장병 권익 향상 → 국선변호인제도 보완, 즉결심판제도 도입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설치

- 육군 34개, 해군 7개, 공군 9개 등 총 50개 사단급 부대 보통군사법원 설치보류 해제
- 전시 군사법원의 원활한 운영에 대비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피고인 기본권 보장

□ 법무조직 개편

-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의 분리/독립
 - 국방부법무운영단 폐지 → 고등군사법원/국방부검찰단 신설
 - 각군 본부 군사법원 독립/설치
- 고등군사법원장 장군 직위화
- 국방부검찰단에 특수부 편성으로 대형/중대사건 처리능력 확보
- 고등군사법원 고등제2부 각군본부지역에서 운용
- 재판연구관부 편성으로 법률검토 및 연구기능 부여

□ 군법무관 획득/보직관리

- 군법무관임용시험 개선(매년 선발) 추진
- 예비역 군법무관 군판사 임용근거 마련 추진
- 군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중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전역시 변호사 자격유지 추진
- 군법무관 해외위탁교육 확대
- 법무장교 획득대상 다원화(외국변호사 자격취득자 등)
- 군법무관 대우에 관한 법령의 명문화 추진

□ 국선변호부 신설

- 고등군사법원과 각군본부에 국선변호부 신설
- 군사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풀(Pool)제 운영

□ 종합평가

- 사단급 지휘관에게 군사재판 관할권 부여
- 국선변호부 설치로 피고인 인권보호 강화
- 군사법원과 군검찰 분리로 전문성 제고 및 군내외 신뢰 증진
- 군 사법요원의 내실화와 사기 증진

대민관련 주요 행정규제 정비 목록

구 분	내 용	시 행 일
예비군 대원 신고 관련 규제 (2건)	1. 예비군 대원 신고 폐지 2. 예비군거주지 이동 및 병적사항 변동신고 폐지	1999. 7. 1
군납업체 등록 관련 규제(3건)	3. 군납업체 등록 및 유효기간 폐지 4. 군납업체 실태조사 폐지 5. 군납업체 안전진단 품목 대폭축소(1,235⇒361품목)	1998. 7. 16
비영리법인 감독 관련 규제 (6건)	6. 비영리법인 재산이전 보고 폐지 7. 비영리법인 재산증가 보고 폐지 8.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보고 폐지 9. 비영리법인 임원 취임인가 폐지 10. 비영리법인 재산 이전처분 및 기채보고 폐지 11. 비영리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기채허가 폐지	1999. 1. 11
군인연금 관련 규제 (10건)	12. 군인연금증서 재교부 신청시 첨부서류 폐지 13. 급여 수급권자 대리인 선임 의무 폐지 14. 연금 수급권자 주소(개명 및 기타)변경 신고의무 폐지 15. 연금지급기관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폐지 16. 퇴역연금 수급권자 재퇴직 신고 폐지 17. 유족 대표자 선정(변경, 해제)신고의무 폐지 18. 유족연금 수급권자 태아출생 신고의무 폐지 19. 퇴역연금 수급권자 재취업(재취임)신고시 첨부서류 개선 20. 연금 수급권자 국외 거주자 신상 신고 개선 21.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개선	1998. 12. 18

국민의 정부 국방분야 국정과제 현황

과제수: 총 64개

과 제 명	조 치 시 한 (완 료 시 기)	주 관 부 서
<p>〈군 구조를 기술·정보 집약형으로〉</p>		
<p>□ 방위력개선사업의 투명화·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력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재정립 · 사업별 사전 및 사후평가제도 개선 · 무기가격 정보의 획득과 활용체계 개선 · 획득개발 조직 및 절차 개선 · 국제계약시 민간전문인력 활용제도 마련 ·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지원 확대 	<p>완료('99상반기)</p> <p>완료('99상반기)</p> <p>완료('99상반기)</p> <p>완료('99상반기)</p> <p>완료('98하반기)</p> <p>완료('98하반기)</p>	<p>획득정책관실</p> <p>분석평가관실</p> <p>분석평가관실</p> <p>획득정책관실</p> <p>사업관리관실</p> <p>사업관리관실</p>
<p>□ 군수품 조달의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자구매와 시설발주의 투명성·경쟁성 강화 · 조달전문기관 의뢰방안 검토 · 군납희망업체 경쟁참여 보장 · 민간자원활용 극대화 	<p>'00하반기</p> <p>완료('98하반기)</p> <p>완료('98하반기)</p> <p>완료('99상반기)</p>	<p>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국</p> <p>군수관리관실</p> <p>군수관리관실</p> <p>군수관리관실</p>
<p>□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업체 전문·계열화 제도 정비 · 방위산업 육성 및 국제방산협력 다변화 	<p>완료('99상반기)</p> <p>완료('98하반기)</p>	<p>획득정책관실</p> <p>획득정책관실</p>
<p>□ 효율적·경제적 군 운용을 위한 군 구조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조직 및 기능 재검토 · 지휘계층 단순화·경량화 · 유사·공통기능·부대 통·폐합 · 연구기관·산하기관 정비 	<p>완료('98하반기)</p> <p>완료('00상반기)</p> <p>'02</p> <p>완료('98하반기)</p>	<p>기획조정관실</p> <p>국방개혁위원회</p> <p>기획조정관실</p> <p>기획조정관실</p>
<p>□ 미래전 대비 국방정보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정보화 추진목표·방향 정립 · 지휘통제체계(C4I) 구축 · 자동화정보체계 구축 · 정보보호체계 발전 · 한국적 군사혁신(RMA) 추진 · 군 장병에 대한 정보화 교육 강화 	<p>완료('99상반기)</p> <p>계 속</p> <p>계 속</p> <p>계 속</p> <p>'02</p> <p>계 속</p>	<p>정보화기획관실</p> <p>정보화기획관실</p> <p>정보화기획관실</p> <p>정보화기획관실</p> <p>국방개혁위원회</p> <p>정보화기획관실</p>
<p>□ 강한 교육훈련으로 강군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연습 강화 · 신세대 장병 지휘리더십 개발 · 신 병영문화 창달 · 하사관 능력개발과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 추진 · 군 학교교육 개혁 	<p>완료('99상반기)</p> <p>완료('99하반기)</p> <p>계 속</p> <p>계 속</p> <p>'00 하반기</p>	<p>합참 전력분석실</p> <p>인사복지국</p> <p>국방개혁위원회</p> <p>국방개혁위원회</p> <p>인사복지국</p>

과 제 명	조 치 시 한 (완료시기)	주 관 부 서
<p>□ 예비전력 정예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군 운영제도 개선 · 향토방위 작전태세 보완 ·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제도 개선 	<p>완료('98하반기) 완료('99상반기) 완료('98상반기)</p>	<p>동원국 동원국 동원국</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정한 인사로 군의 사기를 드높게></p> <p>□ 능력위주의 인사관리제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보직 자격기준 설정/보직 · 세대별 사전보직예고제 정착 · 진급제도 개선 <p>□ 군 인력의 전문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직위 설정 · 전문인력 인사관리 개선 · 국방부/합참/연합사 우수인력 보직체계 정립 <p>□ 직업군인/장병 복무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군인 복무여건 개선 · 급식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취사여건 개선 <p>□ 전역군인 생활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보도활동 강화 · 취업직위 확대 및 예우 향상 	<p>'00 상반기 완료('98하반기) 완료('99상반기)</p> <p>완료('98상반기) 완료('98상반기) 완료('98하반기)</p> <p>계속 계속</p> <p>계속 계속</p>	<p>인사복지국 인사복지국 인사복지국</p> <p>인사복지국 인사복지국 인사복지국</p> <p>인사복지국 군수관리관실</p> <p>인사복지국 인사복지국</p>
<p style="text-align: center;"><한·미, 다자간 안보체제는 국방의 필수></p> <p>□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공고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대비계획 발전 · 방위비분담금 문제 해결 · 주한미군시설, 기지이전 협의 <p>□ 주변국과의 군사외교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의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 중국과의 북한도발억제 및 개방 유도 · 러시아와의 국방과학기술 정보·해양자원 보호 등 관련 군사교류 추진 <p>□ 다자안보협력활동 적극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안보 협력회의 참여 · 다자안보 정책 개발 	<p>완료('99상반기) 완료('99상반기) '01~'02</p> <p>계속 계속 계속</p> <p>계속 계속</p>	<p>합참 작전본부 정책기획국 군사시설국</p> <p>정책기획국 정책기획국 정책기획국</p> <p>군비통제관실 군비통제관실</p>

과 제 명	조 치 시 한 (완료 시기)	주 관 부 서
<p style="text-align: center;"><군 시설물 위치를 국민에게 편리하게></p> <p>□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및 행정관청 허가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기지)보호 관계법령 개정 ·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p>□ 군용시설 이전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 군 사용 사유지 정리 촉진 · 군 고압선로 한전이관 추진 <p>□ 국민편익지원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재난 통합지원체제 상시 유지 · 군 환경보전활동 확대 · 국민과 함께하는 군 홍보활동 · 6·25전쟁 50주년기념사업 추진 	<p>완료('98하반기) 계 속</p> <p>계 속 계 속 '02</p> <p>완료('98하반기) 계 속 계 속 '02</p>	<p>합참 작전본부 합참 작전본부</p> <p>군사시설국 군사시설국 군사시설국</p> <p>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국 정훈공보관실 6·25기념사업단</p>
<p style="text-align: center;"><병역의무는 누구나 공정하게></p> <p>□ 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병역제도 개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고위공직자 병역실명제 도입 · 병역특례범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 병역면제범위 축소 ·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제도 개선 · 의병제대요건 강화 · 신체검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p>완료('99상반기) 완료('99상반기) 완료('99상반기) 완료('99상반기) 완료('99상반기) '02</p>	<p>인사복지국/병무청 인사복지국/병무청 인사복지국/병무청 인사복지국/병무청 인사복지국 병 무 청</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연구개발사업, 더 많은 성과가 있도록></p> <p>□ 응용기술의 개발 촉진, 연구성과의 실용화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 겸용기술사업의 체계적 추진 	<p>계 속</p>	<p>사업관리관실</p>

주요 국방연표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45	10.21 11.11 11.13 12. 5	경찰 창설 해방병단 결단식 미 군정청에 국방사령부 설치 군사영어학교 개설
1946	1.15 1.17 1.21 2. 7 3.29 5. 1 6.15	남조선국방경비대 창설(태능), 도단위 1개연대 창설 시작(9개 연대) 해군병학교(해사교) 창설 학병동맹사건으로 시설군사단체 해산령 남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설치(태능)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창설(태능) 국방부를 국내경비부(통위부), 남조선국방경비대를 조선경비대로, 해병병단을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
1947	8.30	해안경비대, 미 해군으로부터 해안경비임무 인수
1948	5. 5 8.16 8.24 8.26 9. 1 9. 5 9.13 10.19 11.30 12.15	통위부(현. 국방부) 직할부대로 항공부대 창설(수색) 초대 국방부장관(이범석) 취임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 체결 주한 미 임시군사고문단(PMAG) 설치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 국군에 편입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육군 및 해군으로 개칭 공군, 최초로 L-4항공기 도입 여순지구 제14연대 반란사건 발생 국군조직법 공포 육군 및 해군 총사령부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로 개칭
1949	1.20 2.15 3.21 4.15 5.12 6.30 7. 1 8. 6 10. 1 10.17 12. 6	호국병역에 대한 임시조치령 공포 여자항공교육대 창설 제2대 국방부장관(신성모) 취임 해병대 창설 육군 6개 사단으로 편성 주한미군 철수 완료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발족 병역법 공포 공군 창설 / 공군본부 직제령 공포 해상포를 갖춘 구잠함(백두산호) 미국에서 최초 구매 징병검사 최초 실시
1950	1.26 2.28 3. 2 4.14 4.28 6.25 7. 2 7. 9 7.11 7.16 9. 1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한·미군사고문단설치협정 체결 군인복무령 공포 해군기지법 / 방어해면법 공포 군사원호법 공포 군속령 공포 북한군, 38도선 전역에서 불법남침(6·25전쟁 발발) 공군 최초로 F-51전투기 미군으로부터 인수 주한 미8군사령부 대구에 설치 한국해군, 美 극동해군에 편입 한국 육·해·공군 작전지휘권, 유엔군 총사령관에 위임 여군 창설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50	9.15 9.28 10. 1 10.19 10.25 12. 1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전개 정부, 서울 환도 국군, 38도선 돌파 국군, 평양 탈환 중공군 한국전 개입(운산에서 최초로 중공군과 교전) 유엔군사령부, 유엔군의 전면 후퇴 결정
1951	4. 1 5. 7 7.10 8.17 10.26 10.30	해병학교 창설 제3대 국방부장관(이기붕) 취임 휴전회담 본회의 개시 駐美 한국 무관부 설치 제2국민병 보충소집 실시 육군사관학교 4년제로 재 개교
1952	3.29 5. 7	제4대 국방부장관(신태영) 취임 거제도 포로수용소 폭동(도드 소장 피랍)
1953	4. 6 6. 3 6.30 7.27 8. 5 10. 1 10.12 10.26 12.15	휴전회담, 포로(부상병) 교환협정 조인 전시근로동원법 공포 제5대 국방부장관(손원일) 취임 정전협정 조인 한·미 서울회담 개최 /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평화선 수비를 위한 해안경비대 발족 판문점에서 정치회담 예비회담 개최 제1군사령부 창설
1954	1.14 1.18 3.21 5. 1 7. 9 8.12 9. 2 9.27 10. 3 10.20 10.31 11.18 11.20 11.23	제2국민병 소집 실시 해양경비대, 독도에 영토 표지 설치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제1,2,3군단 작전 지휘권 인수 독도에 민간수비대원 20명 파견 해사생도 첫 순항훈련 실시 한·미 군사회담, 국군 증강 및 예비군의 구식장비 대체에 합의 정부, 독도 무장화 결정 한·미 군사회담 개최(한국군 증강 등 협의) 정부, 수복지구 행정권을 유엔군으로부터 인수 한국군 제6군단 작전지휘권 인수 제2군사령부 창설 한·미합의의사록 조인(한국군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 계속 위임) 미 제8군사령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 한·미 군사회담, 한국군증강문제 합의
1955	1.14 1.28 6.21 10. 5	한·미 군사회, 해군력 3배 증강을 협의 한·미 군사원조회담 개최 한·미 군사·경제회담 개최(워싱턴) 4년제 육군사관학교 첫 졸업(11기)
1956	2.20 4.13 5.26 9.21 10.26 12. 3	육군·해군본부 직제령 공포 군묘지령 공포 제6대 국방부장관(김용우) 취임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제정 공포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협약에 서명 한·미 합동군사회담 개최(동경)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57	3.24 5.22 7. 1 7. 6	한·미 군사회담 개최(워싱턴) 군사정전위 유엔측 대표, 한국군 장비현대화 통보(정전협정 13조 D항 폐기) 유엔군 사령부, 일본 도쿄에서 한국으로 이동 제7대 국방부장관(김정렬) 취임
1958	1.17 2.16 2.19 4.13 7.16	한국 공군, 중앙항로교통통제소(ARTCC)를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 대한항공 여객기(DC-13) 납북사건 발생 미 국무부, 주한미군 불철수를 발표 공군 최초로 RF-86F정찰기 도입 공군 최초로 H-19B/D헬기 도입
1959	5. 5 5.22 7.15 7.27	한·미 연합상륙작전(명칭 : 거북훈련) 실시 국방부, 조병창 운영권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 미군으로부터 대공관제 경보기구 인수(오산 미공군 기지) 한국 최초로 로켓 시험발사 성공
1960	5. 2 8.23 9.12 12.29	제8대 국방부장관(이종찬) 취임 제9대 국방부장관(현석호) 취임 제10대 국방부장관(권중돈) 취임 국군정원 60만명으로 결정(한·미 합의에 의거)
1961	1.30 5.16 5.20 5.26 6.12 7.10 8.19 10.13 12.27	제11대 국방부장관(현석호) 취임 5·16 군사정변 제12대 국방부장관(장도영) 취임 5·16 동원부대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복귀 제13대 국방부장관(송요찬) 취임 제14대 국방부장관(박병권) 취임 한·미 군사고위회담 개최(진해) 한·미 연합지휘관회의 개최(서울 미8군사령부) 향토예비군설치법 공포
1962	1.20 3.17 4.13 4.27 5. 1 7.30	군형법/군행형법/군법회의법/군인사법 공포 한·미 고위군사회담(워싱턴) 한·미 고위군사회담(군원계획 등 합의) 군인복제령 공포(3군 사병계급장 통일) 한·미 고위군사회담(추가 국방비 재원문제에 합의) 학도군사훈련 입소식 최초 거행
1963	1.28 3.16 5. 1 5.17 6. 1 12.14	군인연금법/군인연금특별회계법 공포 제15대 국방부장관(김성은) 취임 징발법/군속인사법/군인보수법 공포 한국군 최초로 구축함 1척 도입 합동참모본부 설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정
1964	1. 4 7.15 8. 7 12.19	한·미 고위 경제·국방관계회담 개최 월남정부, 한국에 공식 군사지원 요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발족 존슨 미 대통령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요청 친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
1965	1.26 2.24 3.10 6. 1 6.22 6.28	한국 국회, 베트남 파병안 통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민방위개선위원회 설치 비둘기부대 월남 파병 한국군 최초로 나이키 유도탄부대 창설 한·일 기본관계조약 조인 한·미 고위군사회담(월남파병문제 검토)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65	9. 6 10. 3 10.16	주월 한·미 군사실무협정 체결 청룡부대 월남 파병 맹호부대 월남 파병
1966	3. 4 3.15 6.22 7. 9 8.30 11. 7	한·미 정부, 파월 증파 조건 합의록인 브라운각서 서명 군인복무규율 제정·공포 한·미 국방장관회의, 한국군 현대화계획 협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체결 백마부대 월남 파병 駐日 한국 무관부 설치
1967	1.19 9. 5 11. 3 12.28	해군 56함(당포함)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북한 해안포에 피격침몰(39명 전사) 한·미 고위군사회담 개최(군원문제 토의) 한·미 외상회담, 한국군 현대화촉진 등 협의 국방백서 최초 발간
1968	1.21 1.23 2.28 4. 1 4.18 5.28 7. 9 8. 5 10.13 10.15 10.30 12. 4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 발생 푸에블로호 피납 사건 발생 제16대 국방부장관(최영희) 취임 향토예비군 창설 박대통령, 존슨 미 대통령과 호노롤루에서 회담(군원 및 월남문제) 제1차 한·미 국방부장관 회의 개최(워싱턴) 유엔사 교전수칙 변경, 북한군 DMZ 침범시 한국군 자체 대처권한(대침투작전권) 인수 제17대 국방부장관(임충식) 취임 제1차 포커스렌즈 훈련 실시 한·미 작전기획참모단 조직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한·미 외상회담, 對韓 군원증강문제 협의(워싱턴)
1969	3.16 4.11 4.15 6. 4 6.16 7.22 10.20 12.11	포커스레티나 한·미연합공수훈련 실시 한·영 연합작전(명칭 : 폼리포트) 서해안에서 실시 미 해군 E-121 정찰기 동해상에서 북한에 피격(31명 사망) 제2차 한·미 국방각료회의 개최 전국 16개 교육대학에 학군단(ROTC)을 설치 한·미 국방장관 회의(감군문제 토의) 주월 한국군과 월남 합참간의 군사실무약정 체결 대한항공 여객기(YS-11) 납북사건 발생
1970	3.10 5.26 7.11 7.22 8. 6 8.20 9. 1 10.14	제18대 국방부장관(정래혁) 취임 미 정부, 대한 무상군원 최종분 공여(무상군원 25년만에 종료) 한·미 고위군사회담 개최(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장비현대화)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의 개최(호노롤루) 국방과학연구소(ADD) 창설 국방부 병무국을 폐지하고 병무청을 창설 국방부 청사 이전(후암동→용산 삼각지) 한·미 군사회담, 한국군 장비현대화 보장과 감군에 상호 합의
1971	2. 6 3. 4 3.27 4. 1 4.22 7. 1 7.13 8.25	한·미 국방장관회담(제4차) 서울에서 개최 프리덤볼트 한·미 연합공수기동훈련 실시 미7사단 철수 주한 미 군사고문단, 주한 미 합동군사지원단으로 통합 발족 한·미 M16 소총 공장 설립 협의 한·미 제1군단 창설(미 육군 제1군단 해체) 제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명칭 개칭) 개최(서울) 제19대 국방부장관(유재홍) 취임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71	9.21 12.27	판문점에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가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72	2.11 5.18 6.27 7. 4 8.11 8.30 9.15 10.12 12.26 12.29	유재홍 국방부장관, 티우 월남 대통령과 회담 한·미 고위군사실무자회의 개최 제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美.공군사관학교) 정부, 조국평화 자주통일원칙 등 남북공동성명서 발표 주월 한국군 철수를 위한 한·미 군사실무자회담 개최 남북적십자 제1차 본회담 개최(평양) 한·독 국방부간 행정협정 체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 회담 개최(판문점) 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공포 최초로 국방목표 제정
1973	1.13 2.17 3.23 7. 1 8.28 9.13 10.10 12. 3	1973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1974 국가안전기본정책)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주월 한국군 철수 완료 제3군사령부 창설 무궁화회의 최초 실시(한국전략계획 검토·토의) 제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해병대, 해군에 통합 제20대 국방부장관(서종철) 취임
1974	1.18 1.21 8.15 9.24 11.15 11.22	박대통령,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한·미 군수협조단 설치 북한 남파 간첩 문세광에 의한 박대통령 저격사건 발생(영부인 피격 서거) 제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호놀룰루) 제1땅굴 발견 한·미 정상회담(美, 對韓 방위공약 재확인)
1975	3.17 3.19 4.23 5. 5 6.30 8.27 9. 2 9.22	1961년 이래 소규모로 실시된 연습을 '독수리연습'으로 명칭하여 최초 실시 제2땅굴 발견 NPT(핵확산 금지조약) 가입 을지훈련(한), 포커스렌즈 훈련(한·미) 통합 전투예비군 편성 제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중앙학도호국단 발대식 거행 민방위대 창설
1976	5.26 6. 7 8.18 9. 6	제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호놀룰루) 제1차 팀스피리트 한·미 연합군사훈련 최초 실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도끼만행 사건' 도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분할경비 실시
1977	2. 1 5.11 7.20 12.20	대잠 헬기(ALT-Ⅲ) 최초 도입 한·미 양국, 주한미군 감축문제 협의 개시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제21대 국방부장관(노재현) 취임
1978	7. 6 7.27 7.28 9.26 10.17 11. 7	한·미간 한국형 전차에 관한 기본양해각서 체결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샌디에고) 한·미 군사위원회 1차회의 개최(샌디에고), 전략지침 1호 시달 ADD, 한국형 지대지 유도탄(백곰) 시험발사 성공 제3땅굴 발견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79	7.20 10.19 10.26 12.12 12.14	카터 미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재검토 천명 제1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10·26사건 발생 12·12사태 발생 제22대 국방부장관(주영복) 취임
1980	1.30 3.14 4. 8 12. 4 12.19	거북선 원형복원 진수식(진해) 한·미 1군단을 한·미 연합야전군사(CFA)로 재편 최초의 국산구축함 울산함 진수식 징병연령 19세로 인하, 군복무기간도 30개월로 단축 예비군교육 훈련대상 연령 조정(35세→33세)
1981	1. 3 4.30 6.19	한·미 정상회담(주한미군 철수계획 백지화 등 14개항의 공동성명 발표) 제1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샌프란시스코) 한·미 기동훈련 실시(동지나해)
1982	1. 1 3.31 5.21 9. 9 11.18	징집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 제1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서울) 제23대 국방부장관(윤성민) 취임 국산전투기 F-5F(제공호) 1호기 출고식 최초 국산 조계함(PCC) 진수
1983	4. 2 4.15 9. 1 10. 9 12. 8	ADD, 국내 최초 잠수정(돌고래) 진수식 제1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소련전투기, 사할린부근에서 KAL기를 격추, 탑승자(269명) 전원 사망 버마 광군시내의 아웅산묘소에서 북한공작원이 장치한 폭탄 폭발, 참배 준비중이던 한국 고위관리 18명 순직 한·미간 155밀리 자주포 공동생산 양해각서 체결
1984	5.10 6.25 8. 4	제1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한·미 연합공지훈련실시 한·미간 WRSA 이외 비축물자 한국 판매 합의각서 체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정
1985	2.15 5. 8 7. 1 8.22 9.21 12. 3 12.31	정부, 미국과 對북한 헬기유출 관련 한·미공동상설회의 개최 제1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공군 자동화방공체계 작전운영 개시 제3차 남북접식자회담 실무대표단 접촉 ADD, 현무 지대지 유도탄 시사회 제10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개최 ADD, 한국형 전투장갑차(K-200) 개발 성공
1986	1. 1 1. 8 4. 3 8.30	방위병 복무기간 연장(14개월→18개월) 및 입영제도를 개별입영으로 개선 제24대 국방부장관(이기백) 취임 제1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국산 기뢰탐색함(MHC) 첫 진수식
1987	3. 1 5. 7 6.25 7.14 9.18 11. 1 11.29	한국국방연구원(KIDA) 설립 제1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 개최(워싱턴) BWC(생물무기 금지협약) 가입 제25대 국방부장관(정호용) 취임 한국형 전차(88전차) 명명식 및 화력시범 해군에 통합됐던 해병대 사령부 재창설 KAL보잉707여객기, 북한공작원(김현희)에 의해 안다만 바다상공에서 폭발·추락
1988	2.26 4.29 6. 8	제26대 국방부장관(오자복) 취임 미 정부, 한국에 걸프지역 비용 분담 요구 시작 한·미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 / 한·미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88	6. 9 12. 5 12.29 12.31	제2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제27대 국방부장관(이상훈) 취임 1967년 최초 발행하다 중단되었던 국방백서 1988판 발간 예비군 재해 및 휴업보상제도 신설
1989	5.24 7.18 7.19 7.22 9.26 12.30	한·스페인 방산협력개념서 교환 한·미간 한국내 방위물자생산에 따른 기술사용 양해각서 체결 제2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육·공군본부 계룡대 이전 현판식 한·이탈리아간 국방장비 등에 관한 정부품질보증 양해각서 체결 특례보증역제도 통·폐합
1990	1. 1 2.15 3. 3 3.24 6.25 7.31 8.31 9. 4 10. 1 10. 8 11.15 12.29	향토예비군 복무연한을 35세에서 33세로 하향 조정 한·미 국방장관회담 제4땅굴 발견(양구 북방) 환태평양훈련에 한국 해군 첫 참가 한·미간 용산 미군기지의 지방이전 합의각서 체결 한·불 국방부간 천마사업 상호지원 협정 체결 러시아 해군함정(애드미럴판텔에프호 외 2척) 최초 방한(부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서울) 합동군제 합동참모본부 창설 제28대 국방부장관(이종구) 취임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걸프전 의료지원단 파견준비 실무협상팀·현지조사단 사우디 파견
1991	1.23 1.25 3.25 7. 1 8.30 9.12 9.19 10. 1 11. 4 11. 8 11.21 12.13 12.18 12.20	걸프사태 관련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JUSMAG-K 설치협정 체결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미군) 한국군과 교체 육군방공포병 공군으로 전군 / 공군방공포사령부 창설 한국전투기사업에 관한 한·미간 양해각서 체결 외국(독일)에서 최초 구입한 잠수함(장보고함) 진수식 155마일 전 휴전선 경비를 한국군이 전담 駐러시아 한국 무관부 설치 한·태 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노태우 대통령, 한국에서의 핵 완전 포기 선언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 한·미간의 전시 지원에 관한 일괄협정(WHNS) 체결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노태우 대통령, 한국내 핵무기 부재 선언 제29대 국방부장관(최세창) 취임
1992	1. 7 1.20 3. 2 3. 4 6.26 8.20 10. 8 10.12	국방부, 팀스피리트 훈련 불실시 발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한·스페인 획득·군수지원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불 방산·군수협력 약정서 체결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주한 미공군, 미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 첫 배치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국산 첫 잠수함(이천) 진수식
1993	2.26 4.23 6.17 7.30	제30대 국방부장관(권영해) 취임 소말리아 PKO 파병부대 '상록수부대' 발대식 해군본부 계룡대 이전 현판식 소말리아에 PKO(공병대대) 파견

1993	9.16 9.22 9.27 10. 8 11. 4 12.22 12.31	한·이태리간 군수지원 및 방위체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한국 해군함정(울산·진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첫 방문 한·영 방산/군수지원 양해각서 체결 NEACD(동북아협력대화) 최초 개최 제2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제31대 국방부장관(이병태) 취임 주중 한국무관부 설치
1994	1. 1 3.18 4.16 4.28 5. 4 5.24 7.25 8.18 9. 6 10. 6 10. 7 10.21 10.23 11.10 12. 1 12.24	예비군 복무제도를 연령제에서 연한제로 개선 시행(동원훈련 기간 및 훈련시간 단축), 방위병 제도 폐지후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 신설 소말리아 PKO(공병대대) 철수 완료 주한 중국 무관부 개설 북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요구 선언 한·독간 국방 및 군사교류 증진에 관한 합의서 체결 한·필 군수·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ARF(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최초 개최 한·미간 전시 미7함대의 연합사 배속 합의 서부 사하라에 PKO(의료지원단) 파견 그루지아에 PKO(군 옵서버) 파견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한반도 위기시 FDO 전개 합의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문 서명 6.25때 포로되었던 조창호 소위 북한 탈출, 중국 거쳐 귀환 인도·파키스탄에 PKO(군 옵서버) 파견 유엔군에게 이양했던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제32대 국방부장관(이양호) 취임
1995	2.28 3. 9 5. 1 5. 5 6.19 8.27 10. 5 10. 9 10.13 11. 3 11.28 12.15 12.29	폴란드, 북한측 철수압력으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철수 KEDO(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발족 한·캐나다간 군사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 체결 한·폴란드간 군사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 체결 압록강연습 최초 실시 한·이스라엘 군사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앙골라에 PKO(공병대대) 파견 한·인니 국방군수 및 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NSG(핵공급그룹) 가입 제2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국산 최초 군용항공기(KT-1) '웅비' 명명식 및 시범 비행 KEDO와 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여자도 사관학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하는 사관학교설치법 부분개정 공포
1996	3.28 4. 4 4.16 4.17 9.18 10. 1 10.18 10.21 11. 1 12.23	호국훈련 최초 실시 북한, DMZ 관리책임 포기 선언 한·미 정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제의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최초 실시 북한 잠수정 및 무장공비 강릉 침투사건 발생 AG(호주그룹) 가입 제33대 국방부장관(김동진) 취임 1996 서울 국제에어쇼 개최 주 베트남 한국 무관부 개설 /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앙골라 PKO(공병대대) 철수 완료
1997	1. 1 1.13 3. 3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 통합방위법 공포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최초 입교

연도	일자	주요사항
1997	4.28	CWC(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
	6.30	국산전투기 KF-16 1호기 출고
	9.24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가입
	10.27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마' 시범사격 성공
	11.17	한·독간 방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1.20	한·러간 군사기술분야 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11.27	한·루간 방산·군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2. 9	4차회담 1차 본회의 개최, 제2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1998	3. 4	제34대 국방부장관(천용택) 취임
	4.15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출범
	6.22	속초,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발생
	6.23	제1차 판문점 장성급회담 개최
	6.30	ADD, 잠수함·정 탐재용 중어뢰 개발 성공
	7. 9	한·미 국방장관회담
	7.15	ADD,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천마) 개발 성공
	8.31	북한 대포동(미사일) 1호 발사
	9.30	ADD, 신형 155mm 자주포 개발 성공
	9.31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10.13	국제관함식 개막
	10.26	1998 서울 국제에어쇼 개최
11.27	한·뉴간 군수협력 약정 체결	
12.18	남해상에 북한 반잠수정 침투사건 발생	
12.31	ADD, 국내 최초 군용항공기(KT-1) 개발 성공	
1999	1. 7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1.17	제3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2. 2	한·영 국방부간 자료교환 및 과학기술자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5.24	제35대 국방부장관(조성태) 취임
	5.26	한·호 국방장관회담
	6.15	서해상에서 남북(해군)간 교전 발생(연평해전)
	7.29	한·미 국방장관회담 개최
	8. 2	한·일 해군간 최초 '평화목적의 수색 및 구조훈련' 실시(8.2~8.9)
	8.23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9. 3	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
	10. 4	동티모르에 PKO 파견
11. 3	제3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워싱턴)	
2000	1. 6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방정신교육원을 통합하여 국방대학교 창설
	1.20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
	3.18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3.23	북한, 서해5도 통항질서 발표
	5.16	한·러 국방장관회담 개최
	5.22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
	6.13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남북정상회담 (6.13~6.15)
	9.21	제3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개최(서울)
	9.25	남북국방장관회담(9.25~9.26, 제주)

역대 국방백서 소개

연도	목 차 구 성	주 요 자 료	비 고
1967	<p>6장으로 구성</p> <p>1장 총설 2장 국제정세 3장 한국 국방상의 제 여건 4장 국방정책 및 시책 5장 각 군 6장 주월 한국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부대훈련 · 국방예산 현황 · 월남전에 대한 국가이익 · 징발보상시행과정 · 군 대민지원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간('67) · 군내부 활용
1968	<p>7장으로 구성</p> <p>1장 총설 2장 국제정세 3장 한국 국방상의 국내적 제 여건 4장 북괴의 침략상과 군사력 개황 및 최근동향 5장 1968 국방기본정책 6장 1968 각 군 세부시책 7장 1970년대 국방정책의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조직 · 국방관계 주요국제협약 개요 · 국방예산 현황 · 파월 군인 재해보상금 정액표 · 군인 봉급표 및 연금기준표 ·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내부 활용 * 1969~1987은 발간 중단
1988	<p>6부로 구성</p> <p>1부 총설 2부 안보환경 3부 국방태세 4부 국방운영 5부 복무 6부 국민생활과 국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군사력 현황 · 주한 미군 경비 지원 내용 · 북한의 병역제도 · 방위성금 접수 및 사용 내역 · 한국 방위산업 발전단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간 · 대 국민 공개 문서의 성격으로 최초 발간 · 시판 시작
1989	<p>14장으로 구성</p> <p>1장 국방정책기조 2장 한반도주변 군사정세 3장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4장 한반도 정전협정체제 5장 군사대비태세 6장 한·미 연합방위태세 7장 남북한 군사력 비교 8장 자주국방력의 건설 9장 국방예산 10장 국방조달 11장 예비전력 12장 인사제도 개선 13장 병무행정 14장 국민편익 국방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군사력 현황 · 군사정전위원회 관련 회의 · 각종 법령정비 현황 · 제21차 SCM 공동성명서 · 한미 방위비 분담 현황(1988) · 북한의 주요 도발 실태 · 국방학술진흥사업 소개 · 한국전쟁기념사업 소개 · 전사편찬위원회 활동 · 대민지원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판 국방백서 발간 (1989~현재) · 단년도 백서로서의 특성 부각

1990	<p style="text-align: center;">5부로 구성</p> <p>1부 총설 2부 안보환경 3부 국방태세 4부 국방운영 5부 국민과 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군사력 현황 · 무기체계획득 절차 · 여군장교 인사제도 개선 · 민원처리 간소화 실적 · 각 군의 주요 활동 · 국군체육부대 활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 '89를 종합하여 백서 기본체계 정립 	
1991	<p style="text-align: center;">6부로 구성</p> <p>1부 총설 2부 국제안보환경 3부 한반도 안보환경 4부 국방태세 5부 국방운영 6부 국민과 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의 군사지표 현황 · 주요국 핵전력 현황 · START/CFE 감축협정 · 걸프전 참가국 지원 현황 · 북한의 대남도발 실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1992 국방 백서로 표기 	
1992	<p style="text-align: center;">5부로 구성</p> <p>1부 총설 2부 안보환경과 군사위협 3부 국방태세 4부 국방관리 5부 국민과 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평화유지활동 연표 · 한·소/한·중 수교 공동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 · 북한의 핵개발 연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1993 국방 백서로 표기 	
1993	<p>5부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핵관련 시설 현황 · 남북한 군사력 현황 · 군사기술의 민간기술 파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1994 국방 백서로 표기 	
1994		<p>1부 총설</p> <p>2부 안보정세 및 위협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륙수부대의 활동성과 · STARTI/II, CFE, NPT, CWC, MTCR, WHNS · 전쟁기념관 건립 · 국방군사연구소 활동 · 사관생도 교육 소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1995 국방 백서로 표기
1995		<p>3부 국방태세</p> <p>4부 국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북 핵 기본합의문 · 한·러 국방부간 군사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 대북 쌀 지원관련 주요일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1996 국방 백서로 표기
1996		<p>5부 국민과 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군사관계 50년 일지 · 대외 군사교류 협력일지 · 일일 프레스 브리핑 현황 · 국방대학원, KIDA, ADD 소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1997 국방 백서로 표기

<p>1997</p>	<p style="text-align: center;">6부로 구성</p> <p>1부 국가목표와 국방목표 2부 안보환경 3부 국방정책 4부 국방태세 5부 국방관리 6부 국민과 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비 분담 및 주한미군 지원 추이 · 국제원자력기구(IAEA) · 강릉지역 대침투작전 · 국방예산 현황 · 주요국 국방비 수준 비교 · 국립현충원 소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1998 국방 백서로 표기
<p>1998</p>	<p style="text-align: center;">5부로 구성</p> <p>1부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안보기구 · 연합 및 합동훈련 현황 · 독도의 역사적 고찰 · 전세계 PKO 활동 현황 · 연도별 국방비 구성 현황 · 국제 방산·협력 관련 협정체결 현황 · 방산물자 수출현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 국방 백서로 표기 · 표지 디자인 변경 (표지 색상을 백 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고, 상징화 된 이미지 삽입)
<p>1999</p>	<p>2부 평화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태세</p> <p>3부 우리 국방의 현황과 과제</p> <p>4부 21세기를 대비한 국방개혁</p> <p>5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연평해전 · 1998 세계 분쟁 현황 · 세계 주요국 군사력 현황 · 전구미사일방어(TMD) 체계 · 세계 주요국의 군사혁신 · 세계 무기 수·출입 현황 ·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계획 · 남북 경제지표/군사력 비교 · 북한의 미사일 개발·생산 · 판문점 장성급회담 일지 · 국방연구개발 투자비 현황 · 병무행정의 혁신 · 국회 국방위원회 소개 · 1998 범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 국방연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 국방 백서로 표기 · 정보공개수준 확 대(주요무기 전력 화계획 등) · BOX(코소보 사 태, 북한의 화생전 능력, NLL 등) 기사로 내용 상세 소개

2000년 11월 20일 인쇄
2000년 12월 1일 발행

국 방 백 서

편찬 : 정책기획국(기본정책과)
발행 : 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주)
(02)2273-8111

인터넷 주소 : www.mnd.go.kr
문의처 : (02)748-6227